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위기 이후 지속성장 전략과 과제 -

2010. 12



연구총서 10-02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위기 이후 지속성장 전략과 과제 -

2010. 12

목 차

[발간사]

[Executive Summary]

i

I. 성장잠재력 하락과 원인

1

- 1. 성장잠재력 하락 추이와 전망 3
- 2. 성장잠재력 하락의 원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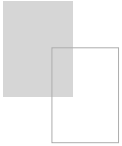
II. 성장잠재력 제고의 기본 방향

23

III.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

31

- 1. 인적 자본 확충 33
 - 1) 교육서비스 세계화 33
 - 2) 여성경제활동 제고 46
- 2. 新성장동력 육성 59
 - 1) 서비스수지 개선 59
 - 2)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71
- 3. 미래투자 확대 83
 -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83
 -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97
 - 3) 서민금융 경쟁력 강화 112
- 4. 경제시스템 혁신 124
 - 1) 총요소생산성 제고 124
 - 2) 사회적 자본의 확충 165
 - 3) 남북 상생구조의 구축 194



발 간 사

우리 경제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침체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여파로 2009년 세계경제는 뒷걸음질쳤으며, 우리 경제는 0.2%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큰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GDP) 규모와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도 후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업률 증가에 따라 노동투입도 감소하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도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경제는 2010년 상반기 이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공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기 이후에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야 2020년 4만 달러 이상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은 한국경제가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본 궤도에 올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2만 달러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10년'처럼 허송세월 하고 말 것이냐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잠재성장률 2%p 제고 방안',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고민했으며, 그 결과물을 연구총서로 묶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4%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평가되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주현

[Executive Summary]

I. 성장잠재력 하락과 원인

1. 성장잠재력 하락 추이와 전망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폭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70년대 초반 10%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8~9%대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로 4%대 후반까지 하락하였다. IT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잠시 반등했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국내 주요기관들도 2011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성장잠재력 하락의 8대 원인

위와 같은 성장잠재력 하락의 원인은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투입의 감소와 인력 활용이 미흡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 둔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와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들도 심화되고 있다. 둘째, 취약한 대학교육과 기업의 훈련시스템으로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인적 자본의 형성이 취약하다. 셋째, 자본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었다. 기업의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970년대 평균 14.9%에서 2006~2009년 1.4%로 떨어졌다. 넷째,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이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도 2000년 66.1%에서 2007년 44.6%로 하락했다. 다섯째, 내·외수 단절 심화와 선순환 구조의 약화이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더디게 하여 수출이 내수와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켰다. 여섯째,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도 약화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빈번한 단기 투자자금 유출입도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일곱째,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이다. 90년대 이후 연구개발비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낮아지고 대기업과 일부산업 분야로의 쏠림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낮은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의 위축, 계층·기업·지역간 양극화, 남·북한간 갈등이 고착화되는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I. 성장잠재력 제고의 기본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하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자본의 확충이다.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혁신 등 인적 자본의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新성장동력의 육성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료-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부품·소재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 서민금융의 경쟁력 강화, 금융의 산업지원기능 복원 등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다. 이를 위해 중요소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Ⅲ.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

1. 인적 자본 확충

1) 교육서비스 세계화

세계 유학시장의 공급측 요인은 크게 4가지다. 해외에서의 교육기회는 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다. 영어가 주요 전달 수단이며,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부상이 눈에 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측 요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해외에서 교육기회를 찾는 수요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거의 모든 선진지역에 가장 많은 해외유학생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학시장의 공급측 요인을 보면, 한국학생들에 대한 영어권국가들의 교육기회제공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체 유학생들의 27.5%가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요측 요인을 보면, 중국학생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중국학생들의 비중이 70.5%로 나타났다. 학문적인 이유보다는 연수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이며, 최근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자하는 다른 나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는 5가지다. 첫째, 영어를 사용하면서 저렴하게 그리고 최고의 수준으로 실용학문(경영학, 공학 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 또는 유치해야 한다. 둘째, '흡입효과(pull factor)'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고등교육의 장점을 개발도상국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화, 학문화할 경우 훌륭한 '흡입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해외 학생들에게 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서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2) 여성 경제활동 제고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09년 53.9%로 독일 등 보수주의 중부유럽 국가의 30년 전 수준이며, OECD 평균인 61.5%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둘째,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00년 23.7%p에서 '09년 22.4%p로 10년 동안 약 1.3%p 감소하는데 그쳤다. 셋째,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M자형 커브로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30~40대에 최저점으로 하락한다. 넷째, 출산·육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여성의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은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30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로 파트타임 고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여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성이 높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줌으로써 여성 고용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2단계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켜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향성 하에서 여성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의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에서 정착시키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 완화와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강화해야 한다.

2. 新성장동력 육성

1) 서비스 수지 개선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지급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8월 누적 서비스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37.7% 증가한 1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2010년 1분기 서비스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6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서비스 적자 확대는 주로 5대 분야(운항항만경비,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 전문서비스, 중개무역, 유학연수)에서 발생한다. 2010년 상반기 5대 분야의 적자(144.5억 달러)가 서비스 적자(102.1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이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시사점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독일과 같이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종합상사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개무역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중개 무역의 거점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독일이 지식집약서비스에 대한 수출 지원을 한 것과 같이 전문서비스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분류하고 국내 전문서비스 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때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문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서비스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일본과 같이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고, 해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항만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항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해운 수요가 증가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항만 개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2)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국제 수직적 분업이 확산되면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성장잠재력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는 2000년 93억달러에서 2009년 512억달러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재 산업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 전체와 부품 산업에 비해 취약하다. 둘째, 소재 산업의 높은 수입유발효과로 수출의 외화가득력이 미약하다. 셋째, 국산 소재의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넷째, 소재 산업은 하이테크 제품 경쟁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소재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06년 기준 부품 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약 15조원이며 R&D집약도(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는 4.0848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소재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약 2조원으로 R&D집약도는 0.6577에 불과하였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20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부품·소재 발전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 중시로 부품 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재 산업에 대해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소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고위험-고수익 업종인 소재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수요 기업과 소재 생산 기업 간의 공동 연구 유도 등을 통해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3. 미래투자 확대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우리나라 1등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한국의 산업별 1등기업은 미국, EU, 일본의 1등기업에 비해 혁신능력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산업에서 한국1등기업은 세계1등기업을 3년 내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는 추격이 정체되어 있다. 자동차산업 및 중공업(조선산업 포함)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으며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자정보통신분야 한국1등기업(삼성전자)의 2008년 R&D 투자규모는 미국1등기업(Microsoft)의 3/5 수준, EU1등기업(Nokia)의 3/4 수준이고,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매출액 대비 R&D)는 5.75%로 Microsoft의 15.42%, Nokia의 10.49%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분야 한국1등기업(현대자동차)의 R&D 투자규모는 일본1등기업(Toyota)의 1/6 수준, 미국1등기업(GM)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분야 한국1등기업(POSCO)은 적극적인 R&D 투자 전략으로 EU1등기업(Arcelor-Mittal)의 R&D 투자규모를 넘어섰고, 일본1등기업(Nippon Steel)과의 격차를 좁혀 3년 내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공업분야 한국1등기업(현대중공업)의 R&D 투자규모는 미국1등기업(Volvo)의 1/15 수준, EU1등기업(Caterpillar)의 1/12 수준에 불과하고, 현대중공업처럼 조선업에서 시작한 일본1등기업(Mitsubishi 중공업)에 비해서도 1/9 수준에 불과하다. R&D 집중도도 업계 평균인 2.68%보다 현저하게 낮은 0.64% 수준이다.

세계 1등국가 추격을 위한 기업측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산업별 한국1등기업

들은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공격적인 R&D 전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R&D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을 중시하는 혁신문화를 형성하며, 근로자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측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현재 대기업·중견기업에 적용되는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비율이 3~5% 수준인데, 이를 선진국 수준인 10~1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세계1등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세액공제 이외에도 정부R&D투자, R&D 인프라 구축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정책을 민간과 함께 수립, 시행해야 한다.

2) 외국인투자 활성화

먼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152.5억 달러→114.8억 달러)에 있다. FDI의 산업별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 유입되는 FDI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32.4%까지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6.1%에 달했다. 셋째,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화학, 운송용기계 등 3개 분야 비중이 전체의 68.1%에 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이 35.6%,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10.2%, 11.5%로 높은 비중이다. 넷째, 최근 10년간 영국 캐나다 중국 등 신흥투자국들의 비중은 커지고,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활용한 FDI의 비중도 '90년대 평균 0.6%에서 최근 10년 평균 1.5%로 2.5배 급증했다.

외국인투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률, IT인프라 등으로 평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잠재력은 세계 1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유치 성과는 2000년 92위에서 2008년 123위로 크게 떨어져 여전히 '잠재력 이하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1년 2,956억원에서 2007년 4,75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투자유치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2004년부터 2010년3월까지 유치된 FDI는 전체 FDI의 3.3%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FDI 유치금액의 감소추세에는 변화가 없다.

외국인투자의 활성화에 앞서 한국형 FDI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동차, 정보통신과 같은 제조업이 강하고, 국민소득 1만7천 달러의 중진국으로서, 지금 당장 서비스업-M&A형-중액투자 등 선진국형 FDI 모델로 전환하기 보다는 제조업-그린필드형-신규투자를 중시하는 한국형 FDI 모델이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점차 줄여나가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금지원제도를 늘려나가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점차 줄이면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등 FDI

관련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화점식·저인망식 투자유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병원과 학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3) 서민금융 경쟁력 강화

금융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홀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동안 고신용자의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6~10등급)의 잔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서민금융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미흡이다. 둘째, 높은 연체율이다. 셋째, 서민금융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능력의 미흡이다. 넷째, 서민금융기관의 높은 대출금리와 이에 따른 기피 현상이다.

서민금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 바,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둘째,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민금융의 역할 증대를 위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취약한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인 서민금융 접근과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각 금융권별 중앙회를 통하여 통합형 CB(Credit Bureau)를 설립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신용리스크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서민에게 높은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일정 기간의 가산금리 평균을 감안하도록 제도에 반영하고, 서민금융기관 이용시 소비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경제시스템 혁신

1) 총요소생산성 제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80년대 전반 6.3%p에서 2000년대에는 1.5%p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한국과 선진국간 노동, 자본, TFP의 생산투입요소들의 성장 기여도를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소산업의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를 비교해 보면, 첫째, 2000년대 한국 경제의 노동 투입에 대한 의존도는 80년대 수준으로 여전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형 경제 성장 구조를 지속중이다. 둘째, 반면 최근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본 투입의 기여 정도는 현재 선진국 수준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한국과 비슷했던 선진국의 8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셋째, 독일과 일본의 경제 성장에 대한 TFP(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의 주력 산업인 중화학공업의 경우 산업의 효율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아 여전히 물량투입 의존적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를 비교해 보면, 독일, 일본,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노동투입의 성장 기여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며, 특히 공공부문 서비스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효율성 증대의 핵심인 기술 수준의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부문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조-서비스업간 연계상품 개발,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효율성 이동의 통로(conduit)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산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2) 사회적 자본의 확충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세계118개국 중 26위, OECD국가 평균의 1/3 크기에 불과하며, 사회통합지수는 OECD 회원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1)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제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행동규범의 통합적 표준화, (2)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우수 기업을 선별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회책임투자(SRI) 및 관련 펀드의 활성화, (3)사회책임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정보 공개의 요구 등이 그것이다.

‘ISO 26000(SR)’의 7대 원칙은 ①설명 책임, ②투명성, ③윤리적 행동, ④이해관계자 존중, ⑤법규 존중, ⑥국제행동규범 존중, ⑦인권 존중이며, 7가지 핵심주체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등이다.

‘ISO 26000(SR)’을 도입하는 기업은 2020년까지 국내 3만개, 세계적으로 100만개에 달할 것이며,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인증, 보고서 작성 및 검정 등 관련 서비스업의 규모도 2020년까지 국내에서 약7천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오고 있

는 유럽 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져있다. 'ISO 26000(SR)'은 우리의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2010년 말 도입될 예정이므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國格 향상의 계기로 삼아, 지식경제부와 새로 출범하는 사회통합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추진 전략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사회통합위원회의 중장기 핵심과제로 설정하며, 둘째, 지식경제부 내에 가칭 '사회책임지식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셋째, 사회책임에 관한 캠페인과 교육을 사회통합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경제단체 등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3) 남북 상생구조의 구축

분단국의 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긴장완화 성공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과 대만은 1980년대 초반부터 접경지역 특구 개발이 진행되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국 : 광동성 경제특구조례, 대만 : 리도 건설조례)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다.

동서독은 1972년 접경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서독간 경계선 획정 뿐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 환경오염, 도로망 연결 등을 논의했으며,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 이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예멘의 사례를 보면,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접경 지역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공동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국의 회사들과 다국적 조합을 구성해 석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접경지역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축을 위해서는 권역별 특징을 살린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간의 계획들을 조정하고, 남북간 협력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기초한 남북간 접경지역 관리위원회와 같은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개성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천지역에 접경지역 특구를 개발하여 중국·대만과 같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강원권을 중심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지구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 단지 개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경기권을 중심으로 녹색에너지 단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I. 성장잠재력 하락과 원인

1. 성장잠재력 하락 추이와 전망
2. 성장잠재력 하락의 원인

I. 성장잠재력 하락과 원인

1. 성장잠재력 하락 추이와 전망

○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¹⁾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폭이 더욱 크게 확대됨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80년대 고성장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81~85년까지 평균 3.3% 성장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나, 90년대 중후반기에 IT 산업의 성장으로 1996~2000년까지 평균 4.3%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0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음
 - 일본, 독일, 영국 등도 80년대 비교적 높은 성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6~2010년에는 평균 0%대로 떨어짐
 -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80~90년대 평균 9~10%대의 고성장에서 90년대 7~5%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 중반까지 4.5%, 후반기에는 평균 3.5%로 하락
-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국,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더욱 크게 저하됨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0.4%(전기대비 연율)에서 2009년 -2.6%로 떨어졌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지역의 2009년 경제성장률도 -4.9%로 크게 하락
 - 반면, 한국은 기초효과와 수출 감소폭 축소 등으로 2009년 연간성장률이 0.2%로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2010년 들어서도 전년동기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음

<주요국의 기간별 경제성장률 평균 추이>

(%)

	'81~'85	'86~'90	'91~'95	'96~'00	2001~'05	2006~'10
미 국	3.3	3.2	2.5	4.3	2.4	1.2
일 본	3.1	4.8	1.5	1.0	1.3	0.0
독 일	1.2	3.5	2.2	2.0	0.6	0.6
영 국	2.1	3.3	1.7	3.4	2.5	0.5
한 국	9.0	10.4	7.9	5.4	4.5	3.5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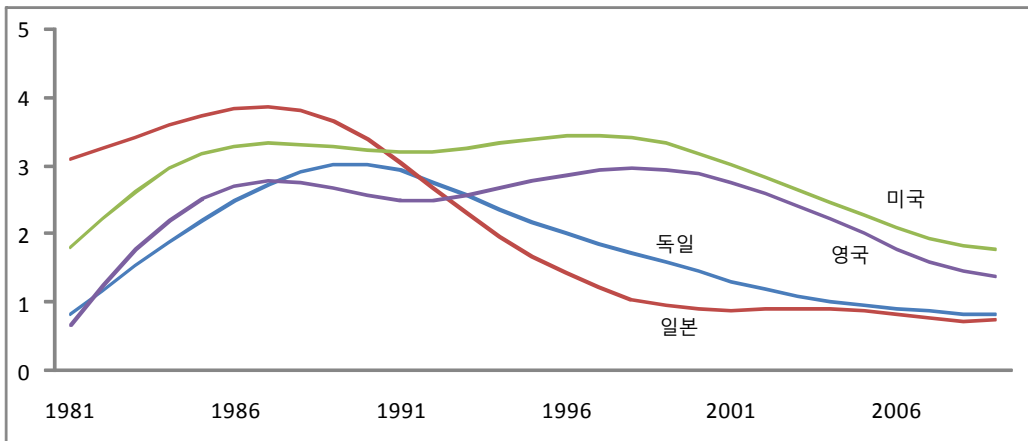
주: 1) 2010년은 IMF의 각국 성장률 전망치임.

1) 잠재성장(Potential GDP)이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 자본 및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 GDP수준으로 정의되는데 이 때,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차이인 총수요결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잠재GDP는 총수요와 총공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도 199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
 -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중반부터 01년까지 3%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2000년대 들어 2%대로 하락하였고 금융위기로 1%대로 떨어짐
 - 독일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2~3%대를 보였으나 이후 1%대로 낮아졌고 2005년 이후에는 0%대로 떨어짐. 일본도 90년대 초반까지 2~3%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0%대로 하락

<주요국의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요국의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²⁾으로 추정된 자료임.

- 특히,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 이후에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OECD가 2009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까지 미국과 영국의 잠재성장률은 2.4%와 2.2%였고, 일본과 독일은 1.0%와 1.2%를 기록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2010년 미국과 영국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1.5%와 1.3%로 하락하였고 일본과 독일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짐

2) Hodrick-Prescott (HP) 필터링 방식은 변수를 매우 부드럽게 추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자주 사용됨.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실질GDP를 y 라고 하면 HP 필터에 의해서 추정되는 y 의 추세치 y^* 는 최소화된 시계열값($Min \sum (y_t - y^*_t)^2 + \zeta (\Delta \Delta y^*_t)^2$)으로 정의되며 이때 전반부를 최소화시키면 추세선이 실제 시계열과 근접하게 되고, 후반부를 최소화시키면 추세선 변화율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추세선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게 됨.

· 한편, 2010년 5월 발표한 자료에서 추정된 2012~2025년까지의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치도 미국 2.3%, 일본 0.9%, 영국 1.8%, 독일 1.3%로 금융위기 이전 2006~2008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잠재성장률 변화>

	2009년 6월 추정치			2010년 5월 추정치	
	2006~2008	2009~2010	2011~2017	2010~2011	2012~2025
OECD 평균	2.1	1.4	1.7	1.2	1.9
미국	2.4	1.5	2.0	1.4	2.3
일본	1.0	0.6	0.8	0.8	0.9
독일	1.2	0.8	1.1	1.2	1.3
영국	2.2	1.3	1.7	1.2	1.8
한국	-	-	-	4.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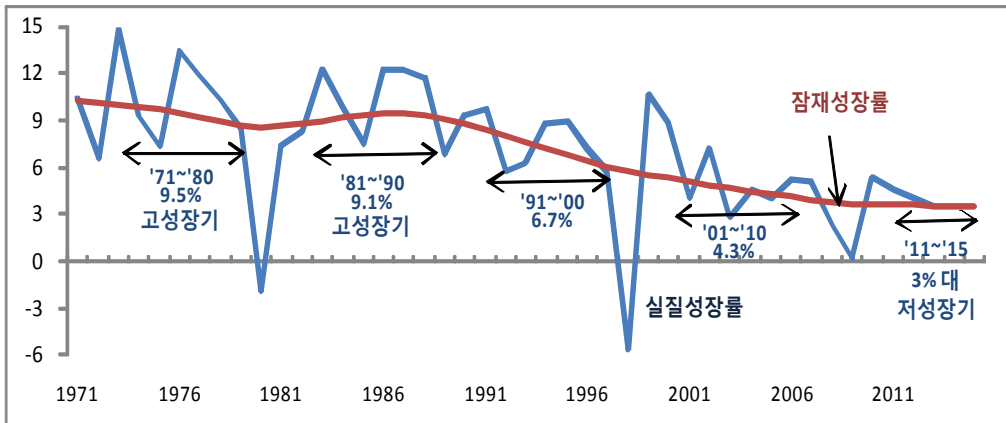
자료: OECD, 2009년 6월, 2010년 5월.

○ 국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0년 이후 3% 중반에 머물 전망

- 국내 잠재성장률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70년대 초반 10%대에서 7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 까지 8~9%대를 유지하였고 1998년 IMF 외환위기로 4% 후반까지 하락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IT 산업의 성장세로 5% 중후반까지 재상승
- 그러나, 2004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0년대에는 지속적인 잠재GDP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GDP가 이보다 더 낮아 지는 모습을 보이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 1980년대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0.7%p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에도 실질성장률이 이보다 0.2%p 더 낮게 나타남

6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국내 실질 및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

2) ↔는 잠재성장률의 구간 평균치임.

- 국내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4%로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3%대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한 국내 평균 잠재성장률이 80년대 7.8%에서 2004~08년 중에는 4.1%로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평균 3.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80년대와 90년대 각각 평균 8.6%와 6.3%에서 2000년대 초반 4.4%로 떨어졌으나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4.9%로 상승하고 2011~2020년에는 4.3%대로 재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의 국내 잠재성장률 최근 추정치>

현대경제 연구원	연도	'71~'80	'81~'90	'91~'00	'01~'10	'11~'15
	추정치		9.5	9.1	6.7	4.3
NABO	연도	'81~'90	'91~'00	'01~'08	'04~'08	'09~'13
	추정치		7.8	6.0	4.2	4.1
한국은행 KDI	연도	'82~'90	'91~'00	'01~'05	'06~'10	'11~'20
	추정치		8.6	6.3	4.4	4.9
대한상의	연도	'86~'90	'91~'00	'96~'00	'01~05	'06~'09
	추정치		10.1	7.5	5.4	5.1

자료: 기관별 발표 자료 참조.

2. 성장잠재력 하락의 원인

○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의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생산함수 모형에서 자본·노동과 같은 요소투입의 변화와 경제시스템, 연구개발(R&D),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을 활용,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GDP(Y_t)는 총요소생산성(A_t), 노동투입(L_t), 자본 투입(K_t)의 함수로 정의

$$* Y_t = A_t L_t^\alpha K_t^{1-\alpha} \text{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 노동투입은 노동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인적 자본)을 고려하고, 자본 투입은 총고정자본형성과 투자자금 유입 등 자본스톡의 증감을 고려
- 총요소생산성은 산업간 생산유발효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금융의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등 경제시스템, 연구개발의 효율성, 사회적 자본 등의 3가지 하 부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생산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 단계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이전³⁾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잠재성장률의 구성요소와 하락 원인>

잠재성장률 구성요소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도 미흡
		人的 자본	- 취약한 대학교육 및 훈련시스템
	자본		- 자본수익률 하락과 국내투자 위축
총요소 생산성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등)		-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 내·외수 단절과 산업연관효과 하락 -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쓸림현상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 구조 고착화

3) 한상곤('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08.1)과 임희정('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8.3)의 연구를 참조.

(1)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도 미흡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청년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 투입이 감소되고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
 -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1.15명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성장률도 '70년의 전년대비 2.21% 성장에서 2009년 0.29%로 하락
 - 반면, 고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09년 63.5로 8.8배나 상승
 -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5년 61.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9년 60.8% 기록했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73%에서 2030년 64%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노동투입 감소에도 청년·여성 고용률 하락 등 취업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는 심화
 - 20~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2000년 60.1%에서 2009년 58.2%로 2.0%p 낮아졌고, 실업률은 2000년 이후 7%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여성고용율도 2007년 48.9%에서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2009년 47.7%로 1.1%p 하락

<인구구조 변화 통계 추이>

(단위: 명, %)

	1970	1980	1990	2000	2005	2007	2008	2009p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21	0.33	0.31	0.29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08	1.25	1.19	1.15
생산가능인구 비중	54.4	62.2	69.3	71.7	71.7	72.0	72.3	72.6
고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3	55.1	59.3	63.5
경제활동참가율	57.6	55.9	60.0	61.2	61.9	61.8	61.5	60.8
청년고용률	-	-	-	60.1	61.2	60.0	59.1	58.2
여성고용률	38.2	41.3	46.2	47.0	48.4	48.9	48.7	47.7

자료: 통계청.

-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 중 15~64세의 인구비중임.
- 3. 고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x100.
- 4. 청년고용률은 20~29세의 고용률로 한정하고,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 (생산성 저하) 고임금, 고비용 구조에 따라 노동비용은 상승하였으나 노동생산성 저하는 고착화되고 있어, 노동투입의 증가에 따른 성장이 한계에 도달
- OECD에 따르면, 상대적 단위노동비용(Relative Unit Labor Costs) 지수(2005=100)도 2005년 100에서 2009년말 66.1로 떨어지면서 실질실효 가치가 크게 하락
- 반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2005년 기준)는 2006년 전년대비 8.0% 상승하였으나 점차 낮아져 2008년 말에는 3.3% 상승에 그침

(2)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못 미치는 취약한 교육훈련시스템

- (인적자본의 성장기여도 증가) 양적인 노동투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 비해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커지고 있음
- 인적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제조업에서는 '91~'97년중 6.5%에서 2000~2005년중 10.8%로 높아졌으며, 서비스업에서도 각각 4.6%에서 17.1%로 상승함⁴⁾
- 인적자본의 산업별 축적 추이를 보면,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서 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산업별 인적자본지수 추이> (%)

	1985	1990	1995	2000	2005
농림어업	100.0	98.2	98.4	101.0	102.8
광업	100.0	101.7	110.4	123.7	96.5
제조업	100.0	102.1	108.8	112.1	119.3
전기가스수도	100.0	104.2	105.8	111.7	126.2
건설	100.0	99.1	100.4	102.4	103.5
도소매·음식숙박	100.0	108.8	114.9	118.2	122.0
운수창고통신	100.0	100.6	100.7	104.0	104.9
금융보험·부동산	100.0	102.3	108.7	116.5	120.9
행정교육사회기타	100.0	105.9	108.0	109.3	111.9

자료: 최요철·김은영(2007), 조사통계월보 2007년2월호, 한국은행

4) 최요철·김은영, '산업별 인적자본의 추계와 성장요인 분석', 조사통계월보 2007년2월호, 한국은행.

10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대학교육의 경쟁력 저조) 높은 대졸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여전히 저조함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졸자 비율은 2007년 25-34세 인구 중 56.0%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조사에서는 총58개국 가운데 46위에 그침

<대졸 인구비율 및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대졸 비율	싱가폴 58.7%	한국 56.0%	캐나다 55.0%	일본 54.0%	대만 53.0%	독일(34위) 23.0%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싱가폴 8.26	아이슬란드 8.04	스위스 7.95	핀란드 7.73	캐나다 7.66	한국(46위) 4.28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주: 대졸비율은 25세-34세 인구 중 대졸자의 비중. 수요충족도는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미국 10위, 독일 17위, 대만 20위, 일본 36위를 기록.

- (기업 교육훈련비 하락) 2000년대 들어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의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1.6%에서 '97년 1.9%까지 올라갔으나, 2000년 이후 하락하여 2009년 0.6%까지 떨어짐

· 특히,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직업훈련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

(%)

연도	1991	1993	1995	1997	2000	2003	2006	2009
비중	1.6	1.8	1.5	1.9	1.4	1.5	0.9	0.6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各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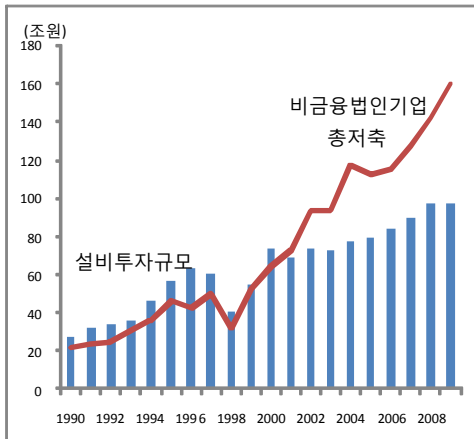
주: 교육훈련비/노동비용

(3) 국내투자 위축과 자본수익률 하락

○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자금 확대 등으로 국내투자는 정체

- (국내투자 위축과 자본수익률 하락)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국내 투자가 축소
- 2001년 이후 설비투자는 오랫동안 정체된 반면, 비금융법인기업의 총저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72조원에서 2009년 160조원으로 2.2배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970년대 평균 14.9%에서 80년대 12.8%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에는 하락폭이 확대되며 2006~2009년 평균 증가율이 1.4%로 떨어짐
-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평균 20%에서 2000년대 이후 평균 1%대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자본수익률이 명목기준으로 1990년대 10%에서 2000년 들어 7~8%로 떨어졌기 때문⁵⁾으로 판단됨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와 총저축 추이>



자료: 한국은행.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71~ '80	'81~ 90	'91~ 00	'01~ 05	'06~ 09
총고정 자본 형성	14.9	12.8	5.5	3.2	1.4
설비 투자	20.3	12.6	9.1	1.3	1.9
건설 투자	11.3	12.9	3.4	4.4	0.9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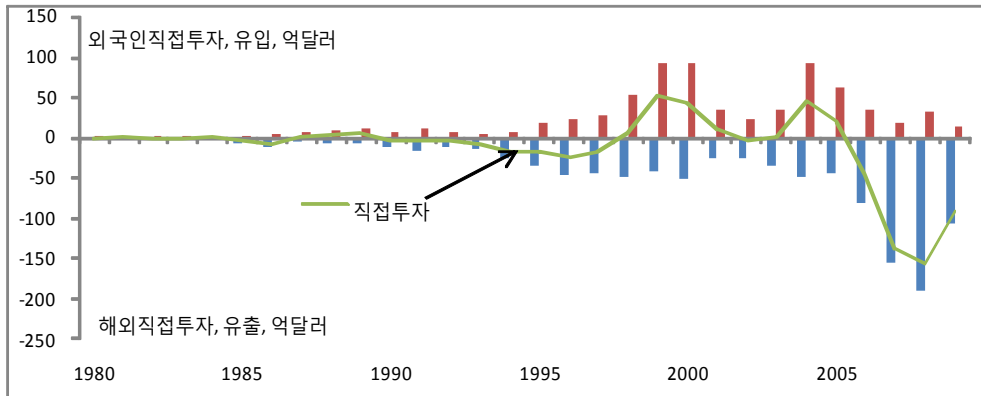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 자금 큰 폭으로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유출되는 투자자금은 크게 증가
- 직접투자수지는 IMF와 카드사태 시기에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액 급증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5)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실물자본 수익률 추정과 시사점' 서원석 외, 2007.2.

12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1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감소
-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IMF 이후와 카드 사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저축률 하락으로 투자재원도 감소) 저축률 하락에 따라 국내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고 자본축적을 위축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1980년대 후반 이후 총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
-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개인 순저축률도 1996~2000년 기간 중 평균 15.5%로 전기대비 5.9%p 감소하였고, 2006~2009년 기간 중에는 평균 3.3%로 급락하여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음을 보여줌

<총저축률과 개인부문의 순저축률 평균 추이>

(%)

	'75~'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09
총저축률	27.5	28.2	37.8	36.9	34.7	31.9	30.5
개인 순저축률	10.2	11.8	22.4	21.4	15.5	5.0	3.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개인 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의 비율이며,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순처분 가능소득)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 구입(최종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비율을 의미함.

(4)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에도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여전히 낮고 취업유발 계수도 크게 감소

- (서비스업 비중은 지속 증가)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 1990년 이후 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30.3%에서 2007년 40.4%로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의 비중은 축소됨

<산업별 총생산 비중 추이> (%)

	1990	1995	2000	2005	2007
농림어업	5.1	3.8	2.8	2.1	1.8
광업	0.5	0.4	0.2	0.2	0.1
제조업	49.6	47.6	46.0	46.3	46.5
전력기스 및 건설	12.2	11.6	9.4	9.5	9.3
서비스업	30.3	34.1	39.4	40.0	40.4
기타	2.3	2.5	2.2	2.0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 (서비스업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협소) 국내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⁶⁾
 - 2007년 국내 서비스업의 명목가치는 약 5,800억 달러로 주요 선진국들 평균의 19%에 불과
 -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내수 시장/GDP 비중도 한국은 2007년 기준 55%로 주요 7개국 평균 63% 보다 낮은 수준임
 - 주요국의 서비스 내수 시장/GDP 비중은 미국 69%, 일본 72%, 프랑스 69%, 독일 63%, 이탈리아 63%, 스페인 59%, 영국 65% 임
-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거의 정체 상태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에서 2007년까지 63.9%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동기간 10.5% 증가로 거의 정체 상태

6)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 원인과 시사점', 2010.6.

14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특히,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90년 G7 평균의 38% 수준에서 2007년에 70%로 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G7평균의 57% 수준에서 42%로 하락⁷⁾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 달러,%)

	전산업	제조업(A)	서비스업(B)	B/A
2000	25,235	31,726	20,964	66.1
2005	29,099	43,681	22,194	50.8
2007	31,365	52,004	23,181	44.6
2000~07 평균	28,056	40,233	22,004	54.7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2009.

- (취업유발효과는 하락) 1995년까지 지속 하락하던 생산유발계수⁸⁾는 제조업 전 업종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전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 서비스의 생산성 저하와 제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로 취업유발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 자동차가 1980년 10억원당 131.2명에서 2005년 11.07명으로 반도체가 동기간 173.24명에서 7.43명, 도소매업도 316.8명에서 30.12명으로 급락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5
자동차	131.2	72.18	45.11	23.69	14.65	11.7	11.07
컴퓨터	131.85	59.43	46.22	25.42	9.46	7.04	7.47
철강	67.64	43.49	29.61	14.58	7.34	6.89	4.31
반도체·전자부품	173.24	85.38	46.61	15.14	7.42	7.8	7.43
도·소매	316.76	189.49	100.78	61.74	46.08	39.68	30.12
금융·보험	171.87	89.87	51.03	35.3	15.61	11.77	10.45

자료: 한국은행

7)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경제의 원인과 시사점', 2010.6.

8)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1985년 2.021에서 1995년 1.946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7년 2.073을 기록.

(5) 내·외수 단절 심화로 선순환 구조 약화

- (수출입 규모 확대로 대외의존도 지속 상승)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아 GDP대비 수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외의존도가 확대
- 내수와 수출 비중이 1970년 각각 89.4%와 10.6%에서 '97년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내수 65.9%, 수출 34.1%로 내수가 크게 위축됨
-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49.9%에서 IMF 외환 위기 이후 내수시장 위축으로 50~60%대로 높아졌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92.1%에 달하였으나 2009년말 82.4%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요국⁹⁾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내·외수 비중과 무역의존도 추이>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시장별	내수	89.4	77.6	78.4	77.9	71.6	71.3	65.9
	수출	10.6	22.4	21.6	22.1	28.4	28.7	34.1
무역의존도		-	-	49.9	49.0	62.4	64.6	82.4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내·외수 단절 심화와 부품·소재 산업의 높은 대일 의존도 지속) 높은 대외 의존도가 내수와 투자를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1990년 대비 2009년도 수출은 10배 늘어났으나, 내수는 5.3배 증가에 그쳤고, 특히 수출의 성장기여도¹⁰⁾가 크게 높아짐
- 과거에는 수출 호조가 투자·고용증가와 소비로 연결되었으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기업들이 고용감축, 임금억제,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구조조정으로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약화됨¹¹⁾

9) 2008년말 기준으로 유럽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무역의존도는 74.8%이며, 중국 58.0%, 일본 29.6%, 미국 23.5% 기록함.

10)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소비와 투자 보다 높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2000~2004년 평균 0.8%p에서 2005~2009년 평균 1.3%p로 확대됨.

11) 수출-내수 간 연계약화로 독일은 1991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수출은 2.4배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19% 증가에 그쳤고, 일본도 2002년 경기회복세 이후 수출은 51% 증가한 반면 내수는 4%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내수-서비스 부문의 저생산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재정 건전화에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기인함. 한국은행, '수출-내수 간 연계 약화- 독일·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외, 2007.1.

16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2009년 대일 무역적자 277억 달러 중 부품·소재¹²⁾ 부문만 20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상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 특히, 높은 對중국 의존도는 중국 경기 변동이 국내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쳐 국내 성장률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전체 무역흑자의 80% 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2009년 중국 무역의존도는 20.5%로 일본과 미국을 합한 20.1% 보다 높음
- 아울러, 대외거래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 개방성(Openness)에 대한 국가 비교에서는 여전히 하위를 기록
- IMD에 따르면, 2010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23위로 2006년 32위에서 9계단 상승하였으나, 이민법 56위, 관세율 53위, 보호주의 49위로 개방성 관련 제도의 경쟁력이 크게 낮음

<대외 개방도 측정요인별 순위>

	전체 순위	이민법	관세율	보호주의	외국인투자 자금(%/GDP)
뉴질랜드	20	17	3	5	50
아일랜드	21	1	11	3	29
영국	22	3	11	30	25
한국	23	56	53	49	52
프랑스	24	16	11	45	23
벨기에	25	6	11	33	2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6)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

- (금융 부문의 낮은 경쟁력) 국내금융은 선진국 대비 자금중개기능 약화, 은행 쏠림현상, 낮은 세계화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낮음

12)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흑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6년부터는 전산업 무역흑자 규모를 추월하였는데, 전체 부품·소재 수출입 중 중국의 비중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2배 이상 확대된 반면, 대일의존도는 적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비중은 점차 완화됨.

<부품소재 대중 대일 무역수지 추이(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일무역적자	▽105	▽118	▽139	▽161	▽161	▽156	▽187	▽209	▽201
대중무역흑자	41	54	106	159	200	198	190	135	337

자료: 지식경제부.

- 2000~2008년 민간부문의 자금조달비중은 대출이 85%를 차지하는 반면 회사채 발행(5%), 주식발행(10%)은 15%에 불과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상위 3사 은행의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CR3가 2007년 기준 한국은 0.53으로 미국 0.34, 일본 0.46에 비해 높음
 - 국내은행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Trans National Index)*지수¹³⁾는 4.3%인데 미국 24.7%, 독일 42.7%, 영국 40.3%로 주요 선진국의 1/10 수준에 불과
 - IMD의 따르면, 국내 금융부문경쟁력은 2006년 37위, 2010년 38위로 여전히 낮음
- * TNI지수=(해외자산/총자산)+(해외수익/총수익)+(해외인력/총인력)*100/3

- (은행의 산업지원기능 약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위주의 경영과 대기업의 내부자금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는 지속되고 있어 금융-산업 간 지원기능은 약화
- 1999년 예금은행의 대출금 중 산업대출금¹⁴⁾은 68.4%를 차지했으나 이후 가계 위주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도의 산업대출금 비중은 57%로 낮아짐
- 기업의 총자금조달 중 내부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09년말 기준, 30대 기업의 현금유보율은 3,000%를 넘어서 일부 대기업은 자금 수요요인이 낮음
- 반면, 중소기업은 낮은 매출이익률 등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0%대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예금은행의 대출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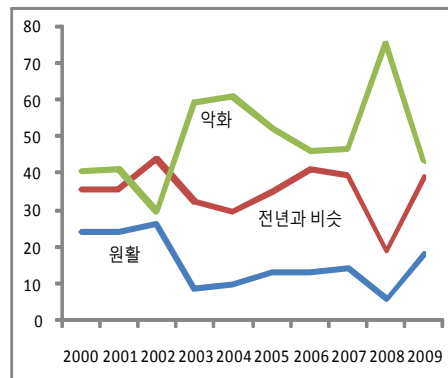
(단위: 조원, %)

	'99	'00	'03	'05	'07	'09
대출금	250.2	310.8	538.3	613.9	803.7	953.5
산업대출	171.1 (68)	201.9 (65)	284.5 (53)	308.4 (50)	440.0 (55)	544.0 (57)
가계대출	79.1 (32)	108.9 (35)	253.8 (47)	305.5 (50)	363.7 (45)	409.5 (43)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총 대출금 대비 비중임.

<중소기업 자금조달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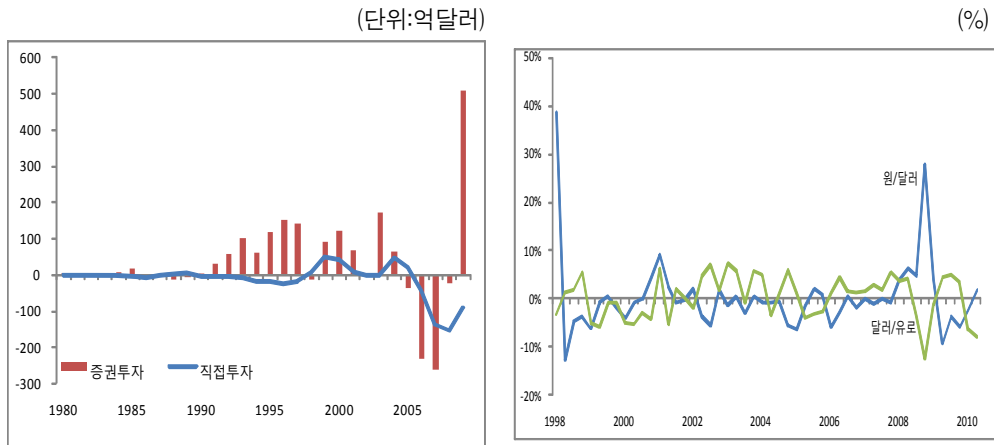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13) 한국금융연구원 외,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 2010.2.

14)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금 중 산업대출금은 717.4조원으로 56.4%, 가계대출금은 554.2조원으로 43.6%를 차지.

-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단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
 - 빈번한 단기 외국인 투기자금의 유출입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켜 경제 안정성을 저해하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¹⁵⁾으로 작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전분기대비 28% 평가절하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후에도 국내 외환시장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
 - 반면, 2010년 유럽재정위기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변동폭은 2010년 1/4분기 6.3%, 2/4분기 7.9% 절하에 그침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규모와 환율 변동성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분기별 평균자료로 전기대비 변동폭이며, 원/달러 환율은 증가 기준임.

(7)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

- (연구개발투자비는 크게 증가) 한국은 지난 90년대부터 연구개발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R&D 투자규모를 꾸준히 증대시켜옴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전반적인 정체국면을 나타낸 반면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연평균 13.2% 증가하며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됨

15) 외환위기 이후 환율 상승이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고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율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가격효과(예: 환율상승→달러표시 수출가격 인하)와 물량효과(예:수출가격 하락→수출물량 증가) 측면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에 대한 영향은 가격효과(예: 환율상승→원화표시 수입가격 인상)가 증가한 반면, 물량효과(예: 수입가격 상승→수입물량 감소)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투자유발효과가 약화되었고 수입자본채 경로를 통한 환율상승의 설비투자 감소효과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용복 외, 2009.4.

- 이와 더불어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3.37%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국가 중 4위권¹⁶⁾임

<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비 추이 >

(단위: 조원,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연구개발투자비	0.01	0.2	3.2	9.4	13.8	24.2	34.5
GDP 대비 비율	0.37	0.56	1.72	2.37	2.30	2.79	3.3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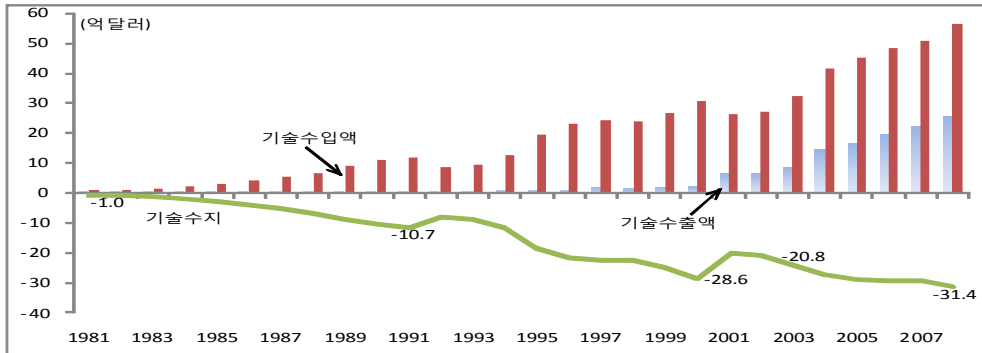
- (낮은 효율성과 쓸림현상은 확대)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R&D 투자 절대 규모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점과 쓸림현상은 개선해야 할 과제임
 - R&D 비용의 절대 규모가 미국의 1/9, 일본 1/4 수준으로 낮고 상대적 투자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GDP대비 3극 특허건수¹⁷⁾ 비중도 주요국 대비 낮음
 - 또한,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비중¹⁸⁾이 낮은 점과 기업별 R&D 투자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3대 산업에의 쓸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지속 증가) 2000년대 이후 기술수출액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적자가 확대됨
 - 기술수출액이 2000년 2억달러 수준에서 2008년 25.3억달러로 확대되었으나, 기술수입액도 2000년 30.6억달러에서 2008년 기준 56.7억달러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가 1980년 1억달러 적자에서 2008년에는 31.4억달러 적자로 확대
 - 국가별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도 2007년 기준 일본 3.5배, 미국 1.8배, 독일 0.9배이나, 한국은 0.4배로 낮은 수준임

16) OECD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따르면, 2007년말 기준 GDP대비 연구개발비중은 한국 3.47%, 미국 2.68%, 일본 3.44%, 독일 2.54% 수준이며, OECD국가 평균은 2.29%임.

17)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건수.

18) OECD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주요국의 R&D 예산은 미국 3,688억달러, 일본 1,508억달러, 독일 842.3억달러인데 한국은 110.9억달러로 절대규모가 상당히 부족하고,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R&D 비중은 75% 수준이나 미국 71.9%, 독일 69.9% 등은 민간부문 비중이 다소 낮은 편임.

<기술무역수지 추이>



자료:OECD

(8)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

○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신뢰수준은 잠재성장률에 악영향

- 세계은행(2007)의 자료¹⁹⁾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자본 순위에서 한국은 118개국 중 26위에 머물렀으며,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OECD회원국 평균 1인당 35만3339달러에 비해 우리는 10만7864달러로 1/3에 불과함
- 세계가치조사 결과²⁰⁾에 의하면 1989년 이후 사회적 신뢰가 하락 추세에 있으며, OECD 국가 평균 신뢰수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의 신뢰수준은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OECD 평균과의 격차는 1990년 전후 0.032에서 2000년 전후 0.050으로 더 커짐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변화 추이>

구분	1989	1994	1999	2005	평균
한국	0.342	0.303	0.273	0.302	0.305
전체 평균	0.339	0.250	0.285	0.289	0.289
OECD 평균	0.374	0.342	0.315	0.352	0.345

자료: 이병기(2009),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주: 1989년은1989-1993년 기간의 웨이브, 1994년은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

19)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20) 세계가치조사(www.worldvaluessurvey.org)는 Rosenberg(1956)에 의해 개발된 지문,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을 사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측정(이병기(2009)).

○ 계층·기업·지역·남북간 양극화와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음

- 계층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소득 5분위 배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이 2003년 전국가구 4.44배에서 2009년 4.92로 확대되었고, 도시가구는 동기간 4.24배에서 4.94배로 격차가 더 확대됨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2인이상)	4.44	4.61	4.75	4.82	4.97	4.97	4.92
도시가구 (2인이상)	4.24	4.42	4.55	4.62	4.86	4.87	4.94

자료: 통계청.

주: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소득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1970년 97.1%에서 2008년 99.5%로 더욱 커짐
 -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생산지수는 2003년 14.3p에서 2009년 18.3p로 확대되었고 노동생산성 격차는 2003년 중소기업이 18.2p 높았으나 2009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9.1p 높아지며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기업별 R&D 투자규모도 2009년 기준 대기업이 전체 규모의 84.1%를 차지²¹⁾하고 있어 대·중소기업의 미래 경영여건을 더욱 양극화시킬 수 있음

<대·중소기업간 생산 및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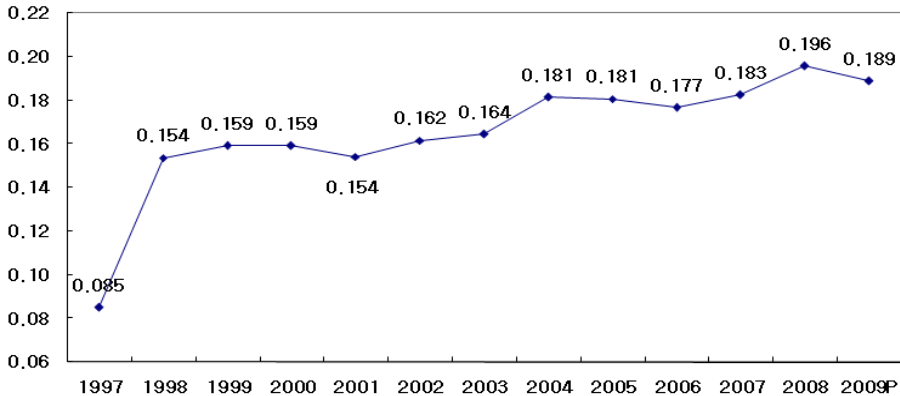
구분		2003	2005	2007	2009
생산 지수	대기업	81.2	100	118.1	125.0
	중소기업	95.5	100	112.7	106.7
노동생산성 지수	대기업	77.9	100	126.2	133.4
	중소기업	96.1	100	114.9	114.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 동향조사』(국회 입법조사처(2010), 이슈와논점 97호 재인용).

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1 Insight,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이주량 외, 2010.7.

- 지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
-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를 활용하여 지역간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97년 0.085에서 2009년 0.189로 2배 이상 커짐

<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KOSIS.

주 : 가중변동계수도 지니계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지역간 불균등도의 심화를 드러냄.

- 남북관계의 경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되며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²²⁾을 미치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임
- 천안함 사건이 발표된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율은 이전 고점인 4월 26일 대비 13.5%, 주가지수(KOSPI)도 동 기간 중 9.2% 하락
-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남북한 통일 경제로 나아갈 경우 2050년 경에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GDP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²³⁾
- 1989년 이래 2008년까지 20년간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 평화비용의 지출을 통해 얻은 편익은 약 141조 원으로 추정됨²⁴⁾
- 1989년 이후 평화비용은 3조 9,100억 원이 지출되었으나, 144조 5,500억 원의 국방비 절약 등으로 약 141조 원의 편익이 발생

연구위원 김동열 · 선임연구원 조호정

22)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현안과 과제:10-14, 2010.6.1.

23) 골드만 삭스(2009.9)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낮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증가율,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통일 한국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함.

24)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평가와 개선과제', 통일경제:09-03(통권 3호), 2009.7.31.

Ⅱ. 성장잠재력 제고의 기본 방향

II. 성장잠재력 제고의 기본 방향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까지 9%대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4%대에 이르렀으며, 2011년 이후에는 3%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OECD회원국 평균과 주요국 대비 하락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폭도 영국, 일본과 함께 크게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하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구성요소			정책 과제	세부 내용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여성·청년·고령 인력의 활용도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 - 퍼플잡(유연근무) 활성화 - 가족친화경영 지원 -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人的 자본	-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 및 투자확대	- 수요자 니즈에 맞는 대학교육 - 세계 100위권 대학 및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 산학연 연계 내실화
	자본	-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 투자관련 규제의 획기적 완화 -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경제자유구역 리모델링	
총요소 생산성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등)	-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 금융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강화	-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진입장벽 및 투자규제 완화 - 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연구개발 지원 - 전문 금융인력 양성과 산업지원기능 복원 -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성 제고	- R&D의 1등 전략으로의 전환 - 도전-실패-재도전의 시스템화 - R&D 투자의 쓸림현상 해소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신뢰, 공정 사회,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 -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정부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강화 - 21세기 블루오션으로서의 북한시장에 대한 선투자	

(1) 인적 자본의 확충

○ 인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과 투자 확대

-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혁신을 통해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등 질적인 측면의 노력도 필요함
- 변화하는 경제사회의 니즈에 맞도록 대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세계 100위권 대학과 지역별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산학연 협력을 내실화
- 이공계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brain drain)을 최소화하고, 고급두뇌의 국내 유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 구조를 구축
- 세계 100위 대학 내 진입과 이과 부문의 노벨상 프로젝트 등 수행

○ 여성·청년·고령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²⁵⁾을 높이고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잠재성장률²⁶⁾을 끌어 올릴 수 있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한 근무시스템 정착, 출산 후 직장복귀의 장애물 제거 등이 필요 (예: 퍼플 잡²⁷⁾ 활성화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와 정년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하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마련
 -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해외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시스템과 '이민'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청년실업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

25) 2009년말 기준 25~54세 여성고용률 59.8%(OECD)를 74% 수준으로 높일 경우 단기적으로 1인당 GDP 0.9%p 향상 (류덕현(2008) 참고)

26) 대니 라이프치거 세계은행 前부총재는 지난 5월18일 개최된 국내 세미나에서 “고령자의 정년 연장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만으로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음.

27) 최근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퍼플 잡(purple job)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로자를 퍼플 칼라(purple collar)라고 부르며, 퍼플 잡(purple job)이란 단기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요일제 근무, 제택근무 등과 같은 유연한 근무를 의미함. 또한, 퍼플(purple, 보라색)은 양성 평등과 일-가정의 조화를 상징.

- 2010년 들어 금융위기의 극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2) 新성장동력의 육성

○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경제시스템을 고도화

-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
-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수출산업화 전략이 필요
- 소비자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에서도 통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 IT제조업과 자동차산업 등 선도업종의 호황이 국내 부품업체나 하청업체의 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滴下(trickle-down)효과 제고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히든 챔피언)의 육성을 통해 산업연관효과를 강화해야,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국내 경기의 호황으로 연결 가능(☞ 滴下(trickle-down), 滴内(trickle-in)효과)
-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신소재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정비

(3)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을 2등 전략에서 1등 전략으로 전환하고, R&D 투자의 싹틔움현상을 해소하는 등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과감하게 1등 전략, 즉 ‘스마트 리더’

-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²⁸⁾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의 쏠림현상도 해소
- 현재의 '스마트 팔로어'(Smart follower; 똑똑한 2등) 전략을 '스마트 리더'(Smart leader; 똑똑한 1등) 전략으로 전환하며, 과감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도전-실패-재도전'의 시스템을 구축
- IT산업과 자동차 등 특정산업에의 연구개발 쏠림현상을 해소하며, 농업과 전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투자의 활성화가 필요

○ **전문 금융인력의 양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과 산업의 동반성장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기여**

-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도입에 따른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전문 금융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금융허브 발전 전략을 재구성해야 함
-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기업과 가계에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도입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을 장기화하고 급격한 유출을 방지해야 함
- 아울러, 반복되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 도입이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만큼 선별적 도입이 필수적임

○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 2006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수지 적자가 4년 연속 지속되는 등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감소 추세에 있음
- 투자 관련 과감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외국어 소통능력 제고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
-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인천, 부산, 광양, 평택, 대구, 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화 전략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8)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 강국들의 등장과 세계화의 빠른 진전은 선진국 기술의 창의적 모방과 같은 '2등 전략'(스마트 팔로어 전략)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으며, 과감한 도전과 1등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음

(4) 경제시스템 혁신

○ 총요소생산성(TFP) 제고 등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 노동투입과 자본투입 등 요소의 투입을 늘리는 것과 아울러 경제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80년대 전반 6.3%p에서 2000년대에는 1.5%p로 크게 하락하여, 경제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점진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회 각 부문의 통합력 제고, 신뢰수준 제고,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

- 사회통합, 투명성, 신뢰, 정책의 예측성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함
-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완화와 통합력 제고를 위해,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지역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역특화 발전 등이 필요
- 신뢰²⁹⁾, 투명성, 반부패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우리 정부도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ISO-26000(SR))이 2010년 말 발효될 예정으로 있는 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남북한의 갈등과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
-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21세기 블루오션으로서의 북한 시장 개척, 평화비용 절감 등의 장기 효과도 발휘
- 이산가족의 70% 가량이 77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연구위원 김동열 · 선임연구원 조호정

29) 이병기(2009)에 따르면, “신뢰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 0.5~0.8%p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함.

Ⅲ.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

1. 인적 자본 확충
 - 1) 교육서비스 세계화
 - 2) 여성경제활동 제고

2. 新성장동력 육성
 - 1) 서비스수지 개선
 - 2)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3. 미래투자 확대
 -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 3) 서민금융 경쟁력 강화

4. 경제시스템 혁신
 - 1) 총요소생산성 제고
 - 2) 사회적 자본의 확충
 - 3) 남북 상생구조의 구축

1. 인적 자본 확충

1) 교육서비스 세계화

(1)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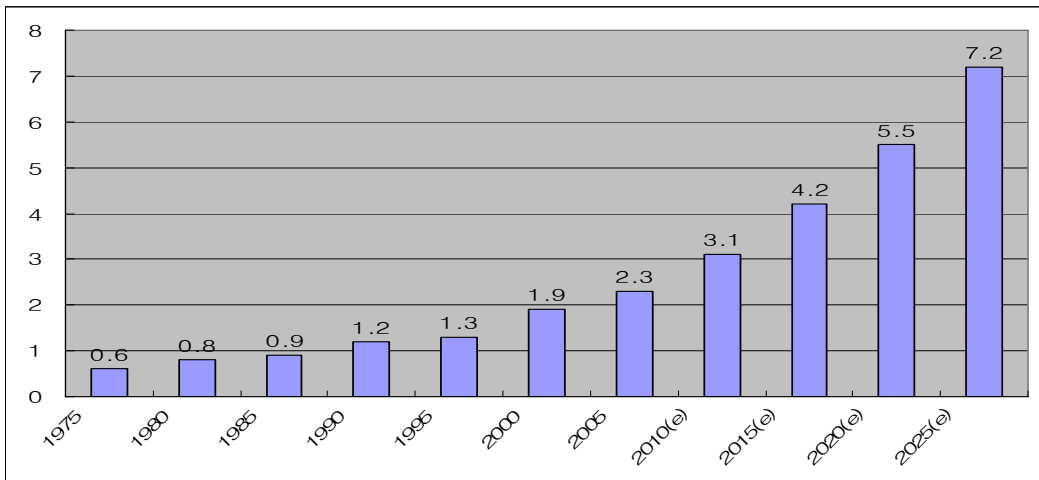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여 교육의 세계화 계속

- 2025년 전 세계유학생 숫자는 7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07년 현재 등록된 학생들 중에서 1.8%가 모국이 아닌 외국에서 학업
- 2010년 전 세계 유학생 수는 3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025년이 되면 이의 두 배가 넘는 약 7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유학생 수 추이와 전망 >

(단위: 백만 명)



자료: Banks, Melissa, et al (2007), 「Global Student Mobility, An Australian Perspective, Five Years On」, IDP.

○ 불가항력적인 교육의 세계화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

- 지금보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해야
- 외국인학생들을 국내로 끌어들이 기회가 크게 늘어나는 것 또한 예상해야

(2) 유학시장의 수요와 공급

○ 전 세계에서 선진지역인 북아메리카와 유럽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형태로 영어권이 선호되고 있음

-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지역에서만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선진지역인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유학생 유출이 유입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

< 2007년 현재 지역별 유학생 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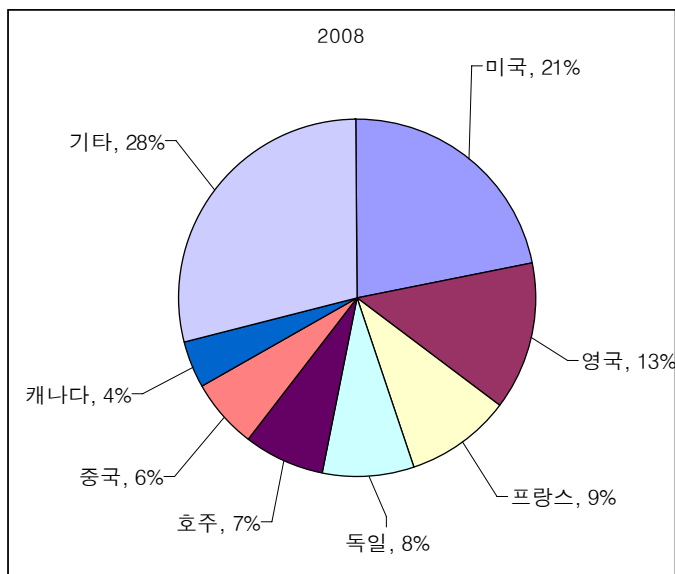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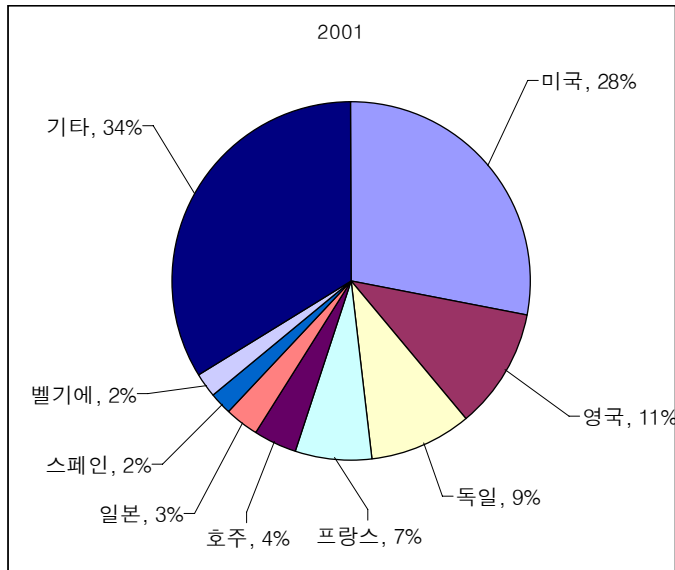
(단위: 명)

	외국인유학생	해외 유학중인 본국 학생	학생 수 수지
아랍지역	80,026	193,752	-113,726
중동부 유럽	199,955	317,637	-117,682
중앙아시아	52,307	97,183	-44,876
동아시아와 태평양	514,290	808,022	-293,732
남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국가	53,113	168,231	-115,118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1,816,945	499,923	1,317,022
서남아시아	10,739	247,437	-236,69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73,095	217,971	-144,876
불명확		250,314	-

자료: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UNESCO, 2009.

- 미국에 대한 유학생들의 선호가 줄어들었지만 대신 범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 증가
- 2001년 약 200만 명의 전 세계 해외유학생들 중에서 28%가 미국, 11%가 영국, 9%가 독일 그리고 7%가 프랑스를 선택
- 2008년 300만 명에 육박하는 해외 유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비중이 21%로 떨어졌지만 영국은 13%, 호주 7% 그리고 캐나다 4%로 증가
- 범 영어권 국가(Major English Speaking Destination Countries, MESDCs)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2001년 43%에서 2008년 45%로 그 비중 증가

< 2001년과 2008년,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외국학생의 유학국가별 구성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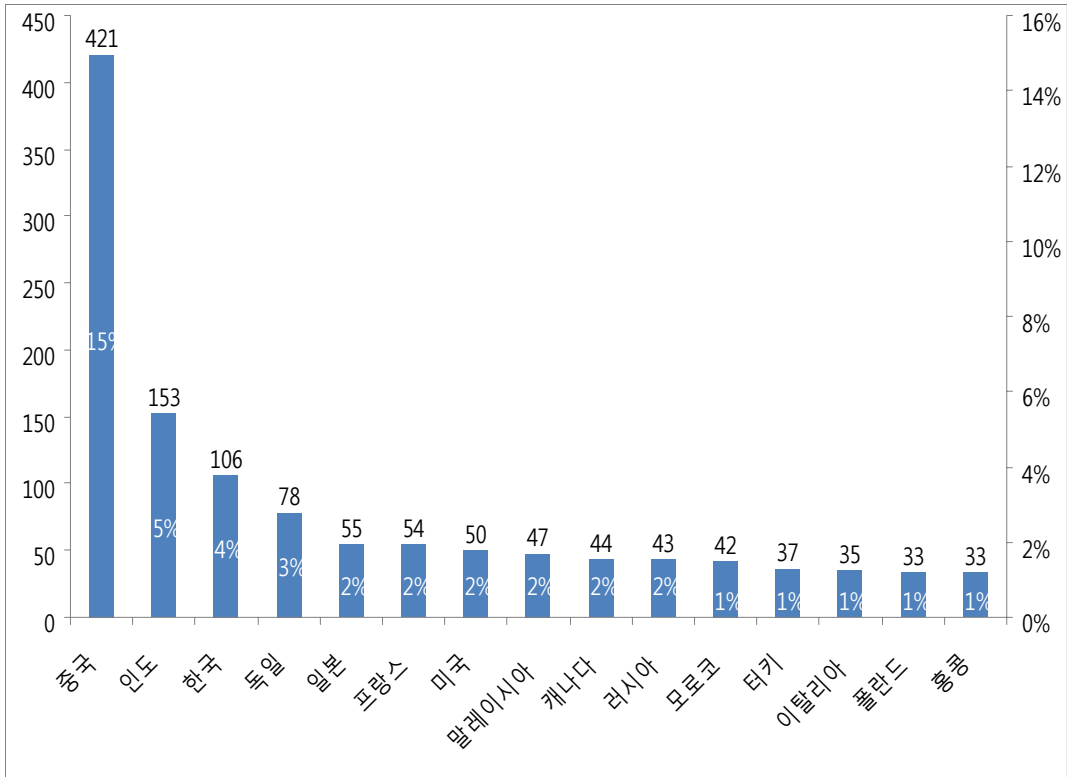
자료: “Atlas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ttp://www.atlas.iienetwork.org>).

○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유학생 배출 지역

- 2007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재학 유학생들 중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 각각 1위, 2위 그리고 3위 기록
- 약 2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전체 유학생들 중 중국학생들이 15%인 42만 1천 명, 인도가 5%인 15만 3천 명 그리고 한국이 4%인 10만 6천 명

< 2007년 현재 해외유학생 배출 상위 15개 국가 >

(단위: 1,000명, %)



자료: Chien, Chiao-Ling (2010), 「Global Trends in Student Mobility and Programme Preferences」, Going Global 4,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Mar 25.

- 거의 모든 선진지역에서 중국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중
- 2006년 현재 중국학생들은 일본에서도 7만 4천 여 명으로 압도적인 1위 기록

< 2006년 현재 주요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 중인 학생 분포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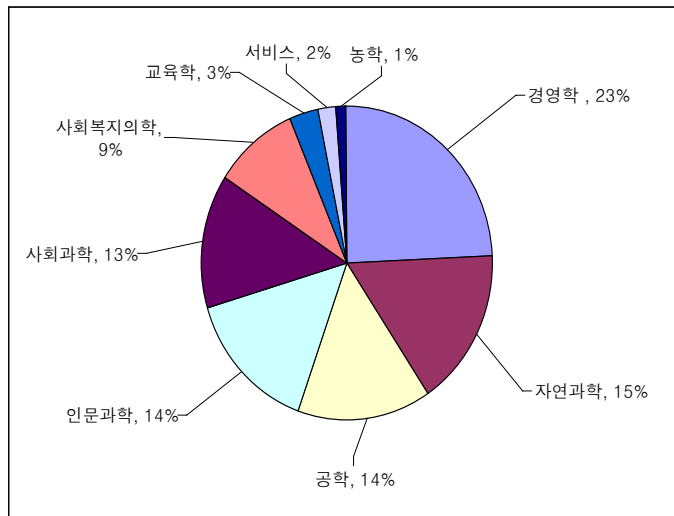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인도	76,503	중국	59,755	중국	63,543	중국	74,292
중국	62,582	인도	19,205	인도	36,078	한국	15,974
한국	58,847	그리스	17,675	말레이시아	18,074	대만	4,211
일본	38,712	아일랜드	16,790	홍콩	16,558	말레이시아	2,156
캐나다	28,202	미국	14,755	인도네시아	13,025	베트남	2,119
대만	27,876	독일	13,265	한국	12,352	미국	1,790
멕시코	13,931	프랑스	12,455	미국	11,901	태국	1,734
터키	11,622	말레이시아	11,450	태국	10,934	인도네시아	1,553
독일	8,829	나이지리아	9,605	일본	9,110	방글라데시	1,456
태국	8,765	홍콩	9,455	싱가포르	8,906	스리랑카	1,143

자료: Hawthorne, Leslyanne, 「Two-Step Migration: The Growing Competi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 Skilled Migrants」, NEAS Conference, May 15, 2009.

○ 세계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은 경영학과 같은 실용학문을 전공

- 2007년 현재 학생들은 경영학, 자연과학, 공학, 인문과학 등의 순서로 전공
- 유학생들의 23%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은 15%, 공학은 14%
- 실용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영학과 공학을 합치면 약 37%에 달함

< 2007년 현재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 등록 유학생들의 전공별 분포 >



자료: Chien, Chiao-Ling (2010), op cit.

○ 범 영어권 내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세계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

- 범 영어권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학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섬

· 2005년 현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수는 각각 7만 2천명과 6만 6천 명으로 뉴질랜드의 4만 7천 명보다 앞섬

< 2005년 현재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만 명)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56.5	31.8	25.5	25.5	24.6	14.1	12.1	7.2	6.6	4.7	4.2

자료: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atterns and Trends」, World Education Services, Oct 2007.

· 영어권 국가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에 있어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가장 앞서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영어권 국가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비교 >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3달 이하 체류 시 학생비자신청 미 요구		○		○			
연계과정 제공	○	○		○		○	○
낮은 학비 (1년 5,000달러 이하)			○		○		
적절한 학비 (1년 5,000~15,000달러)		○		○			
1주일 16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	○	○		○	○	○	○
낮은 생활비			○		○		
적절한 생활비	○	○		○			○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	○		○	○	○	○

자료: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atterns and Trends」, The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Sep 2007.

·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1년 학비가 5천 달러가 되지 않으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가장 비싼 미국의 1/18 수준

< 영어권 국가의 년 간 대학등록금 비교 >

(단위: 달러)

국가	대학	전공	등록금
호주	University of Sydney	경영학	18,383
		기계공학	20,164
		철학	16,204
캐나다	Laval University	경영학	10,634
		기계공학	11,852
		철학	11,852
뉴질랜드	University of Otago	경영학	12,120
		기계공학	13,687
		철학	11,050
영국	Oxford University	경영학	21,653
		기계공학	24,748
		철학	21,646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경영학	1,704
		기계공학	1,464
		철학	1,656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경영학	4,445
		기계공학	4,445
		철학	4,445
미국	Harvard University	일반적인 학부과정 1년	31,456

자료: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atterns and Trends」, The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Sep 2007.

- 영어권 밖에서는 중국에 대한 유학이 증가

- 2008년 기준으로 189개 국가로부터 온 약 22만 명의 외국학생들이 중국전역의 592개의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³⁰⁾
- 중국은 2020년까지 5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³¹⁾

- 영어권과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유학은 정체되거나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영어권 대(對) 중국의 양극화 시작

- 2001년과 비교하여 2008년 프랑스를 택한 유학생 비중이 2%p 증가하여 9%가 되었지만 독일은 1%p가 감소한 8%를 기록

30)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Daily Telegraph, Oct 1, 2009.

31) "Foreign Student Quota to Expand," China Daily, Jul 29, 2008.

40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일본과 스페인은 2001년 각각 2%였지만 2008년에는 그 비중이 더 떨어져 기타 국가로 분류
- 중국에 대한 선호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 미국의 경우 Study Abroad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유학을 떠난 대학생들 중 중국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2006/07년 1만 1천여 명으로 전기와 비교하여 25.3% 증가

< Study Abroad 프로그램에 따른 미국 학생들의 유학국가 >

(단위: 명, %)

순위	유학국가	2005/06	2006/07	변화율
1	영국	32,109	32,705	1.9
2	이탈리아	26,078	27,831	6.7
3	스페인	21,881	24,005	9.7
4	프랑스	15,602	17,233	10.5
5	중국	8,830	11,064	25.3
6	호주	10,980	10,747	-2.1
7	멕시코	10,022	9,461	-5.6
8	독일	6,858	7,355	7.2
9	아일랜드	5,499	5,785	5.2
10	코스타리카	5,518	5,383	-2.4
11	일본	4,411	5,012	13.6
12	아르헨티나	2,865	3,617	26.2
13	그리스	3,227	3,417	5.9
14	남아프리카 공화국	2,512	3,216	28.0
15	체코 공화국	2,846	3,145	10.5
16	칠레	2,578	2,824	9.6
17	에콰도르	2,171	2,813	29.6
18	오스트리아	2,792	2,810	0.6
19	뉴질랜드	2,542	2,718	6.9
20	인도	2,115	2,627	24.2
	합계	223,534	241,791	8.2

자료: 「Global Tendencies in Student Mobil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Mar 23, 2009.

(3) 한국의 유학시장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유학생들은 범 영어권 국가에서의 학위과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중 또한 확대

- 한국 해외유학생은 최근에도 계속 증가
 - 2005년 각각 19만여 명이었던 해외 유학생이 2009년 24만여 명으로 증가
-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위를 얻기 위해 출국
 - 전체적으로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59.4%(북미는 85%)

< 2009년 4월 1일 현재 지역별 한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명)

		아시아	북미	중남미	구주	중동	아프리카	합계
학위 과정	대학원	7,624	25,734	13	3,993	72	32	37,468
	대학	52,527	46,914	139	7,445	40	47	107,112
	소계	60,151	72,648	152	11,438	112	79	144,580
어학연수		64,682	12,447	121	21,215	124	55	98,644
합계		124,833	85,095	273	32,653	236	134	243,22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범 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선호는 여전
 - 한국인 유학생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2008년 26.5%에서 2009년 27.5%로 증가한 반면 미국은 28.8%에서 28.4%로 약간 감소

< 주요 국가별 해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

(단위: 명, %)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계
2008	62,392	57,504	17,274	17,000	16,774	10,792	10,183	1,923	23,025	216,867
비율	28.8	26.5	8.0	7.8	7.7	5.0	4.7	0.9	10.6	100.0
2009	69,124	66,806	17,031	20,420	18,862	15,971	10,992	2,653	21,365	243,224
비율	28.4	27.5	7.0	8.4	7.8	6.6	4.5	1.1	8.8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영어권 국가 전체(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필리핀)는 2008년 55.2%에서 2009년 56%로 약간 증가
- 외국인유학생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교육의 세계화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 실용적인 학문보다는 연수가 선호
- 외국인학생들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2009년 기준으로 한국에 유학 온 전체 외국인학생 중 중국학생들이 전체의 70.5% 차지

42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2005년 2만 2천여 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이 2010년 7만 5천여 명으로 급증
-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출신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큰 편차 없이 골고루 분포

< 2009년 4월 1일 현재 주요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명, %)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 수	53,461	3,931	1,898	1,787	1,256	2,724	10,793	75,850
비율	70.5	5.2	2.5	2.4	1.7	3.6	14.2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어학연수와 기타연수가 적지 않은 비중 차지

-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위과정에 66.7% 그리고 어학연수와 기타연수를 합쳐 33.3%가 등록하여 상대적으로 비학위과정 학생들의 비중이 높음

< 2009년 4월 1일 현재 출신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명)

	학위과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계
아시아	48,056	18,471	3,606	70,133
아프리카	409	136	39	584
오세아니아	117	62	42	221
북미	1,247	637	710	2,594
남미	200	146	49	395
유럽	562	636	725	1,923
합계	50,591	20,088	5,171	75,85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에서 실용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학위과정을 통해 실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은 5,286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세계적으로 약 14%)
- 한국을 실용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2.4%인 1,787명이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공학 전공자는 전체의 37.1%인 663명

< 2009년 4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 분포 >

(단위: 명)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어학연수	13,135	2,303	524	280	227	1,040	
대학 (전문대학)	인문사회	22,940	631	306	328	486	411
	이공	4,054	22	19	83	38	126
	자연계	1,525	27	34	9	117	47
	예체능	2,150	38	30	5	48	25
	의학계	3	2	18	3	61	-
	소계	30,672	720	407	428	750	609
대학원 (석·박사)	인문사회	4,778	323	271	249	80	760
	이공	1,232	7	16	550	4	133
	자연계	624	9	23	189	4	94
	예체능	561	16	15	3	6	15
	의학계	136	-	19	38	30	21
	소계	7,331	355	344	1,029	124	1,023
기타연수	2,323	553	623	50	155	52	
합계	53,461	3,931	1,898	1,787	1,256	2,72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중국학생들의 유입은 흡입요인보다는 배출요인이 더 작용했기 때문으로 중국국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가 영향 받음을 의미

- 유학결정요인을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으로 분류하면 한국의 고등교육은 흡입요인이 부족

- 배출요인(push factors)에는 앞선 지식에 대한 열망, 국내 교육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특정 학문에 대한 관심이 속함
- 흡입요인(pull factors)에는 세계적인 고등교육 기회, 교육을 통한 이민 그리고 해당 국가의 외국학생 유치 전략이 들어있음
-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흡입요인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 유학을 결정하는 요인 >

요인	내용
배출요인 (Push factors)	· 문화적 그리고 지적인 지평 확대욕구
	· 국내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불만족
	· 특정 학과나 학문분야 추구
흡입요인 (Pull factors)	· 세계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 교육과 이민의 연계
	· 국가가 지원하는 해외학생 유치 유인 전략

자료: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UNESCO, 2009: 35.

- 중국학생들의 증가에 있어 좁은 입시관문이 배출요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입시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어 앞으로 이 효과의 축소가 예상
 - 2010년 중국 대학입시에서 전국적으로 957만 명이 응시했는데 이중 입학정원이 657만 명으로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탈락할 운명³²⁾
 - 그러나 대학교육의 대중화로 1999년 약 100만 명이었던 대학입학 정원이 2010년 6배 넘게 증가한 셈이어서 중국의 유학자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옴

○ 한국의 발전경험이 해외유학생 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대해 약 200회 발전경험을 전수
 -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2004년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는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습득을 위해 국내에서 연수
- 발전경험을 체계화, 학문화할 경우 해외 유학생 흡입요인으로 전환 가능

< 2010년 현재 주요 국가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진행 현황 >

(단위: 건)

국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도미니카공화국	알제리	터키	가나	우크라이나
횟수	36	25	19	18	11	10	9	9	9	8	8

자료: “한국 성장모델’ 22개국에 200건 전수,” 동아일보, 2010년 9월 13일.

(4) 시사점

첫째, 영어를 사용하면서 저렴하게 그리고 최고수준으로 실용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 또는 유치하거나 과정을 신설해야 함

- ‘범 영어권 국가’와 중국의 양극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영어에 대한 선호가 우위
- 해외유명 대학의 유치를 통해 영어와 학문에 대한 국내수요를 흡수해야 함
- 경영학, 공학 등의 실용학문을 대학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육 방침의 변화필요

32) “중국대학입시 시작,” 중국의 창, 2010년 6월 7일 (<http://korean.cri.cn>).

둘째,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대국 특히 중국의 배출효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 고등교육의 장점을 적극 부각시켜 흡입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 SCI논문으로 평가한 연구 성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는 일부 국내 최상위 대학교들에 대한 해외 홍보를 지원해야 함
- 중국이외의 다양한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셋째,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나 대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로 그 자체만으로도 제3의 발전모델
-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 선진국들의 발전경험보다 한국의 것이 보다 현실적
-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적 사회과학을 탄생시키고 다시 이것이 외국의 유학생을 끌어당기는 선 순환구조의 정착이 가능

넷째,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외국학생들이 현지 한국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한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연계시킴으로써 한국유학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한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외국 인력의 현지 채용을 통해 한국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기회로 삼아야 함

다섯째, 한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외국학생들에 대해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교육과 영주권을 연계시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사용해오고 있는 방법
-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우수한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유학은 이의 연결고리

2) 여성경제활동 제고

(1) 최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 대학교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

- 전문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대학교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그 차이를 줄임
- 대학교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에 비해 2009년에 8.2%p 증가하며 최근 2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
- 중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초졸 이하가 -14.2%p, 중졸이 -1.4%p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단위 : %, %p)

	1990년(A)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B)	증감(B-A)
초졸 이하	50.4	47.1	44.6	38.8	36.2	-14.2
중졸	38.2	40.7	42.2	40.8	36.8	-1.4
고졸	47.5	50.2	49.5	53.2	51.6	4.1
전문대졸	66.2	63.6	64.6	67.3	65.5	-0.7
대학교졸 이상	53.1	57.9	58.1	60.2	61.3	8.2
전체	47.0	48.4	48.6	50.0	49.0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구직기간 1주 기준임.

○ 축소되고 있는 남·녀 임금격차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여성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면서 남·녀 임금격차가 크게 감소
-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 수준은 1990년 53.2%로 남성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었지만, 2009년 67.3%로 14.1%p 증가하며 임금격차는 줄어들음
- 특히, 2009년 현재 20대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은 남성의 93.3%로 거의 동일한 수준임
- 30대와 60대 여성의 남성 대비 급여 수준은 각각 1990년에 58.7%와 42.8%에서 2009년 77.4%와 65.1%로 18.7%p, 22.3%p만큼 매우 크게 증가

< 연령별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 수준 >

(단위 : %, %p)

	1990년(A)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B)	증감(B-A)
계	53.2	60.5	66.0	66.3	67.3	14.1
20대	79.2	83.9	91.7	95.3	93.3	14.1
30대	58.7	68.0	73.6	74.0	77.4	18.7
40대	45.8	50.9	54.9	54.9	56.3	10.5
50대	44.3	51.5	54.5	53.8	55.7	11.4
60대 이상	42.8	51.7	67.2	65.6	65.1	22.3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의 여성 진출이 크게 확대

-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크게 높아진 반면, 기능 관련직은 여전히 미흡하여 성별 직종분리가 직업별로 차별화되고 있음
- 최근 10년 동안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등 높은 지위의 고소득 직종으로의 여성 취업 비중이 6.7%p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전통적으로 여성 취업 비중이 높았던 서비스·판매 종사직의 여성 고용 비중도 대체로 유지됨
- 반면, 기술·제조 관련 직종은 남성 취업자의 비중이 70~80% 대로 여전히 높고 여성 고용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여성들의 이 분야로의 진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직업별 남녀 취업자 비중 추이 >

(단위 : %, %p)

	남자				여자			
	2000 (A)	2004	2008 (B)	증감 (B-A)	2000 (A)	2004	2008 (B)	증감 ((B-A)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68.9	65.8	62.2	-6.7	31.1	34.2	37.7	6.7
사무 종사자	48.8	50.4	49.6	0.7	51.2	49.6	50.5	-0.7
서비스·판매종사자	38.8	38.0	38.4	-0.5	61.2	62.0	61.6	0.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3.5	55.1	56.1	2.7	46.5	44.9	43.9	-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6.8	82.7	84.7	7.9	23.2	17.3	15.3	-7.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6.7	86.1	87.3	0.6	13.3	13.9	12.7	-0.6
단순노무 종사자	53.3	52.3	52.0	-1.3	46.7	47.7	48.0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국내 여성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

○ 전체 여성 경제활동은 독일, 프랑스 등 보수주의 중부유럽 국가의 30년 전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현재 53.9%로 30년 전인 1980년 독일의 51.9%, 프랑스의 55.1% 수준에 불과
-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9년 현재 10,449천 명으로 남성의 5,309천 명의 약 2배 수준이며, 1998년 62만 명, 2003년 24.7만 명, 2009년 19.5만 명이 증가하여 경제위기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큰 폭으로 상승

< OECD 주요국의 여성(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스웨덴	75.4	79.4	82.5	77.2	76.4	77.7	76.4
	노르웨이	62.2	67.8	70.7	72.1	76.5	75.4	76.5
	덴마크	-	74.6	77.6	73.3	75.9	75.9	77.3
	핀란드	69.4	73.2	73.4	69.5	72.1	72.9	73.5
보수주의적 중부유럽	네덜란드	36.1	40.9	53.1	59.1	65.3	68.6	73.5
	독일	51.9	51.3	56.9	61.1	63.3	66.9	70.4
	프랑스	55.1	55.6	57.2	59.9	61.7	64.3	66.2
	이탈리아	38.4	40.2	44.0	42.3	46.3	50.4	51.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캐나다	57.4	63.0	68.4	67.8	70.4	73.1	74.4
	영국	-	62.4	67.3	67.1	68.9	69.7	70.2
	미국	59.9	64.1	67.8	69.7	70.7	69.2	69.0
	호주	52.0	54.3	61.8	64.2	65.4	68.2	70.1
한 국		46.3	45.2	49.9	51.4	52.0	54.5	53.9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주: 1) OECD와 비교하기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식의 분모를 15-64세 인구로 조정.

2)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국가 분류는 송호근·홍경준(2006)을 참고함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최저 수준임
- 2009년 국내 여성 고용률은 52.2%로 OECD 평균인 56.7%보다 4.5%p 낮음
- OECD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가 73.1%,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각각 69.1%와 70.6%로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2.2%로 약 15%p 이상의 큰 격차를 보임

< OECD 주요국의 여성(15~64세) 고용률 비교 >

(단위 : %)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	OECD 평균
63.4	69.1	65.2	70.6	73.1	52.2	56.7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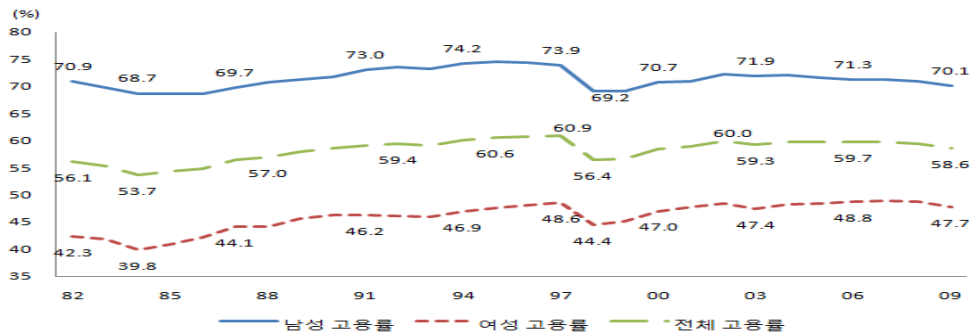
주1: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주2: 2009년 기준임.

○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큼

- 여성 고용률이 약간 증가했지만,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큼³³⁾
- 국내 여성 고용률은 1982년 42.3%에서 2009년 47.7%로 약 30년 동안 5.4%p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임
- 남·녀간 고용률 격차도 2000년에 23.7%p에서 2009년 22.4%p로 약 1.3%p 감소하는데 그쳐 최근 10년 동안 성별 고용 수준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격차도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남

< 성별 국내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1: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 100.

주2: 구직기간 1주 기준임.

○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M字 커브)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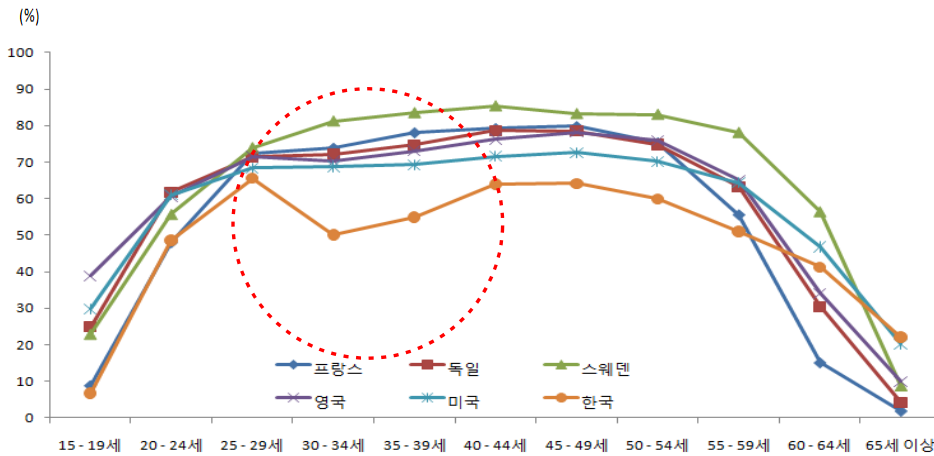
- 국내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30~40대를 최저점으로 하는 M자 커브 형태를 보임³⁴⁾

33) OECD 고용률과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 통계청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OECD와 한국 통계청의 지표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34) 만혼, 노산 등으로 M자 형 곡선의 최저점이 1990년대에는 25~29세였으나, 2000년대에 30~34세로 이동

- 결혼 연령기인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출산·육아기인 30~34세에 최저점으로 하락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나타냄
-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고용률이 유지되며 역U자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M자 형태인 우리와 차이를 보임

<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Labor Force Survey.
 주: 2009년 기준임.

- 특히, 고학력 여성의 장년층(35세 이상) 고용률이 청년층(20~34세)보다 저조하여 결혼·출산 후 고학력 여성의 사회 재진출이 어려움을 반영
- 35세 이상 고학력 장년 여성 고용률은 2006년 55.0%로 고학력 장년 남성의 91.7%에 크게 못미치며 전체 장년 여성의 평균 고용률 57.8%를 밑도는 수준임
- 35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낮은 고용률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 재진출이 저조함을 시사

< 성별 · 연령별 고학력자 고용률 비교 >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장년 (35세 이상)	남성	89.2	90.4	91.8	91.6	91.9	91.7
	여성	49.1	50.1	49.5	50.8	53.0	55.0
청년 (20~34세)	여성	62.4	62.9	61.9	64.3	63.7	65.6

자료: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파악과 정책과제, 김종숙 외(2008)

주: 고학력자는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를 말함.

○ 출산·육아 이후 복귀하는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 남성의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이 60세 이후 급증하는 반면, 여성은 30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남성은 고용이 안정되는 30대부터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이 감소하나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오히려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성·연령계층·종사상의 지위별 임금근로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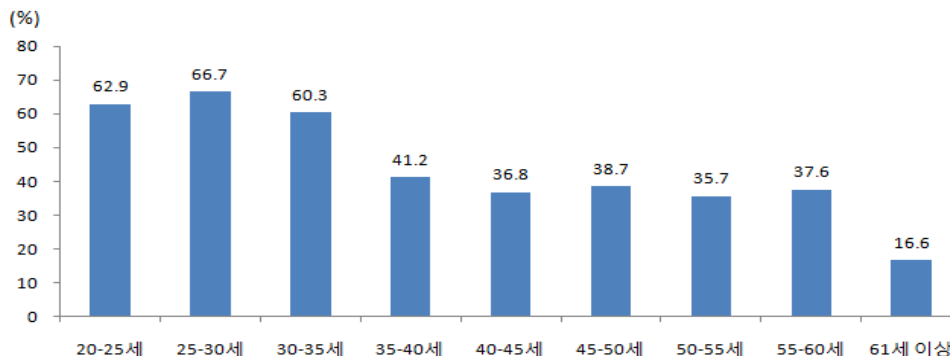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남성			여성		
	상용(비중)	임시 일용(비중)	합계	상용(비중)	임시 일용(비중)	합계
15 - 19세	4(5.2)	73(94.8)	77	9(9.3)	88(90.7)	97
20 - 29세	1,001(59.2)	690(40.8)	1,691	1,127(59.5)	769(40.6)	1,895
30 - 39세	2,195(72.5)	834(27.5)	3,029	937(53.6)	810(46.4)	1,747
40 - 49세	1,740(69.7)	754(30.2)	2,495	586(33.6)	1,157(66.4)	1,743
50 - 59세	916(63.2)	534(36.9)	1,449	255(26.6)	701(73.2)	957
60세 이상	197(33.0)	400(67.0)	597	40(9.3)	391(90.7)	431
합계	6,053(64.8)	3,285(35.2)	9,338	2,954(43.0)	3,916(57.0)	6,870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2009)
주: 2008년 기준임.

- 고학력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도 35세 이상부터 크게 줄어들며 지속적으로 감소
- 20~35세 이전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60%대를 보이나, 35세 이후 30~40%대로 낮아짐

< 연령별 고학력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 >



자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주: 고학력자는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자를 가리키며 2007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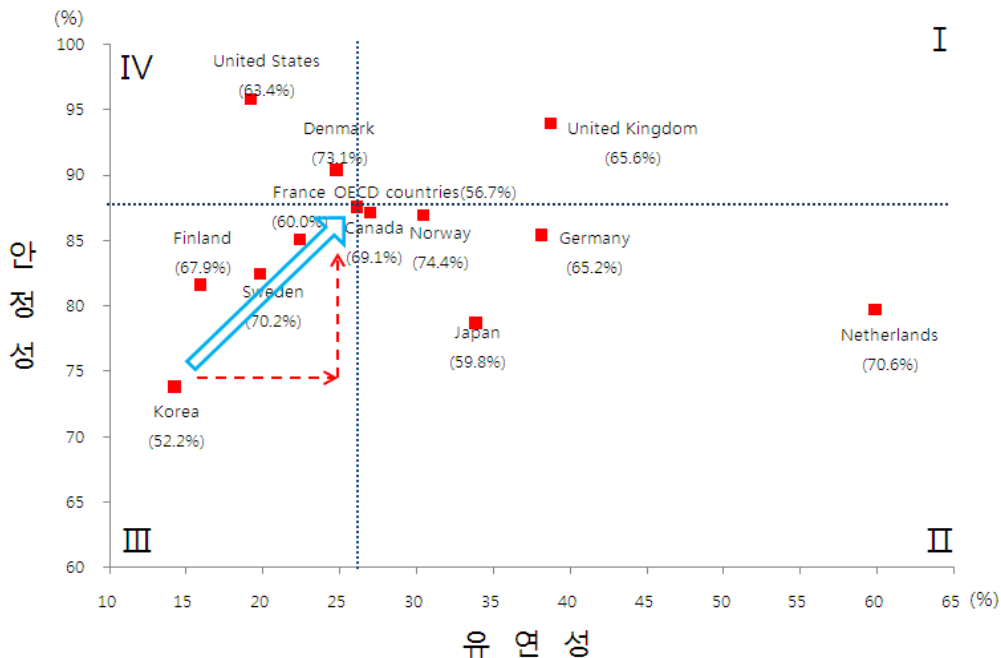
(3)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경로

□ 단계적 경로를 제안

○ OECD 주요국의 여성 고용의 유연·안정성 및 고용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 3가지 지표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남

-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이 모두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3사분면 하단에 위치
- 미국과 덴마크는 유연성은 평균보다 낮지만 안정성과 고용률이 높은 4사분면에 위치함
- 영국의 경우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1사분면에 있고,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유연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평균보다 낮은 2사분면에 있음

< 세계 여성 경제활동 상황 비교 >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1: 유연성은 OECD 기준 파트타임 종사자의 비중, 안정성은 정규직 종사자의 비중, 괄호()는 여성 고용률을 나타냄.

주2: 미국의 안정성과 유연성 지표는 2005년, 고용률은 2009년이며 나머지는 2009년 기준임.

주3: 파트타임 종사자 비중은 여성 전체 피고용자, 정규직 비중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여성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계산.

- 풀타임과 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여성 고용률도 평균에 비해 높은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OECD 국가의 평균점을 향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고용률을 제고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함
- 고용의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이 모두 낮은 우리나라는 1단계로 유연성을 높여서 고용률을 제고하고, 2단계로 안정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로
 - 우리나라는 1단계로 유연근로(피플잡)의 비중을 높여서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2단계로 정규직(안정성)의 비중을 높여가는 단계적 경로가 바람직함
 - 여성 고용률이 낮고 임시직과 풀타임 근로 비중이 높은 한국이 단번에 파트타임-정규직이 많고 고용률도 높은 영국, 캐나다처럼 개선되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은 단계적 경로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피플잡)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남녀 간 형평의 제도화 등 단기 · 장기 대책이 조화를 이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책 과제

- 과제1 : 여성의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에서 정착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대시켜야 함
 - 지난 8월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되고 있는 유연근무제³⁵⁾를 공공부문에서 정착시키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23개 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연근무제에 대해 참가자의 8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76%가 근무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발표
 - 아울러, 근로계약 때 약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휴가를 주고 덜하면 초과근로를 시키는 이른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도 근로시간과 형태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35)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총무청(GSA), 인사관리처(OPM)을 중심으로 원격근무를 추진하면서 연방공무원의 5%(102,900명)이 원격근무에 참여중이며, 영국은 국가공무원의 20%(10만명), 지방공무원의 50%(130만명) 이상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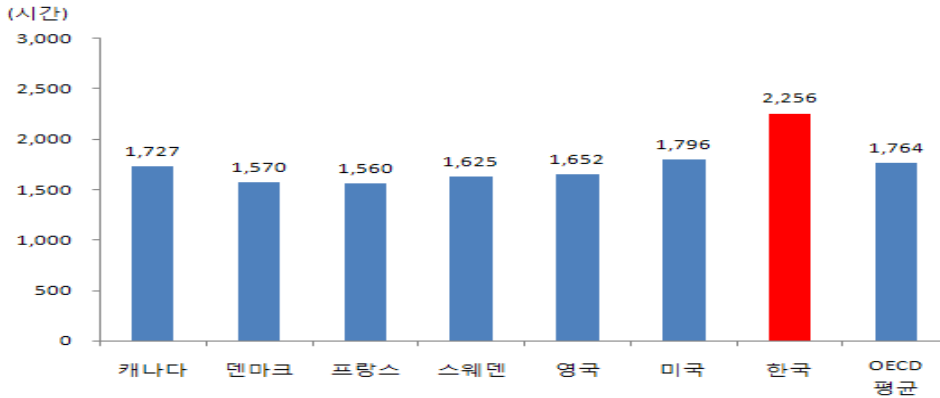
< 국내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 >

구분	내 용
단시간 근로	주 30시간 미만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5.5%이나 한국은 9.8%(08) 수준
시차출근제	2008년 기준 일반기업 5.6%, 공공부문 2009년 12월 기준 3.46%
재택근무제	2008년 기준 일반기업 3.4%
기타	집중근로시간제 3.6%, 직무공유제 6.0%, 파트타임 전환제 3.8%

자료: 관계부처합동,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2.18.

- 국내 근로자의 높은 업무강도 및 남성 중심의 근무환경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선진국들이 2,000시간 미만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764 시간보다 높음

< OECD 주요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 비교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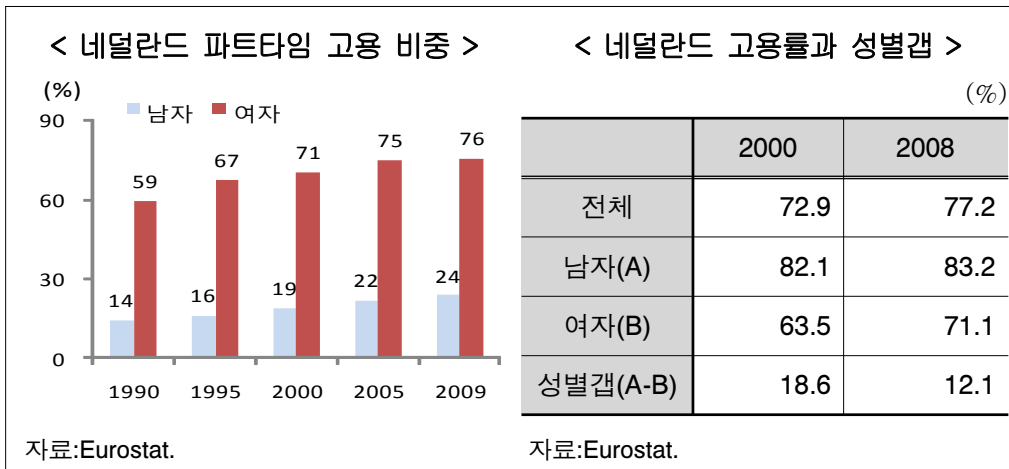
주: 2008년 기준임.

- 여성의 가사부담 및 육아의 역할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증대를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의 확대가 필요
- 현재 국내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도입 및 시행이 미미한 수준임
- 양육 시기에 근로 시간을 줄여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 기혼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킴

-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파트타임에 대한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한계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파트타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 파트타임 일자리가 정규직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망 하에 법제도를 개선
 - 스웨덴·덴마크·프랑스 등의 육아기 파트타임제, 일본의 '단시간 정사원 제도', 싱가포르의 공공부문 파트타임 고용제도 등이 성공 사례임

<사례 1> 네덜란드³⁶⁾ : 파트타임 정규직 고용을 활용한 여성 경제활동 제고

-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고용 증가를 통해 여성의 노동력 참가를 확대
 -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근로문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억제하였으나, 파트타임 고용제의 확산으로 여성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짐
 - 네덜란드 여성 고용률은 **1980년 36.1%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으나, 2009년 현재 73.5%로 한국보다 19.6%p 높은 수준으로 올라섬**
 - 1980년대 이후 총고용 증가의 60% 이상이 파트타임 고용이며, 이는 여성 일자리 증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증가한 여성 일자리의 70% 이상이 파트타임 일자리임
- 파트타임 일자리는 여성 근로자에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 파트타임 고용의 비중은 1990년 31%에서 2009년 48%로 높아졌고, 특히 여성 파트타임 고용의 비중이 같은 기간 59%에서 76%로 17%p 높아짐
 - 여성 고용률 제고로 성별 고용갭도 2000년 18.6%에서 2008년 12.1%로 낮아짐
- 파트타임 중심의 여성 일자리 창출은 네덜란드에서 1.5모형을 발전시킴
 - 네덜란드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 높은 보육비용 보전, 남성부양 중심의 보수적 가족 모델을 가구당 1인 전일제(주 40시간)와 1인 시간제 근무(주 30시간)가 융합된 생계 모형(1.5 모델)으로 발전시킴
 - 시간제 근로의 도입과 시간제 노동의 차별 철폐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나아가 남성은 전일제 중심의 '일'과 여성은 시간제로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킴



○ **과제2 :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 완화와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

-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가정보육사와 같은 공공서비스 확대가 시급함
- 유형별 보육시설 중 직장 보육시설의 만족도가 3.9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운영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맞아 떨어지는 직장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각각 370개, 1,917개로 설치가 미미한 실정
-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주는 가정보육사 파견 서비스가 2008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다양한 공공보육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육시설의 유형별 만족도 및 설치 현황 >

(단위: 점, 개)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만족도(5점 만점)	3.73	3.87	3.61	3.99
시설수	1,917	1,470	14,368	37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2009).

36) 네덜란드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소규모 개방경제로 1990년대 극적인 일자리 창출 증대를 통해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고용 기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산업연구원(2004)

- 양육비 보조 정책도 저소득층 중심에서 만 5~6세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선진국들은 유치원 등 육아교육이 무상인 반면, 한국은 만 5세, 소득하위 20%미만 가구에게만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서비스의 제공과 탁아서비스 지원시 취업 중인 여성을 우대하는 제도를 검토
- 스웨덴, 핀란드 등 여성 고용률이 높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신청이나 탁아서비스 신청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사례 2> 덴마크: 영아를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덴마크는 생후 6개월 이후 영아를 위한 보육인프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비율 및 공공재정지원 대상 아동수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음
- 덴마크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출산 이후 고용률이 크게 떨어져(M자형 모델) 우리와 유사했으나, 워킹맘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늘어난 후 남녀 모두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델로 개선됨
- 덴마크는 공공보육을 통한 고용 지속과 부모의 노동권 보장에 초점³⁷⁾을 두고, 특히 영아보육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를 기초로 남녀 모두 전일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1999년 현재 0-2세 영아의 64%, 3-5세 유아의 91%, 6-9세 취학아동의 75%가 보육시설 이용 중이며, 1970년대 20%였던 0-3세 보육 충족률이 2000년대 초 70%까지 상승하는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 여건이 현저히 개선됨

○ 과제 3 :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화

- 현재 성차별금지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 남녀 간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녀 간 직종분리 현상이나 임금격차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근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

37) 공보육의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고용률도 높아짐[OECD(2004), 김혜원 외(2007)에서 재인용]

- 캐나다 등 영미 자유주의국가들의 경우,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활용하여 남녀 간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함

<사례 3> 캐나다: 고용·임금의 차별금지 법제화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제고

- 캐나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평등 시정을 통해 여성의 고용여건과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률을 크게 제고
 - 캐나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57.2%에서 2009년 74.4%로 여성 고용률도 '80년 52.5%에서 **2009년 69.1%로 대폭 높아짐**
- 캐나다는 1986년 고용형평법(EEA)과 임금형평법(PEA) 도입을 통해 채용, 승진, 능력개발, 처우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제도화
 - 고용형평법은 노동시장 진입, 승진, 훈련 등과 관련된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했고, 임금형평법은 성별 직종분리에 따른 임금불평등의 시정을 목적으로 성불평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임금차별이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고용형평법 시행 하에서 여성 노동력 비율은 사기업이 1987년 40.9%에서 2004년 43.4%로 정부기관이 42.0%에서 53.5%로 증가함

< 고용형평법하의 여성 노동력 비율>

(%)

	1987년	1999년	2004년
사기업, 공기업	40.9	44.8	43.4
연방정부기관	42.0	51.4	53.5
독립기관	-	-	55.1
기타 공공부문	-	-	18.0

자료: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김혜원 외(2007년)

2. 新성장동력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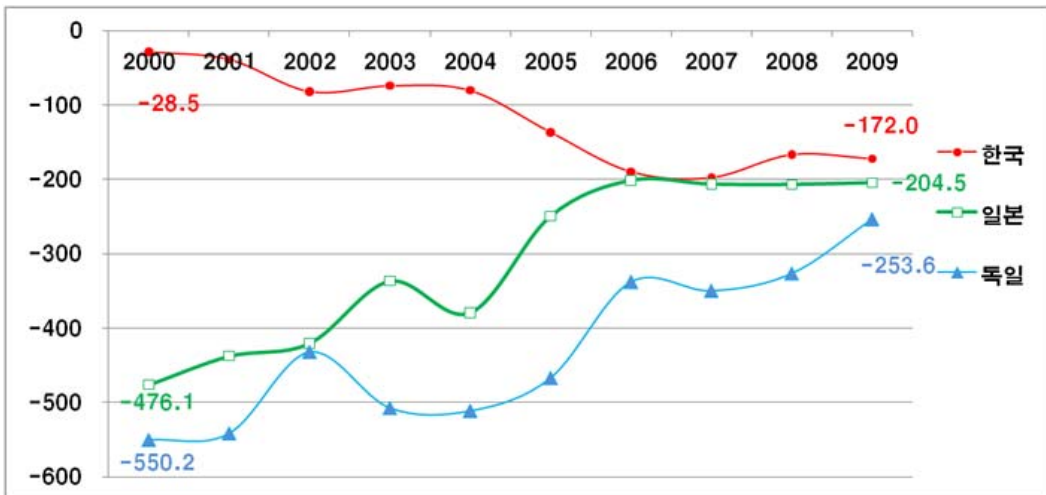
1) 서비스수지 개선

(1) 서비스수지 적자와 부문별 적자 추이

-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28.5억 달러에서 2009년 172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음
 - 반면 독일의 서비스수지는 2000년 -550.2억 달러에서 2009년 -253.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일본의 서비스 적자 규모 역시 2000년 476.1억 달러에서 2009년 204.5억 달러로 축소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한·독·일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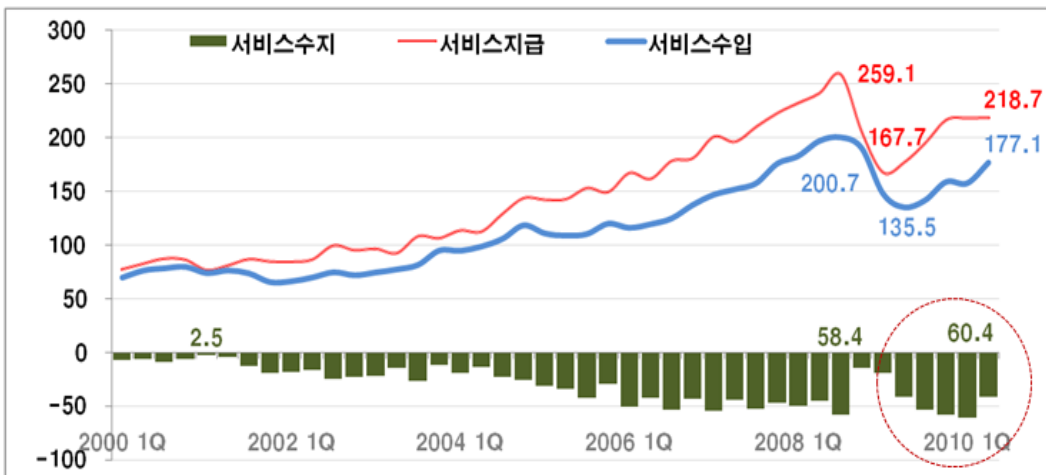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최근 들어 서비스 지급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8월 누적 서비스 적자는 134.9억 달러로 동기대비 37.7% 증가한 134.9억 달러를 기록함

- 서비스 지급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 침체 직전인 2008년 3분기 서비스수입과 서비스지급은 사상 최대치인 142억 달러와 195.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함
 - 2010년 2분기 서비스 지급은 전저점(2009년 1분기 167.7억 달러) 대비 51.1억 달러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입은 전저점(2009년 2분기 135.5억 달러) 대비 41.6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침
- 이 때문에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 급감하던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9년 2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음
 -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8년 3분기 58.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 4분기 14.4억 달러, 2009년 1분기 19.3억 달러로 급감함
 - 2009년 2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2010년 1분기 분기 누적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60.4억 달러를 기록함

< 분기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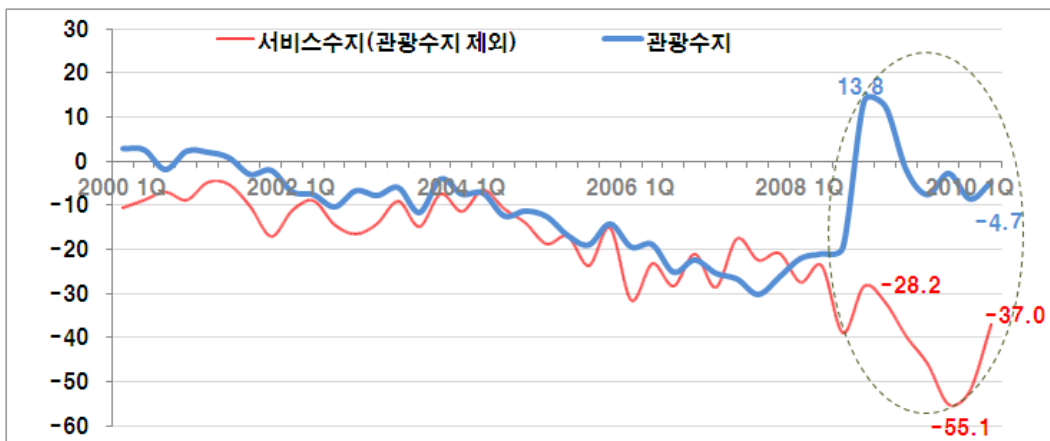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특히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는 그동안 서비스 적자의 주원인이었던 관광수지 개선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원화 약세에 따른 해외 여행 수요 감소로 관광수지(일반여행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
 - 원/달러, 원/엔, 원/위안 환율은 2008년 3분기 평균 1,062.6원, 988.8원, 155.3원에서 1,362.8원, 1,421.4원, 199.3원으로 급등함
 - 이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이던 관광수지는 2008년 4분기 이후 크게 개선됨
 - 관광수지를 제외한 서비스 적자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
 - 관광수지는 한국 서비스수지 적자에의 주원인이 되어 왔음
 - 관광수지를 제외한 서비스 적자는 2008년 4분기 28.2억 달러로 전기에 비해 2.3억 달러 감소함
 - 그러나 2009년 1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4분기에는 사상 최대치인 55.1억 달러의 적자 폭을 기록함
 - 2010년 1분기와 2분기 관광수지를 제외한 서비스 적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 분기별 관광수지를 제외한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서비스수지 적자는 운항항만경비, 유학연수, 특허권 등 사용료, 중개무역, 전문서비스업의 5대 분야에서 발생함

- 사업서비스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전문서비스와 중개무역 부문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사업서비스 적자는 2006년 71.7억 달러에서 2009년 157.9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로 전문서비스와 중개무역 수지 악화에 의한 것임
- 관광수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유학연수 부문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수지 적자를 유발시키는 5대 업종에는 운항항만경비, 유학연수, 특허권 등 사용료, 중개무역, 전문서비스가 포함됨
 -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의 서비스 적자를 유발시키는 주요 업종은 운항항만경비와 관광수지였으나, 최근 원화 약세로 인해 관광수지는 크게 개선됨
 - 운항항만경비 수지 적자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항목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서비스수지	운항항만경비	유학연수	관광 ³⁸⁾	특허권 사용료	중개무역	전문서비스 ³⁹⁾
2006 1H	-92.9	-40.1	-20.5	-38.2	-14.9	-14.9	-12.1
2006 2H	-96.8	-43.4	-24.4	-47.5	-11.2	-19.2	-13.6
2007 1H	-98.1	-49.4	-23.9	-52.1	-15.6	-19.6	-14.0
2007 2H	-99.6	-57.8	-25.9	-56.5	-18.4	-22.0	-14.4
2008 1H	-94.0	-61.0	-22.3	-43.0	-19.9	-25.4	-17.8
2008 2H	-72.7	-61.1	-22.0	-5.7	-12.8	-26.2	-23.2
2009 1H	-60.9	-38.5	-16.2	10.7	-12.2	-19.2	-23.0
2009 2H	-111.1	-42.8	-23.3	-10.1	-26.5	-28.8	-26.5
2010 1H	-102.1	-53.8	-20.4	-13.1	-25.0	-21.3	-24.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8) 국제수지표 상 여행수지는 유학연수와 일반여행으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여행과 여행수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관광수지라는 용어를 사용함.

39) 표준통계에 분류에 따르면, 전문서비스에는 법률, 회계 및 세무, 광고,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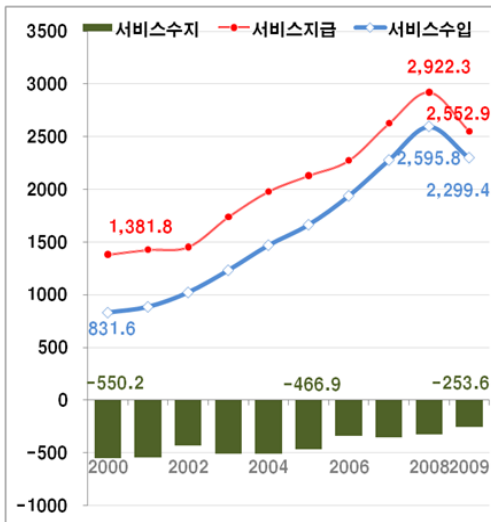
(2)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특징

○ 한국과 달리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음

- 독일은 서비스지급보다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독일의 서비스 적자는 2000년 550.2억 달러에서 2008년 326.5억 달러 그리고 2009년에는 253.6억 달러로 축소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의 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12% 증가한데 반해 서비스 지급은 7.1% 증가하는데 그침
- 일본 역시 서비스지급보다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일본 서비스 적자는 2000년 476.1억 달러에서 2009년 204.5억 달러로 개선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의 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5.6% 증가한데 반해 서비스 지급은 2.4% 증가하는데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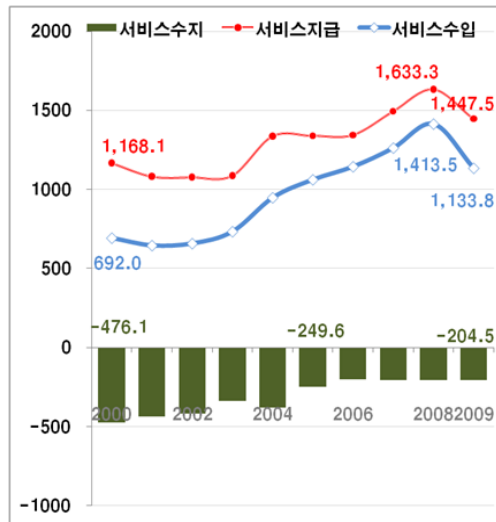
< 독일 연도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 일본 연도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 독일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업서비스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됨

- 독일은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함⁴⁰⁾
 - 의료서비스, 환경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지식집약서비스를 수출 유망 서비스 분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함
 - 1990년 이후 R&D 지원액의 15%가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원됨
- 독일의 여행수지는 크게 악화되는데 반해 건설서비스, 금융, 컴퓨터, 사업서비스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 건설서비스와 컴퓨터서비스 수지는 2000년 -7.2억 달러와 -11.6억 달러에서 2008년 33.4억 달러와 16.2억 달러로 흑자 전환됨
 - 특히 사업서비스수지는 2000년 -80.1억 달러에서 2008년 129.8억 달러로 209.8억 달러가 개선됨

< 독일 연도별 세부 항목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운수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 서비스	개인 문화 오락	정부 서비스
2000	-55.8	-344.8	-16.9	-7.2	-3.3	9.0	-11.6	-26.8	-80.1	-32.0	20.5
2001	-45.3	-338.4	-15.8	-5.3	6.0	9.7	-12.6	-21.8	-104.5	-35.0	31.2
2002	-56.4	-330.8	-18.0	4.8	60.7	13.4	-6.6	-14.6	-101.8	-17.3	49.3
2003	-80.9	-421.3	-14.0	16.7	32.9	16.0	-5.8	-8.4	-67.0	-19.2	57.4
2004	-77.0	-438.3	-14.1	12.2	-15.7	16.5	-0.6	-3.2	-17.0	-21.9	66.4
2005	-48.9	-451.6	-15.8	38.4	-25.8	20.2	-1.7	-15.0	28.0	-23.3	45.9
2006	-69.0	-411.1	-17.7	48.7	12.6	27.4	6.6	-23.3	97.8	-37.5	46.9
2007	-68.1	-469.8	-19.8	39.3	25.7	39.1	7.5	-29.7	101.7	-16.8	45.3
2008	-70.8	-507.5	-18.0	33.4	1.5	57.4	16.2	-31.2	129.8	-19.4	34.2
격차 ¹⁾	-15.0	-162.7	-1.2	40.6	4.8	48.3	27.8	-4.4	209.8	12.6	13.8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주 : 1. 격차는 2008년 실적과 2000년 실적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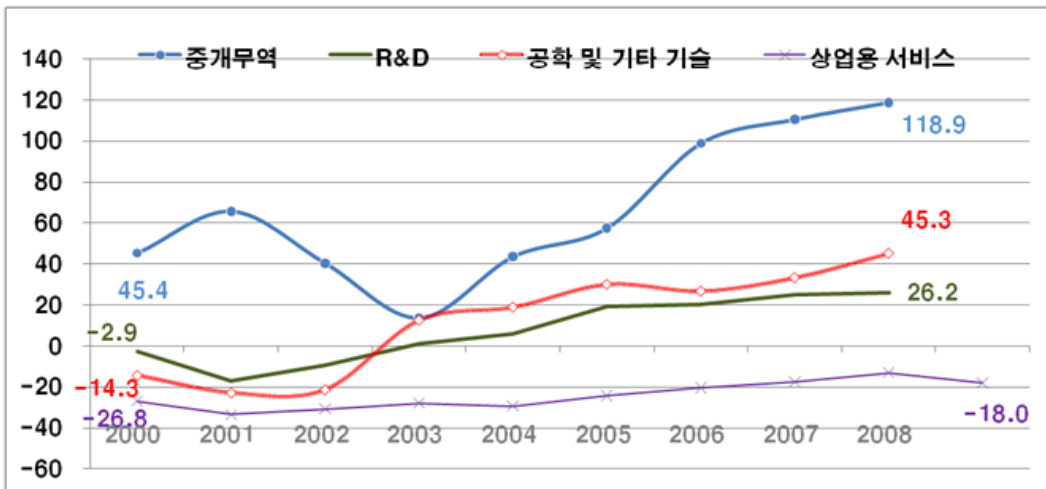
40) 산업연구원 산업별 기초분석.

- 독일의 사업서비스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R&D와 공학 서비스가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중개무역의 흑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R&D 수지는 2000년 -2.9억 유로의 적자에서 2008년에는 26.2억 유로로, 공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수지 역시 동기간 -14.3억 유로에서 45.3억 유로로 흑자 전환됨
 - 독일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 수지는 2000년 -14.3억 달러의 적자에서 2008년에는 45.3억 달러로 흑자 전환됨
 - 독일 중개무역의 흑자 규모는 2000년 45.4억 유로에서 2008년에는 118.9억 유로로 확대됨

- 반면 상업용 서비스 중 법률·회계·컨설팅 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됨
 - 상업용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0년 -26.8억 유로에서 2008년 -18억 유로로 크게 개선됨
 - UN 통계에 따르면 상업용 서비스 수지 중 법률·회계·컨설팅 수지는 2000년 -47.8억 달러에서 2008년 -59.6억 달러로 악화됨
 - 독일의 경우, EU 출범 이후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영미계 로펌들(law firm)에 의해 독일 로펌(law firm)들이 M&A되었기 때문임

< 독일 사업서비스 주요 업종 수지 추이 >

(단위 : 억 유로)



자료 : 독일연방은행 국민계정(Deutsche Bundesbank, Balance of Payments).

○ 일본은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여행 및 사업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되었고,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수지 역시 개선됨

- 일본은 비즈니스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함

- 일본은 2003년 ‘신산업창조전략’을 통해 콘텐츠산업, 건강 및 복지기기서비스, 사업서비스, 환경 및 에너지기기 서비스, 관광 및 집객교류 서비스의 5개 서비스업종을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⁴¹⁾
- 2006년에는 ‘신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인재파견, 실무교육서비스, 정보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함⁴²⁾
-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수립하고 2003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함⁴³⁾
- 일본 운수성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996년 ‘Welcome Plan 21’, 2000년 ‘신 Welcome Plan 21’, 2003년 ‘Visit Japan Campaign’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⁴⁴⁾

- 일본의 서비스 적자가 축소된 것은, 여행 및 사업서비스수지는 크게 개선, 특허권 등 사용료는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사업서비스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통해 사업 서비스수지는 2000년 -65.8억 달러에서 2008년 6.5억 달러로 흑자 전환됨
-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원천 기술 개발로 일본의 특허권 등 사용료는 2000년 -7.8억 달러에서 2008년 74억 달러로 흑자 전환됨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여행수지는 2000년 -285.2억 달러에서 2008년 -170.6억 달러로 114.6억 달러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본 서비스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함

41) 박연숙·최성호(2006),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사례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42) 최봉현 외(2009),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 방안”, 산업연구원.

43) 박귀현(2004),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추진동향과 시사점”, 무역연구소.

44) 김민우·노원종(2008),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한국은행.

< 일본 연도별 세부 항목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운수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 서비스	개인 문화 오락	정부 서비스
2000	-77.2	-285.2	-3.3	18.4	-18.5	9.8	-15.0	-7.8	-65.8	-11.6	-2.4
2001	-73.3	-231.8	-3.5	9.7	-27.6	10.6	-12.3	-6.6	-75.8	-12.7	-3.8
2002	-59.9	-230.3	-1.7	10.4	-35.8	15.0	-10.1	-5.8	-72.9	-8.8	-5.3
2003	-52.3	-200.0	-1.3	11.8	-31.6	13.0	-10.3	12.9	-50.6	-8.0	4.1
2004	-69.2	-269.8	-1.7	20.6	-23.7	17.5	-11.5	20.6	-27.2	-10.1	11.7
2005	-45.6	-250.9	-2.2	24.5	-10.6	23.7	-13.2	29.8	8.2	-10.2	6.7
2006	-51.9	-184.1	-3.0	27.9	-29.9	31.6	-21.6	46.1	9.3	-11.6	5.0
2007	-70.2	-171.5	-4.7	23.9	-27.8	26.0	-26.3	65.6	-19.2	-11.6	3.7
2008	-70.8	-170.6	-4.2	24.0	-41.7	14.7	-30.2	74.0	6.5	-10.6	2.1
격차 ¹⁾	6.5	114.6	-0.9	5.6	-23.2	4.9	-15.2	81.7	72.3	1.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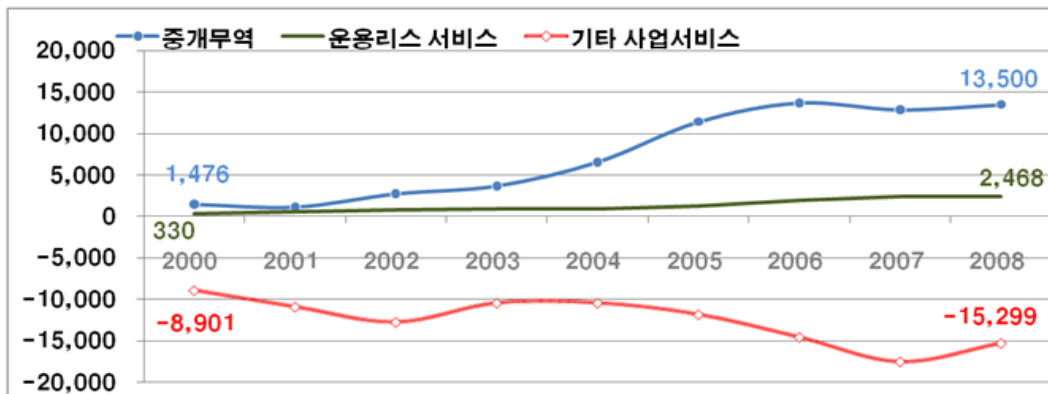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주 : 1. 격차는 2008년 실적과 2000년 실적의 차.

- 일본 사업서비스수지가 흑자 전환된 것은 중개무역 흑자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 일본 국민계정 상 사업서비스는 한국과 같이 중개무역, 운용리스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로 구분됨
 - 중개무역은 2000년 1,476억 엔에서 2008년 1조 3,500억 엔으로, 운용리스는 동기간 330억 엔에서 2,468억 엔으로 흑자 폭이 확대됨
 - 반면 전문서비스, R&D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는 2000년 -8,901억 엔에서 2009년에는 -1조 5,299억 엔으로 적자 폭이 확대됨

< 일본 사업서비스 주요 업종 수지 추이 >

(단위 : 억 엔)



자료 : 독일연방은행 국민계정(Deutsche Bundesbank, Balance of Payments).

(3) 정책적 시사점

-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된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적자 축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독일은 중개무역, R&D, 공학 및 기타 기술이 포함된 사업서비스 적자가 크게 개선됨
 - 일본은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중개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됨
 - 반면, 한국은 독일, 일본과 달리 중개무역, 전문서비스업,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유학연수 적자는 지속되고 해운항만경비 적자 규모는 확대되고 있음
- 첫째, 일본, 독일과 같이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종합상사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개무역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임
 - 일본과 독일의 중개무역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중개 무역의 거점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종합상사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를 구성하고,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둘째, 독일과 같이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통해 전문서비스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임

- 전문서비스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문서비스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분류하고 국내 전문서비스 업체가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 진출할 때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
- 셋째, 일본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를 축소해야 할 것임
-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신기술 개발 및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국내외 지식재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넷째,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일본과 같이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가 홍보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애로 해소의 방법까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영화 및 드라마로 형성된 한류를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과 같은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함

-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고, 해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
 - 글로벌 일류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국내 석박사 학위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한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연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⁴⁵⁾

○ 다섯째, 동북아 물류 허브로의 도약과 함께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항만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내 항만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향후 해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해외 항만 개발에 투자를 증가시켜야 함
 - 향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항만 이용 시, 개발된 항만을 적극 활용하여 운항항만경비 지급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이들 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환적을 유도하여 환적화물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연구위원 임상수 (02-2072-6239)

45)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교육시장의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참조.

2)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소재 산업의 현황

○ (문제제기) 최근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이 실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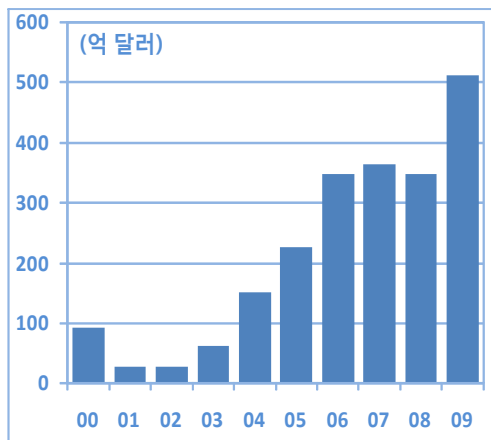
- 그동안 한국이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일부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000년 93억달러에서 2009년 512억달러로 증가 5배 이상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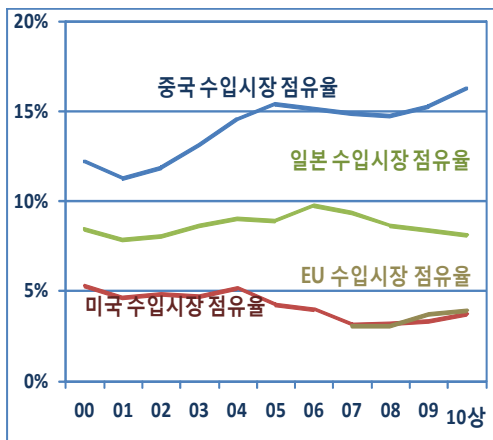
· 비록 미국, 일본 등의 시장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12.2%에서 2010년 상반기 16.2%로 4%p가 상승

- 이에 전체적인 부품·소재 산업 개선의 이면에서 부품과 소재로 나누어 볼 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첨단 기술 산업인 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 >



< 해외시장의 한국산 부품·소재 점유율 >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통계.

○ 소재 산업의 정의

- 부품·소재 산업은 최종재(완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원재료, 소재, 부품)로써 고부가, 고기술,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가진 산업**으로 정의
 - 부품·소재 산업에 대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정의**
 - 그러나 원재료와 중간생산물이 모두 부품·소재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중에서 **고부가, 고기술,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가진 산업**으로 정의⁴⁶⁾

- 소재 산업은 원재료를 최소한 1번 이상의 가공을 통하여 만들어지며 **제품 전체가 동일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기초 물질**로 정의
 - 현재 대부분 소재 산업 통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상의 산업의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음⁴⁷⁾
 - 소재는 원재료와 부품(또는 완제품)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간재를 의미하며 원유, 곡물, 면화, 양털 등의 원자재 개념을 가지는 원재료와 구분

○ 소재 산업의 현황

- **(사업체수)** 2008년 기준 소재 산업의 사업체수는 6,794개사로 제조업 사업체수의 11.6%를 차지하고 있음
 - 부품 산업의 사업체수는 1만 5,719개사로 제조업의 26.9%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 2008년 현재 소재 산업의 종업원수는 33.9만명으로 제조업 고용의 13.8%를 차지하고 있음

4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재료와 중간생산물중에서 ①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②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③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중 최소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음.

47) 보다 자세한 산업 분류는 **【별첨】 소재 산업 분류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상의 소재 산업 분류 >표** 참조.

- 부품 산업의 종업원수는 95.2만명으로 제조업 전체 고용의 38.8%를 차지하고 있음
- (생산 및 부가가치) 2008년 소재 산업의 생산액은 214.6조 원으로 전체 제조업 대비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액은 81.8조원으로 제조업 총부가가치 대비 22.3%의 비중을 가짐
 - 소재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의 제조업 비중은 각각 19.1% 및 22.3%로 사업체수 및 고용의 제조업 대비 비중보다 높아 제조업 평균보다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산업으로 판단됨
- (교역) 2009년 현재 소재 부문 무역수지는 90억 달러로 부품 부문 무역수지 423억 달러의 약 21% 수준
 - 2009년 소재 부문의 수출액은 563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473억 달러를 기록

< 부품·소재 산업 현황(개황 및 생산 2008년, 교역 2009년 기준) >

		제조업			
		부품·소재			
		부품	소재		
개황	사업체수(개사)	58,459	22,513	15,719	6,794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38.5%	26.9%	11.6%
	종업원수(만 명)	245.4	129.1	95.2	33.9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52.6%	38.8%	13.8%
생산	생산액(조 원)	1,123.0	480.0	265.5	214.6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42.7%	23.6%	19.1%
	부가가치액(조 원)	367.6	234.3	152.5	81.8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63.7%	41.5%	22.3%
교역	수출액(억 달러)	3635	1710	1147	563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47.0%	31.5%	15.5%
	수입액(억 달러)	3231	1197	724	473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37.1%	22.4%	14.6%
	무역수지(억 달러)	404	512	423	90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주: 개황은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 소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 (산업연관효과의 미약) 소재 산업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 전체와 부품 산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산유발효과 : 부품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92단위로 제조업 평균치(2.077)보다 크게 높으나 소재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74로 제조업과 전산업 평균치를 하회
- 또한 2000년과 2007년의 기간 동안 생산유발계수 변동을 보면, 부품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26에서 2.192로 0.166단위가 증가한 반면, 소재 산업은 0.040단위가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부가가치유발효과 :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부품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 당 0.631로 제조업 평균치(0.597)보다 높은 수준이나, 소재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97로 제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2000년과 2007년 동안 소재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감소폭은 0.064단위로 부품 산업의 감소폭(0.032단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부품·소재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2000(A)	2007(B)	B-A	2000(C)	2007(D)	D-C
제조업	2.003	2.077	0.075	0.639	0.597	△0.042
부품·소재산업	1.967	2.052	0.085	0.598	0.545	△0.053
소재 산업	1.934	1.974	0.040	0.561	0.497	△0.064
부품 산업	2.026	2.192	0.166	0.663	0.631	△0.032

자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산업연관표(기본부문) 400여개 산업, KSCI(8단위) 1,300여개 산업, PMSD부품·소재(5단위)산업 200여개 산업을 KSIC 코드를 기준으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선행
 2) 위 유발계수는 산업별 해당 기본부문의 유발계수들의 단순 평균치임.

○ (외화가득 능력의 취약)⁴⁸⁾ 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 규모는 부품 산업 외화가득액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며 2000~2007년 외화가득액 증감률도 제조업과 부품 산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24.5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230.7조원의 10.6%에 해당함
 - 그러나 부품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약 60조원으로 제조업 전체의 26.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84.4조원 제조업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00년과 2007년의 기간 동안 부품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90%가 증가한 반면 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 증가율은 38%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71.3%가 증가하여 제조업의 79.6%보다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함

< 부품·소재 산업 수출의 외화가득액 변화 >

산업 분류	외화가득액(조 원)		외화가득액 증감(B-A)	
	2000(A)	2007(B)	증감액	증감률
제조업	128.5	230.7	102.2	79.6%
부품·소재산업	49.3	84.4	35.1	71.3%
소재 산업	17.8	24.5	6.7	38.0%
부품 산업	31.6	60.0	28.4	90.0%

자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외화가득액 = 특정 산업의 수출액 - 특정 산업이 경제 전체에 유발하게 되는 수입액
- 2) 산업연관표(기본부문) 400여개 산업, KSCI(8단위) 1,300여개 산업, PMSD부품·소재(5단위)산업 200여개 산업을 KSIC 코드를 기준으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선행
- 3) 위 외화가득액은 산업별 해당 기본부문의 외화가득액의 합계임.

48) 외화가득액 (外貨稼得額, foreign exchange earning)이란 산업연관표상 부문별 수출액에서 부문별 수출의 수입유발액을 차감한 것으로 그 의미는 해당 부문의 수출이 경제 전체에 실제로 벌어들이는 외화수익을 의미함. 이와 연관된 개념으로 외화가득률 (外貨稼得率,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이 있으며 이는 해당 부문의 외화가득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 (수입률의 상승)⁴⁹⁾ 국산 소재의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 전산업의 생산에 이용되는 소재 품목에 대한 수입률은 2000년 33.6%에서 2007년 37.9%로 4.2%p가 증가함
 -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같은 기간 국내 소재 시장의 수입침투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 국산 소재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반면, 부품 품목의 수입률이 같은 기간 30.1%에서 29.2%로 오히려 0.8%p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 수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전체 수입률은 2000년 32.8%에서 2007년 35.2%로 2.4%p가 증가함
- 한편, 제조업 전체 수입률은 2000년과 2007년 모두 25.1%를 기록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국산 제조업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품·소재 산업의 수입률 >

	2000(A)	2007(B)	차이(B-A)
제조업	25.1%	25.1%	0.0%p
부품·소재산업	32.8%	35.2%	2.4%p
소재 산업	33.6%	37.9%	4.2%p
부품 산업	30.1%	29.2%	△0.8%p

자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수입률 = 수입중간재 투입액 / (총중간재 투입액)

= 중간재수입액 / (국산중간재 투입액 + 수입중간재 투입액)

2) 산업연관표(기본부문) 400여개 산업, KSCI(8단위) 1,300여개 산업, PMSD부품·소재(5단위)산업 200여개 산업을 KSIC 코드를 기준으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선행

3) 위 수입률은 산업별 해당 기본부문의 수입률들의 단순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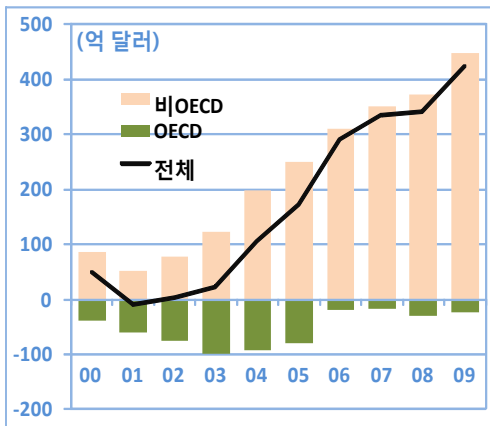
49) 수입률은 부문별 산업연관표 비경쟁수입형표(총거래표)상 내생 부문 중간재 투입액 대비 경쟁수입형표 중 수입거래표상 내생 부문 중간재 투입액의 비중임. 따라서, 수입률은 해당 산업의 효과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의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률 또는 역으로 국산화율을 의미함.

○ (대 선진국 무역역조 심화) 소재 산업은 후진국과의 교역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으나 하이테크 제품 경쟁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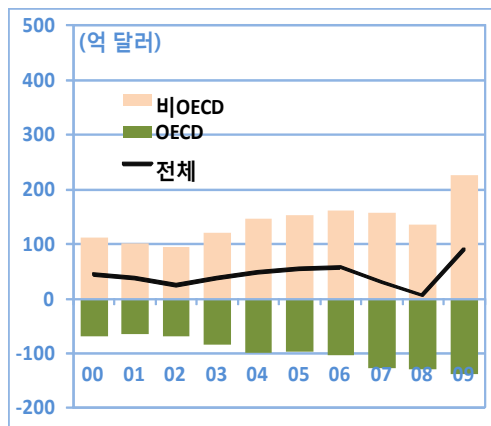
-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전세계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0년 93억 달러에서 2009년 512억 달러로 개선되고 있음
 - 소재 부문 무역수지는 2000년 44억 달러에서 2009년 90억 달러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부품 부문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49억 달러에서 423억 달러로 약 9배가 증가함
- 부품 산업의 비OECD국가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재 산업의 비OECD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OECD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커지는 모습을 나타냄
 - 2009년 소재 산업 교역은 비OECD 국가들에 대해서 227억 달러 흑자, OECD국가들에 대해서는 1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부품·소재 산업의 경제권별 무역수지 >

<부 품>



<소 재>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 (R&D투자의 미흡) 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그 성과도 부품 산업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투자 : 부품 산업에 비해 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기준 소재 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2조 644억 원인 반면 부품 산업 연구개발비는 15조 719억 원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매출액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인 R&D 집약도 (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는 2006년 기준 소재 산업이 0.6577로 부품 산업의 4.0848보다 크게 낮은 수준
- 특히, 부품 산업의 R&D 집약도는 2001년 3.9488에서 2006년 4.0848로 높아진 반면 소재 산업은 1.0365에서 0.6577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 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부품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그 결과 소재 산업의 특허 건수도 미약한 수준을 기록함

- 소재 산업의 특허 건수는 2006년 기준 2만 2,699건으로 부품 산업의 13만 8,161건의 16.4%에 불과함
- 특히 부품 산업의 특허 건수는 2001~2006년 기간 동안 1.6배가 증가하였으나 소재 산업은 같은 기간 1.3배가 증가하는 데에 그침

< 부품·소재 산업의 R&D 집약도 및 특허 건수 >

항 목	산 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R&D집약도	부품·소재	2.6383	2.6316	2.7586	2.7608	2.6910	2.5096
	부 품	3.9488	3.7919	4.0385	4.0605	3.9274	4.0848
	소 재	1.0365	0.9826	0.8809	0.9163	0.8721	0.6577
특허건수	부품·소재	104,082	105,053	117,170	138,049	155,785	160,860
	부 품	86,716	87,807	99,707	119,644	134,424	138,161
	소 재	17,366	17,246	17,463	18,405	21,361	22,699

자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2008),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분석』 <위탁수행기관-한국산업전략정보연구원>에서 인용.

주: 1) 연구개발비 = 개발비 + 경상개발비(순의계산서) + 개발비상각 + 경상개발비(제조원가명세서)

2) R&D 집약도 = 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

(3) 시사점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대부분 제조업종들이 개도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술격차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은 소재 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20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부품·소재 발전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다보니 부품 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 첨단 기술들이 체화된 산업인 소재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향후 한국이 기술중속국으로 몰락할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

둘째, 소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관련 연구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재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전공 관련 연구직으로의 취직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됨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연구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 출입국 행정 편의 제공 등과 같은 해외 고급 연구 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소재 산업의 빠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제휴를 장려하고 R&D 센터의 국내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셋째, 고위험-고수의 업종인 소재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 소재 산업이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소재 부문에서의 시장진입과 점유율 확대는 대규모 리스크가 수반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신뢰성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의 범위를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신뢰성 보험 : 수출보험공사에서 국산 부품소재 구매기업에게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넷째, 수요 기업과 소재 생산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소재에 대한 국산 화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 부문에 대해서는 그 육성 전략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요 타겟 시장을 해외로 겨냥하기보다는 국내 수요 확충을 통해 산업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소재 수요 기업에 대해서 국산 소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나,
·금융세계 상의 직접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되기보다는 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공동 연구 및 제품개발 등의 형태로 자연스러운 결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별첨】 소재 산업 분류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상의 소재 산업 분류 >

분 야 (KSIC No.)	적용 범위	KSIC 세분류 번호
섬유제품제조업 (17)	섬유방적사 (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방적사는 무기질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에 한한다.)	1710
	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섬유직물에 한한다.)	1720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 (호부, 기타섬유염색 및 정리가공품을 제외한다.)	1740
	부직포 및 펠트	17993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17994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공업용 기타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및화학제품 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유도체에 한한다.)	24111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1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29
	무기안료,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	2413
	합성고무	24151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24152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제제	2421
	농약원제 및 중간체	24312
	공업용도료 및 관련제품	24321
	공업용인쇄잉크	24323
	계면활성제	24331
	공업용 사진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24392
	접착제 및 젤라틴	24393
공업용 기타분류안된 화학제품	24399	
	화학섬유	244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25111

82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공업용 비경화고무제품	25191
	공업용 기타고무제품	25199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5211
	엔지니어링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25212
	극세사합성피혁	25213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2524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 (두께 1.5mm이하에 한한다.)	26111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유리	26121
	판유리 가공품	26122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26129
	공업용 도자기 (파인세라믹을 포함한다.)	26213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전주내화물에 한한다.)	26221
	기능성석회 (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26312
	연마휠	26991
	초미립 비금속광물 (평균 입경 1.0 μ m 이하에 한한다.)	26992
	공업용 내화단열재	26993
	탄소섬유	26994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999
제1차금속산업(27)	합금철	27112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27121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 (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27122
	철강선 (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27123
	주조한 관연결류	27131
	강관 (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27132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 (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27191
	그 외 기타 철강제품	27199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품	2721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2722
	철강주조제품 (회주철을 제외한다.)	2731
	비철금속 주조제품	2732

3. 미래투자 확대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국내 1등기업의 혁신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1) 혁신능력,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

- 심화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은 기업성과 및 성장잠재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R&D 경쟁력을 꼽음
 - 세계 1000대 R&D 기업의 임원(Senior Executive)들은 기업전략의 핵심요소로 혁신능력을 꼽음 (Booz & Company, 2009, Global Innovation 1000 Survey)
 - 임원의 90% 이상이 기업의 도약을 위해 혁신능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R&D 투자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경제위기를 세계시장 재편의 기회로 인식하고, 공격적인 R&D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세계적 기업의 임원들은 경제위기가 경쟁자를 제치는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핵심수단으로 공격적인 R&D 투자전략을 꼽음
 - IBM의 임원인 Adalio Sanchez는 “경제위기가 혁신을 강화하는 촉매제”라고 말했으며, 상당수의 임원들은 “만약 경제위기 때 R&D를 줄인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함
 - 실제로 미국 발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던 2008년, 1000대 R&D기업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8.6%, 34%씩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규모를 5.7% 증가시킴
- 국내 주력산업별 1등기업과 미국, EU, 일본 1등기업의 혁신능력을 비교분석하고, 세계 1등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의 주력산업인 전자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중공업(조선산업 포함)을 대상으로 주요국의 1등기업을 비교분석함
 - 특히 세계경제위기로 열린 기회창(window of opportunity)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력산업에서 한국기업이 세계 1등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R&D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한국, 미국, 일본, EU의 1등기업 간 혁신능력 비교

□ 연구방법 및 자료

○ (연구방법) 산업마다 기술특성과 시장특성이 다른 만큼, 산업별로 혁신능력을 분석하고자 함

- 기술변화가 빠르고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이 중요한 산업일수록 R&D 집중도($\frac{RnD}{매출액} \times 100$)가 높고 R&D 투자규모가 크며, 특허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평균 R&D 집중도는 6.93%에 달하는 반면 철강산업은 0.80%에 불과함
-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는 특허 1개를 생산하는데 평균 260만 파운드가 소요되는 반면 자동차산업에서는 그보다 12.4배가 많은 3,250만 파운드가 소요됨
- 이처럼 산업마다 혁신특성이 다르므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임

○ (자료)

- 기업의 혁신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R&D 투자규모 및 R&D 집중도, 특허등록 건수를 사용하고,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사용함
- R&D 투자규모, R&D 집중도, 영업이익 관련 자료는 영국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The 2005~2009 R&D Scoreboard: 세계 R&D투자 1000대 기업”을 사용함
- 특허등록 건수는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Patent by Organizations 2004~2008”을 사용함
- 한편 1등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2008년도 R&D투자규모’임

□ 분석 결과

○ (개관) 한국의 산업별 1등기업은 미국, EU, 일본의 1등기업에 비해 혁신능력이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철강산업에서 한국1등기업은 세계1등기업을 3년 내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는 추격이 정체되어 있음
- 또한 자동차산업 및 중공업(조선산업 포함)에서 한국1등기업은 미국, EU, 일본 1등기업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으며,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음

① 전자정보통신산업

○ (혁신특성) R&D 집중도 및 R&D투자규모, 특허등록 건수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술변화가 빠르고 R&D투자를 통한 생존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알 수 있음

-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총 R&D 투자규모는 2004년 874억 파운드에서 2008년 1,250억 파운드로 연평균 9.35% 증가하였고, 2008년 R&D 집중도는 6.93%에 달함
 - 개별 기업의 R&D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R&D전략을 중시하고 있음을 뜻하며, R&D투자 강화를 통한 생존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반영함
-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현상이 두드러짐
 - 이러한 융합현상을 반영하여 전자부품·장비산업, IT하드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이동통신산업을 통합해 전자정보통신산업으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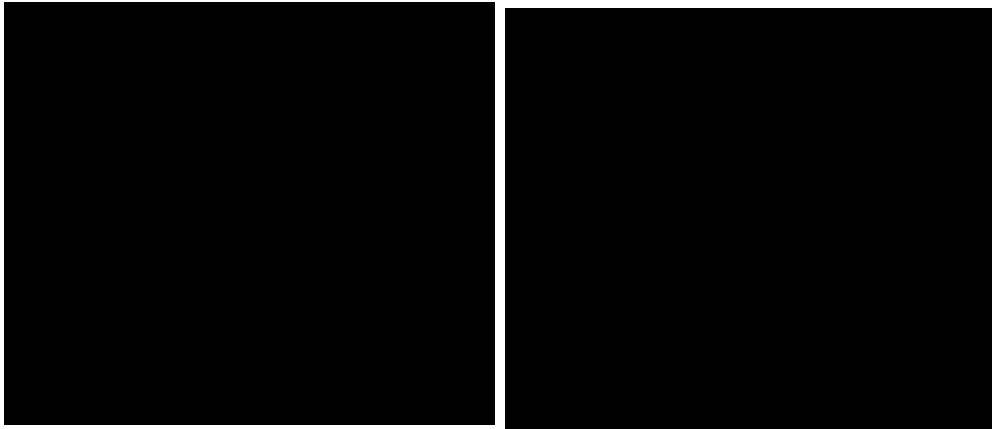
○ (R&D 비교) 한국1등기업(삼성전자)의 R&D 투자규모는 미국1등 기업(Microsoft)의 3/5 수준, EU1등 기업(Nokia)의 3/4 수준이며, 지난 4년간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R&D투자규모는 38억8,500만 파운드로 미국1등기업의 3/5 수준, EU1등기업의 3/4 수준임
 - 미국1등기업과의 R&D투자규모 격차는 2004년 15억9,4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24억1,500만 파운드로 벌어졌으며, EU1등기업과의 격차도 9억9,900만 파운드에서 12억9,300만 파운드로 조금 더 커짐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는 5.75%로 미국1등기업의 15.42%, EU1등기업의 10.49%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 격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매출액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R&D 투자규모 추이 >

< R&D 집중도 추이 >



자료: 영국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The 2009 R&D Scoreboard: 세계 R&D투자 1000대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계산

- 주: 1. 산업분류기준은 Dow Jones와 FTSE가 개발한 산업분류기준(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임. 단,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전자부품·장비산업, IT하드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이동통신산업을 포함함
2. 회계연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를 수 있음
3. 영국 파운드화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달러나 원화로 산출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4. R&D집중도 = (R&D/매출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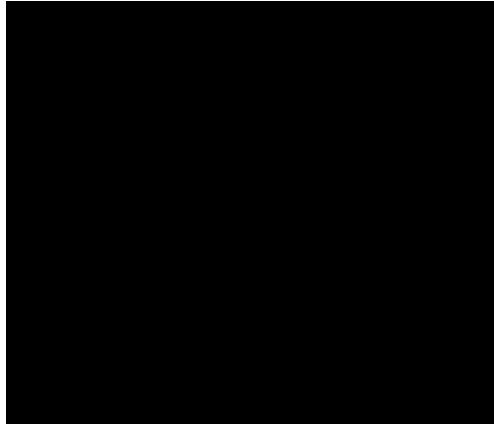
○ (특허비교) 한국1등기업은 미국1등기업에 비해 특허등록 건수에서 앞서나,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지난 5년간 한국1등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는 3,502개로 미국1등기업의 2,026개보다 앞서나, 연평균 특허증가율은 미국1등기업의 34.0%보다 낮은 21.6%임
- EU1등기업의 R&D투자규모는 한국1등기업의 1.3배 수준이지만 특허등록 건수는 1/6 수준에 불과함
-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별 혁신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Microsoft)보다 전자부품·장비산업(삼성전자)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 특허를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함

< 특허 추이 >

< 영업이익 추이 >

기업명 (국가명)	특허등록 건수		
	2004	2008	5년 합계
삼성전자 (한국)	1,604	3,502	11921
Microsoft (미국)	629	2,026	6501
Hitachi (일본)	1,514	1,301	7199
Nokia (EU)	367	608	2586



자료 :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Patent by Organizations 2004-2008”

○ (기업성과)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미국1등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추세임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36억5,500만 파운드로 미국1등기업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도 미국1등기업의 18.3%보다 낮은 5.3%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쟁사인 EU1등기업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냈으나, 2008년에 다시 역전을 허용함

② 자동차산업

○ (혁신특성) 과학기술 능력과 인적·조직자본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R&D집약도 및 특허등록 건수가 전자정보통신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철강산업 및 중공업보다는 높은 수준임

- 자동차산업은 과학기술 능력(명시적 지식)과 근로자의 노하우(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임
- 자동차기업은 R&D 투자전략뿐만 아니라 인적·조직자본 강화전략을 기업전략의 중심에 놓음

-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의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학습 패러다임을 'learning by doing'(암묵적 지식)에서 'learning by research'(명시적 지식)로 확장시킨 데 있음⁵⁰⁾
 - 이는 근로자의 노하우(암묵적 지식)에 공격적 R&D전략을 접목시켜 추격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됨

- 자동차산업의 총 R&D 투자규모는 2004년 694억4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550억2,900만 파운드로 연평균 10.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산업의 2008년 R&D 집중도는 4.43%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6.93%보다 낮고, 철강산업의 0.80%, 중공업의 2.81%보다는 높음
 - 특허를 통한 기술보호 또한 전자정보통신산업보다 낮으나, 철강산업 및 중공업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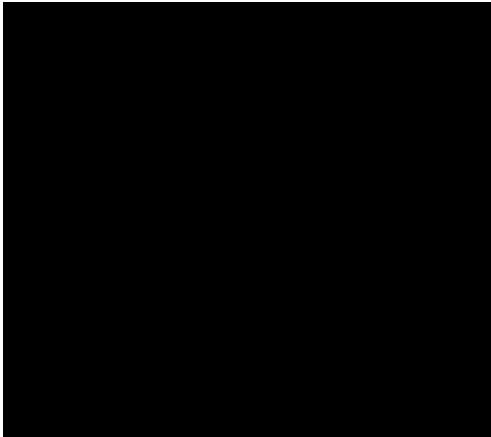
- **(R&D 비교) 한국1등기업(현대자동차)의 R&D 투자규모는 일본1등기업(Toyota)의 1/6 수준, 미국1등기업(GM)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임**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R&D 투자규모는 12억1,000만 파운드로 일본1등기업의 1/6 수준, 미국1등기업의 1/5 수준에 불과함
 - 특히 한국1등기업은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R&D 투자규모를 줄임
 - 반면 일본1등기업은 지속적으로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EU1등기업도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늘림

 - 한편 2008년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는 2.75%로서, 선발기업인 GM, Volkswagen, Toyota, Ford의 5.37%, 5.21, 3.65%, 4.99%보다도 낮음
 - 뿐만 아니라 후발기업인 Honda의 4.90%, Daimler의 4.63%, Nissan의 4.23%, BMW의 5.38%, Peugeot의 4.36%, Renault의 6.12%보다 낮아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결국 한국1등기업과 경쟁사의 R&D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 일본1등기업과의 격차는 2004년 45억1,1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61억4,800만 파운드로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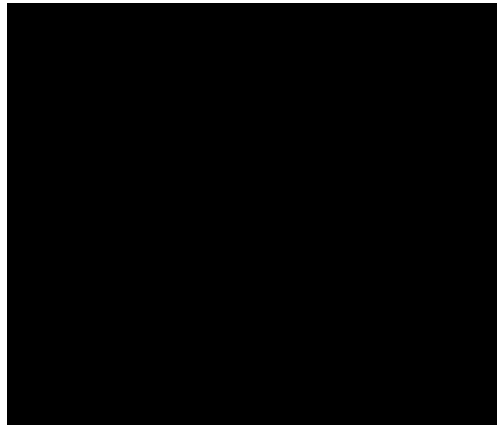
50) Kim, Linsu (1998), "Crisis Construc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Building in Catching-up at Hyundai Motor", Organization Science, Vol. 9, No.4, 506~521

- 이는 한국1등기업이 경쟁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R&D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뜻하며, 세계5위의 자리를 수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뜻함
 - 한국1등기업이 아무리 인적·조직자본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과학기술 역량이 지속적으로 뒤처진다면 세계1등기업으로의 도약은 어려울 것임
- 특히 세계경제위기 때 공격적인 R&D전략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임
 - 2008년 202억8,600만 파운드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미국1등기업은 R&D에 55억6,400만 파운드를 투자한 반면, 영업이익 16억9,100만 파운드인 한국1등기업은 12억1,0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데 그침

< R&D 투자규모 추이 >



< R&D 집중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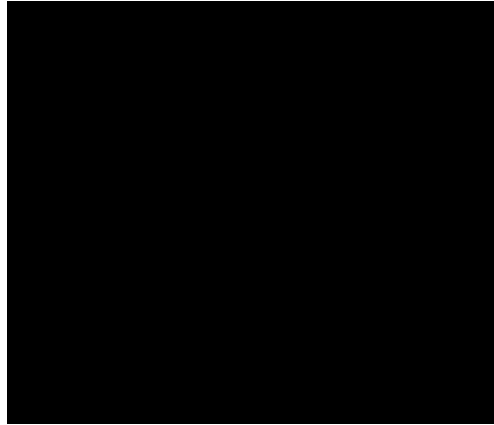


- (특히 비교) 특허등록 건수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1등기업의 5년간 특허등록 건수는 575건인 반면 일본1등기업은 1,657개, 미국1등기업은 1,795개에 달함
 - 또한 지난 5년간 R&D 투자규모 격차가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특허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허 추이 >

기업명 (국가명)	특허등록 건수		
	2004	2008	5년 합계
현대자동차 (한국)	110	104	575
GM (미국)	376	194	1,795
Toyota (일본)	264	387	1,657
Volkswagen (EU)	-	-	-

< 영업이익 추이 >



주 :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연간 4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하는 기업정보를 공개함. Volkswagen은 40건 미만임.

○ (기업성과)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일본1등기업이나 EU1등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08년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16억9,100만 파운드로 일본1등기업의 1/11 수준에 불과하며,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도 일본1등기업의 31.8%보다 낮은 5.6%임
- 2008년 R&D 투자규모 면에서 미국1등기업을 앞선 EU1등기업(Volkswagen)의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위기의 중심에 놓였던 미국1등기업은 2008년 202억8,600만 파운드의 영업손실을 기록함

③ 철강산업

○ (혁신특성) 타 산업에 비해 인적·조직자본 능력이 중시되고 과학기술능력이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과학기술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전통적 인식과는 달리, 1990년대부터 차세대 혁신철강기술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강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공법이 출현하고 있음

- POSCO가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4위⁵¹⁾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를 기초로 전략적 기술기획, 최고경영진의 기술 리더십, 초기 단계의 정부지원 등이 적절히 결합되었기 때문임⁵²⁾
- 철강산업의 R&D 집중도는 0.80%로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6.93%, 자동차산업의 4.43%, 중공업의 2.81%보다 훨씬 낮음
 - 여타 산업에 비해 기술변화가 느리고 과학기술능력보다는 인적·조직자본 능력이 중시되는 산업특성을 반영함
 - 하지만 철강산업의 총 R&D 투자규모는 2004년 16억8,5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26억8,700만 파운드로 연평균 12.4%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R&D 비교) 한국1등기업(POSCO)의 R&D 투자규모는 일본1등기업(Nippon Steel) 및 EU1등기업(Arcelor-Mittal)과 비슷한 수준임
 - 한국1등기업의 2008년 R&D 투자규모는 2억7,400만 파운드로 EU1등기업의 2억500만 파운드보다는 크고 일본1등기업의 3억4,800만 파운드보다는 작음
 - 하지만 연평균 R&D 증가율은 일본1등기업의 6.5%보다 높은 15.6%로서,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1등기업은 적극적인 R&D 투자전략으로 일본1등기업과의 R&D 투자규모 격차를 2004년 1억1,8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7400만 파운드로 줄임
 - 이는 기술변화가 느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낮은 철강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1등기업이 공격적인 R&D투자전략을 통해 세계1등기업을 바짝 추격한 좋은 사례임
 - 3년 내에 한국1등기업의 R&D 투자규모가 일본1등기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1등기업이 R&D 증가율을 연평균 15.7%로 유지하고 일본1등기업이 연평균 6.4%를 유지한다면, 3년 내에 추월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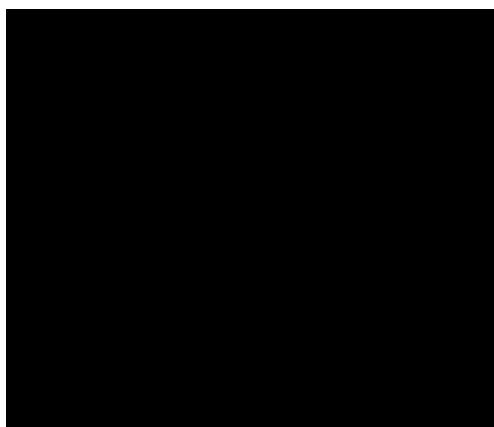
51) 2006년 기준 Arcelor-Mittal Steel, Nippon Steel, JFE Steel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

52) 이공래 외 (2008), 한국 선도산업의 기술혁신경로 창출능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R&D 투자규모 추이 >



< R&D 집중도 추이 >



- 주: 1. R&D투자액 기준 EU의 1등기업은 ThyssenKrupp(독일)이나, 철강뿐만 아니라 자본재, 서비스업을 겸하고 있어 POSCO와의 비교가 곤란에 무리가 따름. 반면 Arcelor-Mittal은 철강산업 1, 2위를 달리던 Mittal Steel과 Arcelor가 2006년에 합병한 기업으로서, 매출액 규모에서는 ThyssenKrupp을 앞서는 1위임
- 2. Arcelor-Mittal은 2006년 Mittal Steel과 Arcelor가 합병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표기하였고, Nippon Steel은 데이터 부족으로 2006년부터 표기함

○ (기업성과) 한국1등기업의 영업이익은 38억7,300만 파운드로, EU1등기업의 96억6,500만 파운드, 일본1등기업의 45억3,000만 파운드보다 적음

- 매출액 규모도 EU1등기업의 868억9,400만 파운드, 일본1등기업의 370억3,600만 파운드보다 작은 230억5,100만 파운드임
- R&D 능력 제고를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 짓는 전략이 요구됨

④ 중공업

○ (혁신특성) 조선(造船)기업들이 비조선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R&D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이 조선업계 1위로 올라선 원동력은 기술경쟁력 향상이었음
- 1999년 이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조선업계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07년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한국기업임

- 일본에 비해 생산능력과 품질이 다소 열위지만, 설계 및 개발능력, 마케팅능력, 기
자재 납기 등의 측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임
- 경기변동에 민감한 조선업계의 선두기업들은 최근 해양개발, 플랜트, 엔진, 로봇, 중
기계 등의 비조선 부문을 강화·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도 조선업계 1위를 굳건히 수성하는 가운데, 중공업 1등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조선산업을 포함한 중공업(Industrial Engineering)의 총 R&D 투자규모는 2004
년 66억6,600만 파운드에서 2008년 112억6,000만 파운드로 연평균 14.0%의 높
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R&D 집중도는 2.81%로서, 철강산업보다 높고 전자정보통신산업이나 자동차산업보
다 낮음
- (R&D 비교) 한국1등기업(현대중공업)과 미국1등기업(Volvo), 미국1등기업
(Caterpillar)과의 R&D 투자규모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일본1등기업
(Mitsubishi 중공업)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한국1등기업의 2008년 R&D 투자규모는 9,700만 파운드로 EU1등기업의 14억
3,000만 파운드, 미국1등기업의 12억200만 파운드보다 훨씬 작으며, R&D 성
장률도 EU1등기업의 20.1%, 미국1등기업의 16.8%보다 낮은 10.9%에 불과함
- 한편 현대중공업처럼 조선업으로 시작한 일본1등기업의 R&D 투자규모는 8
억2,800만 파운드로 한국1등기업보다 8.5배나 큼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1등기업의 R&D 집중도는 항상 경쟁사보다 낮음
- 한국1등기업의 2008년 R&D 집중도는 0.64%로서 EU1등기업의 5.35%, 미국1
등기업의 3.37%보다 낮으며, 일본1등기업의 3.37%에 비해서도 크게 뒤짐
- 한국1등기업과 세계1등기업의 R&D 투자규모 격차는 기술경쟁력 격차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음

< R&D 투자규모 추이 >



< R&D 집중도 추이 >



- (기업성과) 한국1등기업의 2008년 영업이익은 16억8,400만 파운드로 미국1등기업의 31억4,900만 파운드보다는 작으나, EU1등기업의 13억200만 파운드, 일본1등기업의 7억9,100만 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임
 - 한국에 밀려 조선업에서 비조선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일본1등기업의 경우, 높은 R&D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음
 - 한국1등기업의 경우 효자종목인 조선업에서의 1위를 굳건히 수성하면서 비조선업으로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음

(3) 세계1등국가 추격을 위한 정책과제

- (개관) 한국의 산업별 1등기업의 혁신능력이 미국, EU, 일본의 1등기업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혁신능력 강화 전략을 수립, 집행해야 함
- (기업차원) 한국의 산업별 1등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R&D 전략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변화가 빠른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 한국1등기업이 세계1등기업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R&D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한국1등기업이 R&D집중도를 현재의 4.75%에서 EU1등기업 수준(10.49%)까지 높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EU1등기업을 추월하고 미국1등기업을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평균 R&D 증가율을 현재의 9.2%에서 15%까지 높일 경우, 매년 8.5%씩 R&D투자를 늘리는 EU1등기업을 5년 내에 추월할 수 있음
- 자동차산업 한국1등기업이 세계1등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R&D 집중도를 현재의 2.75%에서 업계 평균인 4.4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본1등기업의 1/6 수준에 불과한 R&D투자규모를 높여야 함
 - 중공업 한국1등기업도 R&D 집중도를 현재의 0.64%에서 경쟁사인 일본1등기업의 3.37%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철강산업 한국1등기업은 지금의 공격적인 R&D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음
- R&D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을 중시하는 혁신문화를 형성하며, 근로자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기업의 혁신능력은 과학기술 능력만으로 치환되지는 않으며,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혁신활동에 참여하도록 인적자본과 조직자본을 재구성해야 함
 - 이를 위해 기술을 중시하는 혁신문화 형성,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요구됨
 - 한국1등기업의 성공 이면에는 경영자의 과감한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
 - 자동차산업 한국1등기업의 경영자는 ‘값싸고 품질이 적절한 차’에서 ‘제값을 받고 품질이 최고인 차’로 이미지를 바꾸는 품질경영을 제시하고, 국산엔진 개발, ‘10년 10만마일 파워트레인 보증’ 등의 배수진을 쳤으며, 여기에 목표를 향해 돌파하는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었음
 - 철강산업 한국1등기업의 경영자는 2020년대를 대비한 독자적 신기술 개발, 즉 용융환원 프로젝트와 스트립캐스팅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으며, 노사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자정보통신산업과 중공업의 한국1등기업 또한 마찬가지임

○ (정부차원)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비율을 10~15%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R&D 관련 세액공제 비율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3~5%이고 중소기업은 25%임
 - 반면 일본은 10~15%, 프랑스는 10%, 영국은 8.4%, 중국은 12.5% 수준임
 - 경쟁국과의 세액공제 비율 격차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공격적인 R&D 전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한 세계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중견기업이 공격적인 R&D 투자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비율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 10~1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 외에도 정부R&D지원, R&D 인프라구축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정책이 시급히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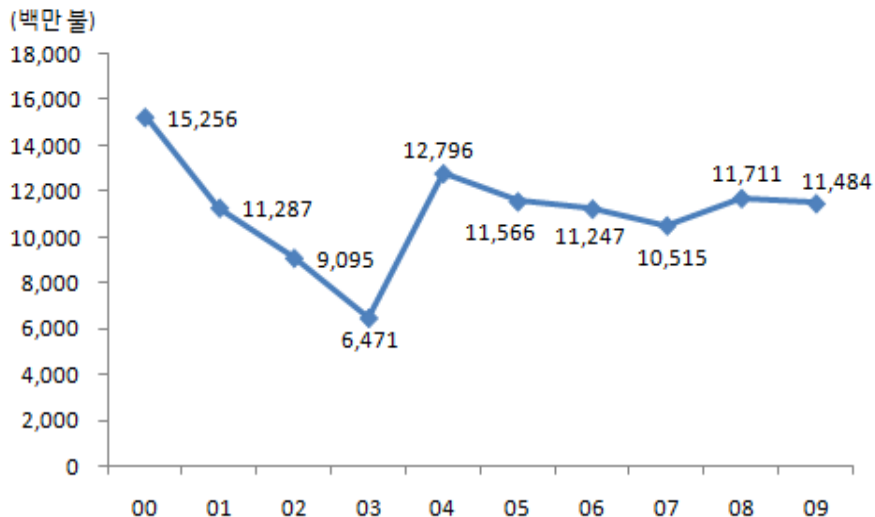
- 기술변화가 빠른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경우, R&D 관련 세제지원(세액공제)과 더불어 정부R&D투자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소프트웨어, 비메모리반도체 등 세계1등기업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R&D투자 및 근로자의 노하우가 중시되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R&D 관련 세제지원, 정부재정지원과 더불어 회사 내부적으로 인적역량·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 종합대책이 필요함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1) 외국인직접투자(FDI)⁵³⁾의 부진 현황과 특징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을 정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GDP대비 비중도 추세적으로 하락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152.5억불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여 2009년도에는 114.8억불을 기록
- 외환위기 직후 급증했던 투자자금이 2003년까지 빠져나간 후 정체 상태

< 외국인직접투자 연도별 투자실적 (신고기준) >



자료: 지식경제부

- 외국인투자의 GDP대비 비중도 '00년 1.8% 이후 하락하여 '09년 0.7%를 기록했고 독일, 중국, 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바 **FDI 활성화 노력이 필요**
-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FDI 증가율⁵⁴⁾은 일본 6%, 프랑스 10%, 이태리 21%였으나, 우리나라는 2007년 2만불 도달 이후 FDI 증가율이 4.8%로 낮고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음

53)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음. (자료: <http://www.investkorea.org>)

54) 예상한이만용,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08.12.16

○(제조업 비중 크게 하락) 산업별 외국인투자(FDI)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 유입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2009년도에 32.4%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의 투자와 상대적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6.1%를 기록⁵⁵⁾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60%내외에서 움직이면서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은 30%내외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10년간 서비스업의 평균 비중은 그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19%p가량 증가했으며, 반대로 제조업은 20%p가량 크게 감소함
- 최근 10년간 서비스업의 FDI 건수 합계는 2만5천여 건으로 1990년대에 비해 5.5배 증가했으며, FDI 금액도 3.8배 급증함

<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산업별 비중 추이 >

(단위: 건, 백만 달러,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2000	832	6,877	45.1	3,259	8,121	53.2	54	259	1.7
2003	588	1,699	26.3	1,921	4,132	63.9	60	639	9.9
2006	713	4,253	37.8	2,339	6,626	58.9	55	368	3.3
2009	544	3,725	32.4	2,528	7,594	66.1	59	165	1.4
2000~2009 (A)	6,668	36,797	33.0	25,486	69,285	62.2	605	5,357	4.8
1990~1999 (B)	4,120	22,294	53.1	4,603	18,300	43.6	225	1,409	3.3
(A-B)	(2,546)	(14,497)	(-20.1)	(20,880)	(50,973)	(18.6)	(380)	(3,949)	(1.5)

자료: 지식경제부

주: 신고기준이며, 기타는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포함. 비중은 금액 기준

- (일본보다 제조업 비중 낮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진입한 우리의 2007년과 일본의 1988년 FDI의 산업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제조업이 25.6%로 크게 하락했으나, 일본은 제조업이 74.7%로서 높은 비중을 유지

< 한·일의 1인당 소득 2만 달러 진입시점의 산업별 FDI 구성 >

(단위 : %)

	한국(2007년)*	일본(1988년)**	일본(2007년)
제조업	25.6	74.7	6.2
서비스업	72.4	23.8	93.8

자료: 예상한·이만홍,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08.12.16

55) 2010년 2/4분기 제조업의 총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 서비스업은 52.6%

○ 업종별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운송용기계 등 세 업종에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짐

- (3개 제조업종에 편중) 제조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화공 3개 분야 비중이 평균 68.1%로서 1990년대 평균 56.7%보다 더 높아짐
· 감소하고 있는 의약, 식품, 기계장비 분야의 FDI 비중을 다시 제고해야 함

<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투자 추이 >

(단위: 건, 백만불, %)

	1990~1999 누계			2000~2009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제조업	4,120	22,294	100.0	6,668	36,797	100.0
식품	435	2,642	11.8	272	1,513	4.1
섬유·직물·의류	478	546	1.1	260	779	2.1
제지·목재	145	2,199	10.1	98	378	1.0
화공	1,158	4,340	19.1	766	5,827	15.8
의약	273	728	2.0	130	484	1.3
비금속광물	233	2,113	4.7	209	2,033	5.5
금속	414	869	4.7	438	2,236	6.1
기계·장비	1,426	2,389	7.5	915	3,658	9.9
전기·전자	1,816	6,839	29.5	2,299	13,905	37.8
운송용기계	466	2,498	8.1	842	5,341	14.5
기타제조	661	662	1.4	439	640	1.7

자료: 지식경제부

- (다양화된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10년간 금융보험업 비중이 35.6%에 달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은 각각 10.2%와 11.5%로 증가
· 반면, 유통시장개방으로 '90년대 46.2%를 차지했던 유통업의 비중은 18.0%로 급락했으며, 음식숙박업도 '90년대 11.4%에서 최근 10년 평균 5.8%로 급감

< 서비스업 업종별 외국인투자 추이 >

(단위: 건, 백만불, %)

	1990~1999 누계			2000~2009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서비스업	4,603	18,300	100.0	25,486	69,285	100.0
도·소매(유통)	3,024	8,457	46.2	16,372	12,465	18.0
음식·숙박	212	2,082	11.4	1,264	4,041	5.8
운수·창고(물류)	223	477	2.6	831	3,671	5.3
금융·보험	299	4,562	24.9	1,530	24,682	35.6
부동산·임대	63	343	1.9	878	7,042	10.2
사업서비스	597	1,090	6.0	3,388	7,984	11.5
기타서비스	185	1,290	7.0	1,223	9,400	13.6

자료: 지식경제부

- 금융·보험업종에 편중된 서비스업 FDI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관광 등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FDI 투자국 다양화) 지역별로 FDI의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간 미주지역의 비중은 줄어들고, 구주 및 아주지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전통적인 FDI 주도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영국 캐나다 등 신흥투자국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라이베리아, 바하마,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FDI의 비중은 '90년대 0.6%에서 2000년대 1.5%로 크게 높아짐

< 외국인직접투자 지역별 투자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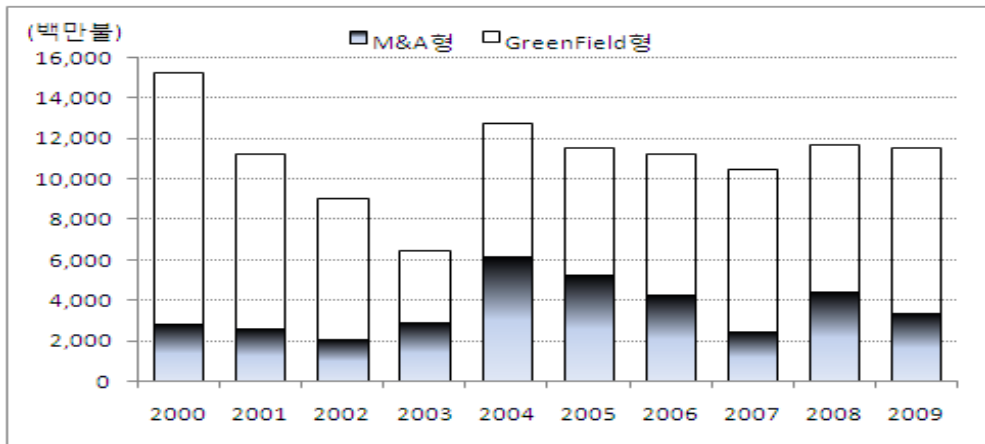
	1990~1999년 누계			2000~2009년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국제기구	34	129	0.3	4	34	0.0
미주지역	2,802	14,757	35.1	6,748	35,942	32.3
미국	2,493	13,084	31.1	5,276	26,799	24.0
캐나다	125	625	1.5	441	3,302	3.0
버뮤다	41	107	0.3	112	1,634	1.5
케이만군도	20	685	1.6	346	2,896	2.6
아주지역	4,219	11,587	27.6	19,422	31,865	28.6
일본	2,498	4,550	10.8	5,239	15,778	14.2
싱가포르	199	1,810	4.3	783	4,061	3.6
홍콩	254	1,011	2.4	786	2,802	2.5
말레이시아	192	3,674	8.7	534	3,371	3.0
중국	682	73	0.2	5,832	2,600	2.3
대만	116	124	0.3	343	805	0.7
구주지역	2,023	15,350	36.5	4,515	42,357	38.0
독일	449	2,629	6.3	861	6,110	5.5
영국	284	1,148	2.7	729	8,720	7.8
프랑스	252	1,833	4.4	482	3,828	3.4
벨기에	29	520	1.2	139	2,768	2.5
네덜란드	370	6,728	16.0	684	11,953	10.7
아일랜드	81	1,130	2.7	141	1,126	1.0
조세회피지역	138	239	0.6	566	1,674	1.5
전 체	8,948	42,004	100.0	32,759	111,438	100.0

주: 신고기준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은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하마 등

○(그린필드형의 복권) 형태별로 보면, 그린필드형 FDI의 비중이 '04년 52% 까지 감소했으나, '05년이후 다시 증가하여 '09년에는 71%까지 높아짐

- '01년부터 '04년까지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이 계속 감소했으나, '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09년에는 71%까지 높아짐
- M&A형 외국인투자의 경우, '04년에 48%까지 그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9년에는 29%까지 떨어짐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M&A형 투자의 비중이 60% 이상⁵⁶⁾인 바, 우리도 향후 M&A형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도약하기까지는 제조업 분야 그린필드형 FDI의 지속적 유입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리모델링, 바이오 나노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필요

< 성격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

< 성격별 연대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그린필드형	M&A형
1990년대 평균	73.9	26.1
2000년대 평균	67.2	32.8

자료: 지식경제부

56) 장윤중(2008),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04호(2008-30), 2008.6.23, p.9

○(증액투자 증가) 투자시점별 비중을 보면, 신규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기존 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

- 2005년 이후 증액투자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57.4%를 기록함
- 2000년 이후 10년 평균을 보면 신규투자가 42.8%, 증액투자가 52.5%, 장기차관이 4.7%로서 증액투자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FDI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과 관련된 M&A투자나 기존 사업의 증액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FDI의 증가율을 年1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 시점별 투자실적 >

(단위: 백만불, %)

연도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전체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0	5,463	35.8	9,493	61.9	354	2.3	15,256
2001	6,346	56.2	4,331	38.4	610	5.4	11,287
2002	5,678	62.4	3,221	35.4	196	2.2	9,095
2003	2,455	37.9	3,936	60.8	80	1.2	6,471
2004	6,200	48.5	5,556	43.4	1,039	8.1	12,796
2005	3,758	32.5	7,716	66.7	92	0.8	11,566
2006	4,341	38.6	6,515	57.9	391	3.5	11,247
2007	5,055	48.1	4,919	46.8	541	5.1	10,515
2008	4,421	37.8	6,263	53.5	1,027	8.8	11,711
2009	4,018	35.0	6,590	57.4	876	7.6	11,484
'00~'09 합계	47,735	42.8	58,540	52.5	5,206	4.7	111,428

주: 신고기준임

○ 투자금액의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1억불 이상 대형투자의 비중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불에서 1억불 미만의 중형투자가 30%내외, 1천만불 이하의 소형 투자가 10%내외를 점유하고 있음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과 침체를 겪었던 '99년, 2000년과 2009년에 1억불 이상 대형 투자의 비중이 각각 64.5%, 60.4%, 60.6%로서 평균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 특징적임

(2)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 그리고 오만과 편견

○(잠재력에 미달하는 성과) FDI의 유치 잠재력⁵⁷⁾은 높는데 유치 성과는 부진

- UN 무역개발회의(UNCTAD)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외국인투자의 유치 잠재력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유치 성과는 낮아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잠재력 이하' 그룹으로 분류됨
- 홍콩과 싱가포르, 영국, 말레이시아 등은 '선도그룹'으로서 잠재력도 높고, 성과도 높은 나라들
-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은 '잠재력 이상' 그룹으로서 잠재력은 비교적 낮지만, 유치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미국 등은 '잠재력 이하' 그룹에 속함

< FDI 유치 성과와 잠재력에 따른 국가그룹 구분 >

높음	(Below Potential)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대만 미국,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Front-Runners) 벨기에, 홍콩, 싱가포르, 헝가리 영국, 말레이시아, 아이슬란드, 칠레 몽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태국, UAE
FDI 유치 잠재력	인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남아공, 에쿠아도르,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가나,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이집트, 온두라스, 자메이카, 페루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우루과이 잠비아, 아르메니아
낮음	(Under-Performers)	(Above Potential)
	낮음	높음

자료: UNCTAD (www.unctad.org),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p.13

주: 1. 2006년도 기준

2. '선도그룹'(Front-Runners)은 FDI 유치 잠재력과 성과가 모두 우수한 그룹, '역량이하 그룹'(Below Potential)은 잠재력은 좋은 편인데 성과가 미흡한 그룹, '역량이상 그룹'(Above Potential)은 잠재력은 우수한 편이 아니지만 성과는 우수한 그룹, '하위그룹'(Under-Performers)은 잠재력도 낮고 성과도 낮은 그룹

57) UNCTAD에서 발표하는 FDI 유치 잠재력지수는 1인당 GDP, GDP 성장률, 수출비중, IT인프라, 에너지사용량, R&D지출, 대학생비중, 국가위험도 등 12개 하부지표를 통해 산출되며, FDI 유치 성과지수는 세계 전체의 FDI 유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 국민소득과 성장률, IT인프라 등으로 평가하는 FDI 유치 잠재력지수는 2000년 16위에서 2008년 16위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FDI 유치 성과지수는 2000년 92위에서 2008년 123위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국민소득 1만7천 달러의 중진국에 속하는 우리로서는 FDI 규모와 증가율을 더 높여서 '선도그룹'으로 도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우리나라의 FDI 유치 잠재력 대비 성과 추이 >

그룹	국가	FDI 유치 성과 지수 (순위)			FDI 유치 잠재력 지수 (순위)		
		2000년	2005년	2008년	2000년	2005년	2008년
선도그룹 (front-runners)	홍콩	1	5	2	13	10	5
	칠레	31	35	27	46	50	53
	헝가리	36	28	1	41	41	40
	영국	23	23	78	5	3	8
잠재력 이하 (below-potential)	한국	92	123	123	16	15	16
	중국	62	68	94	49	36	30
	일본	130	134	129	12	24	25
	독일	9	103	127	10	9	3
	미국	67	122	99	1	1	1
잠재력 이상 (above-potential)	페루	94	66	53	76	91	82
	베트남	53	57	29	77	79	75
하위그룹 (under-performers)	인도	117	120	82	92	84	84
	남아공	118	79	80	72	66	72

자료: UNCTAD (www.unctad.org)

○(지원금 증가, 성과 부족) 외국인투자의 유치지원금은 증가하는데 성과는 감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1년 2,956억 원에서 2007년 4,755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152.5억 달러에서 2009년 114.8억 달러로 감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부분은 조세감면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FDI) 유치 지원금 추이 >

(단위: 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세감면액	2,415	2,010	1,798	3,490	5,446	3,945	3,919
부지매입비	545	671	559	328	655	742	742
현금지원 등	-	-	-	-	-	45	94
합 계	2,956	2,681	2,357	3,818	6,101	4,732	4,755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부자료 (김준동 외(2009)에서 재인용)

○(경자구역 증가, 성과 부진) 외국인투자용 경제자유구역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FDI의 유치는 여전히 부진 상태에서 못 벗어남

- 2003년 이후 설치된 인천, 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해외직접투자(FDI)가 국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된 6개의 경제자유구역⁵⁸⁾에 2004년부터 2010년3월까지 유치된 FDI는 우리나라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함
- 2004년부터 2009년7월말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도착한 외국인투자(FDI) 규모는 같은 기간의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의 14%⁵⁹⁾에 그침

<전체 FDI 중 경제자유구역의 FDI가 차지하는 비중>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경북	총계
2004년	-	0.40	0.50	-	-	-	0.89
2005년	0.87	1.99	2.39	-	-	-	5.25
2006년	0.46	0.38	0.18	-	-	-	1.02
2007년	1.12	0.89	0.92	-	-	-	2.92
2008년	1.09	0.95	0.02	-	-	-	2.06
2009년	2.69	0.37	0.02	1.88	-	-	4.97
2010년*	9.44	5.73	0.09	9.74	-	-	25.0
총계	1.20	0.93	0.65	0.52	-	-	3.30

자료: 지식경제부 내부 자료

주: 2010년 자료는 2010년3월말 기준 자료임

- 아래 표와 같이, 6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이 다수 겹치기 때문에 지역별 특장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쉽지 않음

<경제자유구역 개요 및 중점 유치 업종>

명칭	위치	지정	완료	면적	중점 유치 업종
인천	인천	'03년	'20년	209km ²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레저
부산·진해	부산·경남	'03년	'20년	104km ²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	전남·경남	'03년	'20년	90km ²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해	경기·충남	'08년	'25년	55km ²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 물류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08년	'20년	39km ²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새만금·군산	전북	'08년	'30년	66km ²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친환경 산업

자료: 기획재정부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2008.05.23.

58)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59)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총 103억7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도착한 투자(FDI) 금액은 15억 달러(14%)에 불과 (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2009.12)

○(FDI의 오만: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권리는 철저하게 요구하지만,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불평등 계약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함⁶⁰⁾

- 지난 10년 동안 하락 추세에 있는 외국인투자(FDI)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제도적 실패⁶¹⁾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FDI와 관련된 몇 가지 ‘오만과 편견’의 해소 및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사례1: A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B외투기업은 2008년말까지 준공기로 한 상업업무용시설 53.8만㎡(약16만평)를 착공만하고 진행을 미루고 있으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에만 주력. 2008년 말까지의 목표 가운데 1.6%에 불과한 3,350만 달러(약370억 원)만 FDI로 유치한 채, 사업비의 대부분인 1조 9,259억 원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입
 - 문제점: A구역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는 명확하고 그 의무에 대한 이행강제 조항도 명백한 반면, B외투기업은 자의적으로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등 불평등계약에 따라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구를 못하고 있음
- 사례2: C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부진한 23.4만㎡(약7만평)을 D도시공사가 E외투기업으로부터 약5,000억 원(3.3㎡당 706만원)에 재매입할 것을 추진
 - 문제점: 당초 E외투기업에 공급한 가격은 약 850억 원(3.3㎡당 120만원)에 불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FDI 유치목표도 못 채우고 있는 E외투기업에게 불로소득 4천억 원을 안겨주는 거래를 추진하다 2009년 말 감사원에 적발
- 사례3: 2009년 말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0년4월30일 다시 체결한 변경계약서에는 ‘의무 未이행時 벌칙부과 규정’을 추가했으나, 그 의무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있는 의무규정인지 의심되며, 외자유치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B외투기업의 외자유치 의무를 가볍게 해줌

○(FDI에 대한 편견) 외국인투자(FDI)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4가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향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함

60) 불평등계약의 사례1, 사례2는 감사원(2009.12) 자료를 참조

61) 제도가 선진화되어야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빈곤에서 탈피하고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 (김승욱, ‘경제성장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다’,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2010.8.25)

- **편견1: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률이 높고 연구개발도 활발할 것이라는 편견**
 - 수익성이 좋고 배당도 많이 하지만, R&D 집약도는 높지 않음
 - 전반적으로 2008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서 R&D 집약도를 포함한 R&D 활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⁶²⁾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수익률, 배당, 연구개발투자 비교 >

(%)

구분		2003	2005	2008
매출액 영업이익률	외국인투자기업	6.9	6.2	5.6
	국내기업	6.9	5.7	5.0
배당성향	외국인투자기업	33.0	40.2	35.6
	국내기업	19.2	19.0	17.8
R&D 집약도	외국인투자기업	1.26	1.6	0.84
	국내기업	1.56	1.1	1.71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각 년도

주: 1.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R&D 집약도 = (연구개발비/매출액)*100.

배당성향 = (배당액/당기순이익)*100.

2. 2003년은 제조업 기준. 2005년과 2008년의 경우, R&D 집약도는 제조업 기준.

- **편견2: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이전을 활발히 할 것이라는 편견**
 - 2003년도에 전산업을 대상으로 969개 외투기업의 R&D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관련기업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기술이전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75개사, 조사대상의 7.7%에 불과⁶³⁾
- **편견3: 투자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면 투자 유치도 많아질 것이라는 편견**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금액의 FDI 순유입액 대비 비중은 9%로 아일랜드의 0.9%에 비해 10배 가량 높아 상당히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와 아일랜드의 투자인센티브 금액 대비 투자유입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아일랜드
FDI 순유입액	4,950	12,811
인센티브 지급금액	453	115
인센티브지급/FDI 순유입액	9%	0.89%
인센티브 유형	조세감면 위주 / 국내외기업 세율 차등	현금지원 위주 / 국내외기업 차별화 없음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부 자료 (김준동 외(2009)에서 재인용)

주: 투자금액 및 인센티브금액은 2006년 기준

62)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63) 김기국(2003.11),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STEPI, p.17

- **편견4: 외국인투자기업은 특혜와 조세감면을 원할 것이라는 편견**
 -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분야라고 제시한 항목은 '노사관계'였고 '조세부담 완화'는 4번째 응답률을 보임

< 향후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

(%)

구분	2006	2007	2008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34.6	38.3	26.7
국민의식 국제화	31.1	38.7	26.7
시장개방 확대	22.5	35.2	24.6
조세부담 완화	13.2	13.8	19.2
외국어사용 보편화	13.2	13.8	16.7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	12.9	13.0	12.8
보다 자유화된 국제금융환경 조성	10.7	12.3	11.0
정치적 안정	8.9	8.7	7.8
정부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12.1	5.1	7.8
물류환경 정비	6.1	6.3	7.5
정부의 R&D지원 강화	0.0	0.0	6.0

자료: KOTRA(2008), 2008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KOTRA자료 08-025

주: 복수응답 가능. 랜덤샘플링을 통해 28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3)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과제: 한국형 FDI 모델과 경자구역 리모델링 필요

○(한국형 FDI 모델) 기존의 FDI 활성화 논의는 서비스업종, M&A형 투자, 증액투자가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FDI로 전환⁶⁴⁾할 것을 주문했으나, 우리의 2009년 1인당 소득은 1만7천불 수준의 중진국에 불과함

-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고 있는 국민소득 1만7천불 수준의 중진국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고 새로운 투자자를 더 유치하여 FDI 증가율을 현재의 4.5%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FDI 유치 잠재력에 못미치는 성과를 보이는 '잠재력 이하 그룹'에서 벗어나 FDI 잠재력도 높고 성과도 좋은 '선도그룹'으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선진국형 FDI는 주로 서비스업종에 M&A형 투자, 증액투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신규투자가 더 활성화되어야 함

64) 김준동 외(2009), 문휘창(2009) 등

한국형 FDI 모델

- ① 제조업종 FDI 활성화, ② GreenField형 FDI 활성화
- ③ 신규투자 활성화, ④ 투자국가 다변화, ⑤ 지역별 특화업종 유치
- ⑥ 국내기업 차별 철폐

- (국내기업 차별 철폐) 백화점식·저인망식 투자유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산업발전 단계와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를 유치하며,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 내수시장, 산업구조와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종과 투자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략적으로 유치⁶⁵⁾함
 - 백화점식 인센티브가 아니라 ‘업종별 차별화’를 유인할 수 있는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규제완화와 투자환경의 개선⁶⁶⁾이 지속적으로 필요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없으며⁶⁷⁾, 내외국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한도액을 설정하고,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⁶⁸⁾을 준비하고 있음
- (투자업종의 선택과 집중) 위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모델, FDI의 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 산업발전 단계와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업종과 기업을 아래와 같이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

65) 싱가포르와 중국은 이미 자국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는 전략적 업종과 투자자를 선별하여 유인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음(인베스트코리아, 『외국사제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향』, 2006)

66) 투자유치 선진국들(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세계감면 또는 특혜제도 등의 인센티브 운영 보다는 발달된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유리한 세제, 편리한 세관, 우수한 금융시스템 등 투자환경 자체가 유인으로 작용

67) 김준동 외(2009), p.194

68)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금액을 투자금액의 50%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또는 70%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이내로 제한하되, 대신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투자금액의 20%이내)하는 2011년도 세계개발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술(High-End) 및 연구개발 업종
-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업종
-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싱가포르 'Industry 21' (투자유치정책 비전)

- 지식집약형 경제구조 확립에 기여할 9개 전략적 투자유치분야 선정

- ① 전자공학 ② 석유화학 ③ 생명과학 ④ 엔지니어링 ⑤ 교육서비스
- ⑥ 의료서비스 ⑦ 물류 ⑧ 정보통신미디어 ⑨ 지역본부

· 9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이 하락 또는 정체하고 있는 바, 세부 기준을 보면 '하드웨어'와 기초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비해 제도와 정책의 예측가능성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많이 뒤쳐져 있음

- 공항, 항만, 도로, 산업단지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노동과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므로, FDI 관련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함
 - 경영에 꼭 필요한 접대비나 기타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선진 각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원을 위한 기숙사나 사택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우리도 갖고 있지만, 도심에 있는 기숙사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개선이 필요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 >

연도	전체 순위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 경제	보건, 초등 교육	고등 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극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07	11	26	16	8	27	6	16	24	27	7	11	9	8
'10	22	62	18	6	21	15	38	78	83	19	11	24	12

-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는 '95년 50위에서 2007년 32위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사관계 안정화,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국민 의식의 세계화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국가별 경제적 자유도 비교 >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아일랜드	8.17 (5위)	8.13 (8위)	8.09 (6위)	7.98 (7위)
영국	8.07 (6위)	8.25 (6위)	8.10 (5위)	7.89 (9위)
대만	7.25 (22위)	7.28 (26위)	7.68 (15위)	7.62 (16위)
독일	7.52 (14위)	7.50 (15위)	7.65 (18위)	7.50 (27위)
일본	7.03 (28위)	7.43 (17위)	7.54 (22위)	7.46 (30위)
한국	6.33 (50위)	6.58 (54위)	7.28 (38위)	7.45 (32위)

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9

○(경제자유구역의 리모델링)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규제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재량권 강화 등 리모델링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재량권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와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지정한 만큼 그에 맞는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
 - 예를 들어 아파트, 상업시설 등 부동산개발에서 벗어나, 외국인 정주기능의 핵심인 외국인학교, 외국대학, 외국병원 등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임
 - 수천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능력에 맞게 처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여
- 6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모델의 구축이 필요
 - 6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이 다수 겹치기 때문에 차별화가 쉽지 않은 바, 지역별 특장점을 살린 선택과 집중, 특성화 전략이 필요
 - 예를 들면, 지식서비스산업형(인천), IT바이오 등 첨단산업형(대구-경북), 물류인프라의 장점을 살린 물류허브형(부산, 광양), 친환경·농업·에너지산업에 기반한 녹색성장형(새만금-군산) 등과 같이 차별화된 모델로 개발

3) 서민금융 경쟁력 강화

(1) 서민금융의 정의와 대상

○ 서민금융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서민금융 취급이 가능

- 서민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일컫음

·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신용등급 기준으로 저신용층인 6~10 등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일컫는 경향

- 신용등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통적 서민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을 취급 가능하다고 판단⁶⁹⁾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대출 영역과 서민금융 영역에는 차이가 많음

· 국내 은행도 고신용자뿐만 아니라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서민금융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은 6등급에 불과함

· 제2금융권, 대부금융기관, 대안금융 등은 서민금융을 다수 취급하고 있으나, 9등급과 10등급 등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융기관별 신용대출 취급영역과 서민금융의 영역 >

	평균 신용등급	신용대출 취급 영역										비고	
		상위			중위				하위				
		1	2	3	4	5	6	7	8	9	10		
은행	5.30	←					→ (서민금융)					희망출세대출 (7등급 이하)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	6.94	←			→				→			햇살론 (6등급이하)
	신용협동기구 상호금융		←			→				→			
제2금융권	캐피탈 (할부금융, 카드)	5.97	←			→				→			
대부금융기관(등록)		←			→				→				
대안금융		←			→				→			미소금융 (7등급 이하)	

주: 1) 가중평균신용등급은 2010년 4월 기준 담보대출을 포함한 KCB(Korea Credit Bureau) 자료

2) 신용대출 취급영역은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KCB 등의 자료를 통해 저자 추정치

69)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은 지역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과 조합원의 저축편의 제공과 여수신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농협 단위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 등이 있음

○ 현재 국내 저신용자는 성인의 25%에 해당하는 95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저신용일수록 금리수준이 높아짐

- 신용조사기관(CB: Credit Bureau)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용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수는 약 950만명(25%) 정도로 추정되고,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
 - 고신용자(1등급~5등급) 수는 약 2,900만명(75%)이며, 이중 5등급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은 연체율 및 불량률 등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상승

< 신용등급별 분포와 금리 수준 >

(단위 : 천명,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합계
신용등급분포	3,049 (7.96)	5,146 (13.43)	4,421 (11.54)	5,228 (13.64)	11,020 (28.76)	1,921 (5.01)	3,595 (9.38)	2,270 (5.92)	1,028 (2.68)	641 (1.67)	38,319 (100)
평균 금리	6.25	7.25	9.32	11.85	14.54	16.17	18.33	20.13	22.04	22.84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 평균금리의 경우 KCB, 올크레딧 보유 데이터 기준
 주 : 1) () 안은 비중, 2) 신용등급은 2010년 2분기말 현재, 평균금리는 2010년 2월말 기준.

(2) 서민금융의 부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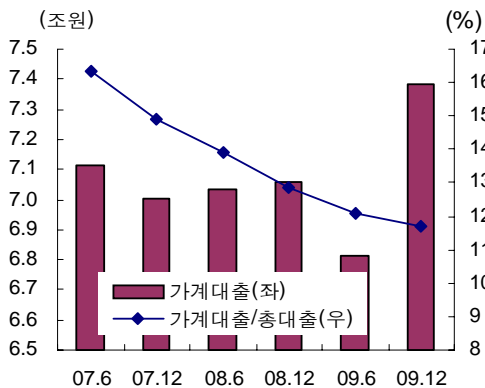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홀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약화되고 있음

- (은행)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도가 떨어진 저소득층 대상의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약화
 - 외환위기 이전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이 서민금융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이들이 민영화되면서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상실하였고, 기타 은행들도 전체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소액대출 규모를 축소⁷⁰⁾
 - 그나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금리 등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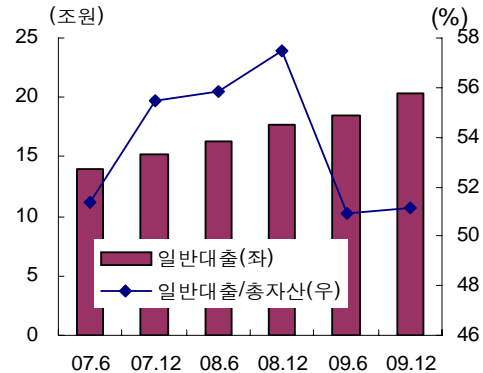
70) 국민은행은 1963년 서민금융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으로 출발.

- (상호저축은행) 대표적인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2년 이후 대출금이 크게 늘어났으나,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 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대출 금융지원이 매우 약화됨
 -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가계대출이 크게 떨어졌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총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신용협동기구) 서민금융 기능이 약화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그 기능 약화 현상이 지속됨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일반 대출이 증가하였으나 총자산대비 일반대출 비중은 크게 줄어짐
 - 최근 일부 여신전문금융기관들도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중상위권 신용평가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안금융)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하위 서민층(빈민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을 위한 빈민금융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초기단계
 - '09.12월 제도권 금융 밖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활을 위해 미소금융 사업 출범
 - 2010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56개 지점(수도권 24개, 지방 32개)이 설립되었으며, 총 3,958명에 237억원 대출

< 상호저축은행 대출 잔액 현황 >



< 신용협동기구 대출 잔액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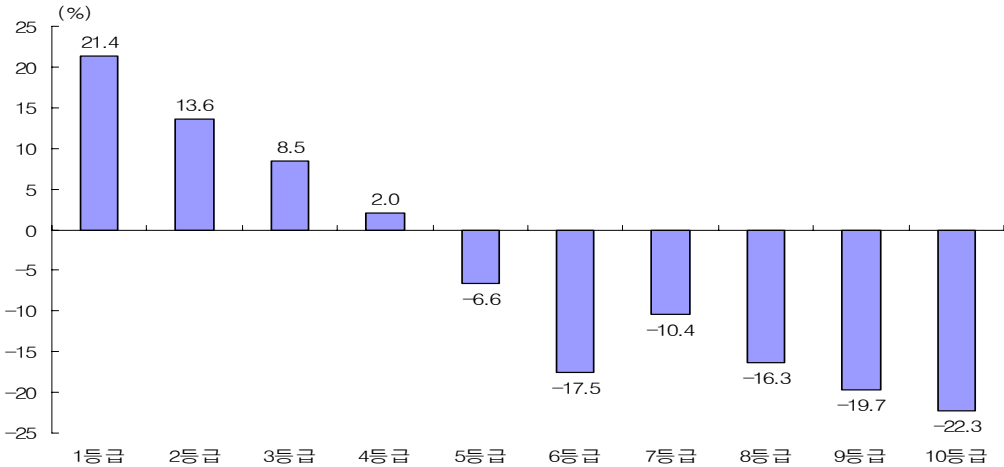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위기 이후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금융위기 직후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고신용자의 대출 잔액은 크게 늘고, 반대로 저신용자의 잔액은 크게 감소⁷¹⁾
 - 은행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행동으로 고신용층인 1~5등급자의 대출액은 같은 기간 16조9000억원(6.6%) 증가
 - 반면 저신용층인 6~10등급자에 대한 대출액은 21조7000억원(21.7%) 감소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갈수록 대출감소율이 더 커짐

< 신용등급별 비주택담보 개인대출잔액 증감률 >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주 : 2008년 12월말 ~2009년 1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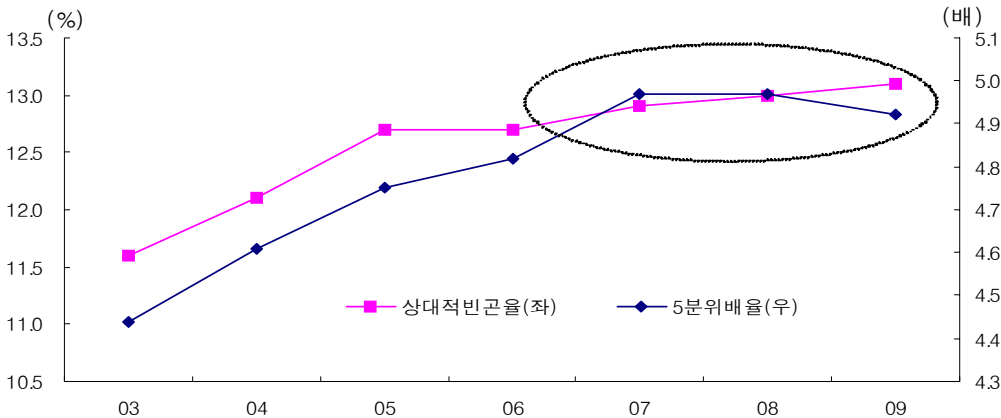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이 강조되고 있음
 -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과 정부는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
 - 정부는 미소금융('09.12월), 제도권 금융기관의 '햇살론'('10.7월)과 '희망홀씨대출'('09.3월)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환대출, 채무조정 등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71) 금융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내일신문 2010년 8월 25일자)

○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서민경제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비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일자리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악화 지속
 - 상대적빈곤율은 2004년 12%대로 진입한 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13%대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에도 상승세를 지속⁷²⁾
 - 계층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정부의 서민대책 등에 힘입어 200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상승세를 유지

< 가계소득 분배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가구는 전국(2인이상 비농가)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서민금융 수요에 비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약 950만 명에 해당하는 저신용자가 평균 1년 500만 원의 금융수요가 있다고 가정⁷³⁾할 경우 매년 47.5조원이 필요
 - 햇살론의 경우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조성(2조원)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며, 희망홀씨대출은 신용대출 7,68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 1조5,324억원로 계획
 - 뿐만 아니라 정책적 서민금융정책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가능

72) 상대적빈곤율은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중

73) 서민들의 부족한 자금을 정확히 추정하긴 어렵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햇살론’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생계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어서, 그 절반인 500만원을 연간 서민금융 수요로 가정

(3)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 (불완전한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미완의 구조조정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본연의 서민금융 취급이 어려움

- 외환위기 이후의 강도 높은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달리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이 크게 위축
 - 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시중은행(7개)과 지방은행(6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업력이 강화
 -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조합) 등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이 안정된 2004년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지속
 -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이 2000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후 다소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정상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취약해져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하여 지속가능성 근간도 불안

< 저축은행의 회계연도(FY)별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억 원)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3,379	5,493	6,271	3,412	469

자료 : 금융감독원

- 불완전한 구조조정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들은 서민금융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이 정상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취약해져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금융 소홀
 -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원이 크게 축소됨 (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등 전통적 서민저축금융기관까지 거액 예금 유치 노력)

<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의 회계연도(FY)별 감소 추이 >

(단위 : 개)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저축은행	112	110	109	107	106
신용협동조합	1,066	1,051	1,024	1,007	994
단위조합	1,546	1,517	1,441	1,417	1,409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FY는 회계연도(Fiscal Year). 단위조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조합을 지칭

○ (높은 연체율과 신용위험)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이 강화된 은행권이나 영업기반이 약화된 저축은행 등이 모두 신용위험이 높은 서민금융을 회피

- 국내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고, PB 금융 등을 통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높은 신용위험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민금융을 소홀
 - 2005년말 현재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 은행(SCB 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외환은행 등)이며, 비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인지분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중시
 - 외국계로 된 은행이나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아 사실상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수익성이 높은 부유층 시장을 적극 공략
 - 이에 따라, 소득이 낮고 담보능력이 취약한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은 크게 약화됨
- 저축은행들도 외환위기 직후 영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불완전한 서민금융 보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절실히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
 -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들은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하였음
 - 부동산 PF, 건설업, 부동산업 등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 대출 중에서 **부동산관련 업종의 비율이 50%를 상회**⁷⁴⁾

< 금융기관별 평균 및 신용 하위등급 연체율 추이(2010년 4월) >

	평균 연체율	신용하위(8~10) 등급
은행	0.44%	6.8%
신용협동조합	2.21%	9.8%
상호저축은행	18.47%	37.8%
금융기관전체	1.07%	9.1%

자료 : KCB(korea Credit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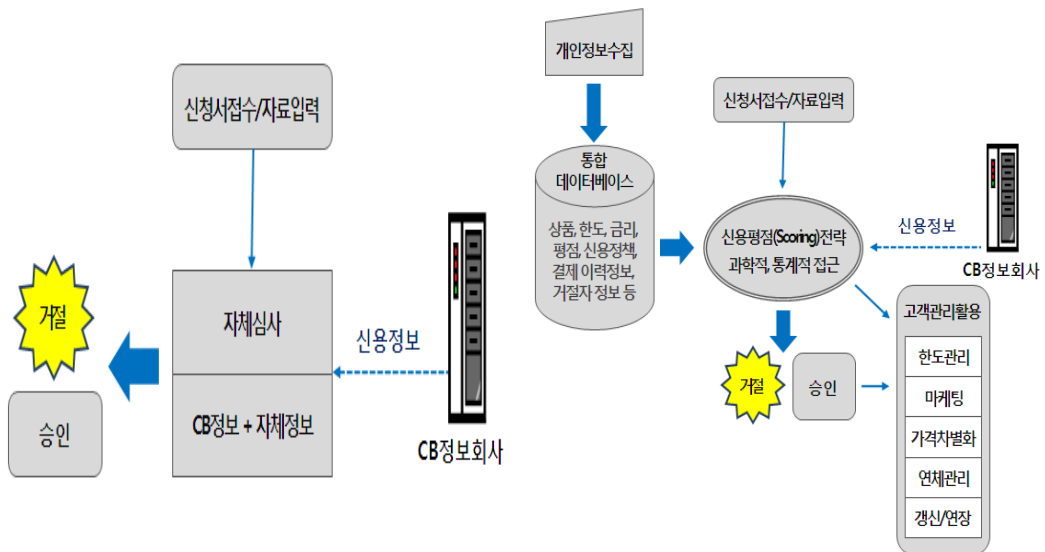
74) 2009년 부동산관련업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KAMCO에 환매조건부 부동산 PF 매각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과학적인 접근 능력 미흡) 금융기관들의 무담보 서민금융에 대한 경영능력이 미흡함

- 서민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관리가 절실
 - 성격상 서민금융업은 소매금융의 핵심인 무담보 신용 소비자금융업으로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일종의 첨단금융이며, 상당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한 일종의 장치산업
 -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가 소민금융의 핵심 업무
- 일부 대형 저축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
 -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 응답 결과(2007.5) 상호저축은행(88개)의 73.9%(65개)가 개인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금융감독원 '07.10.30 보도자료 참조)한 상태이며, 기타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
 -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은 개인 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전산분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현행 국내 서민금융 접근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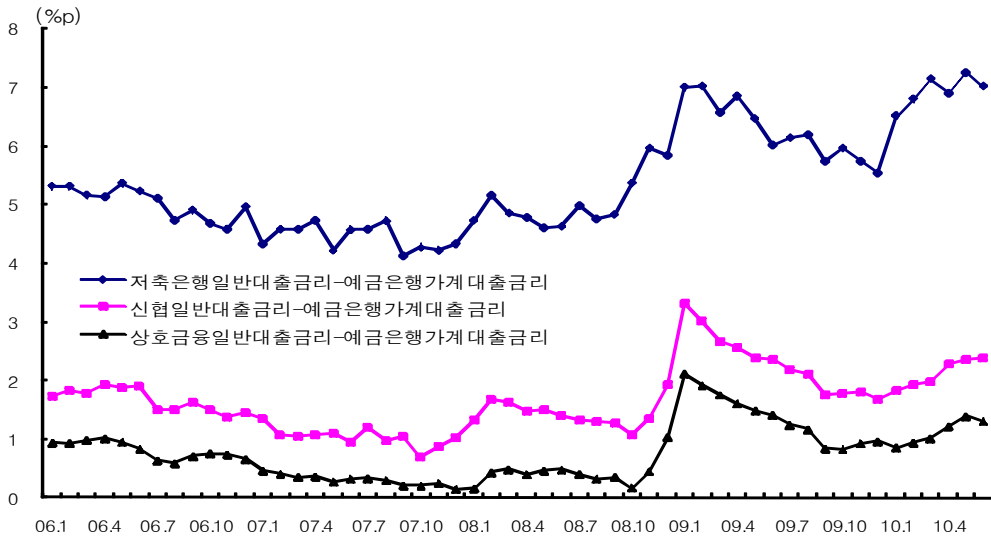
< 과학적인 선진 서민금융 접근 방식 >



○ (높은 대출금리) 높은 금리와 신용도 저하 가능성 등 불합리한 측면 때문에 건전 서민금융 소비자들의 서민금융기관 접근을 기피

- 저신용이지만 상환의지가 높은 서민들의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의 높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있음
 - 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보다 무려 6%p 높은 수준
 - 신용협동조합의 일반대출금리와 상호금융의 일반대출금리 등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보다 각기 2%p, 1%p 이상 높은 수준
-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서민금융 고객들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자제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음
 - 대부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신용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 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 제도권의 서민 금융기관 이용" 자체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면, CB 등급 산출 모형의 비합리적인 문제점 개선 필요

< 예금은행 대비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차이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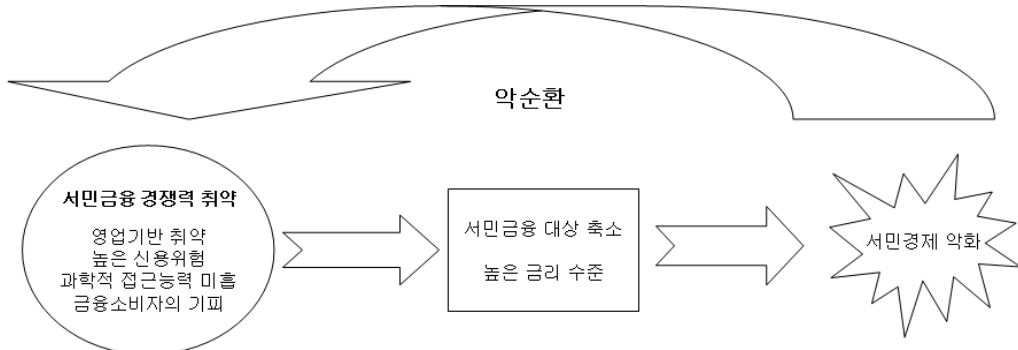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4) 서민금융의 경쟁력 제고 방안 :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와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서민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
 - 서민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으며,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지속성장 기반이 잠식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거시적인 재정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세수의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리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생존 위협에 직면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서민금융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서민금융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 서민금융의 경쟁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대상자들이 확대되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에 빠짐

< 현행 서민금융 악순환 구조 >



○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서민금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근본적으로 서민금융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 첫째,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현재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 바,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서민금융 활성화 절실
 - 지역 상호금융이 은행으로 전환한 일본의 제2지방은행을 벤치마킹하여 자산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화하여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의 금융업의 축을 담당
 -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과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바, 자본금확충 후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킴
 - 부실서민금융기관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의 우량정보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차별화된 감독정책 실시
 - 부실과 금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

- 둘째,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서민금융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열위에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비용 구조로는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바, 일정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개발 능력 제고와 이에 필요한 정책적 규제 완화
 - 비과세 예금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중앙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익기반을 다원화할 필요

- 셋째, 과학적인 경영과 리스크관리 정착.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관리가 절실함
 - 과학적인 리스크관리는 데이터를 기초로 통계적인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자료, 정보수집 기관 자료 등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개별 서민금융기관들은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低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
 - 따라서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등을 통한 크레딧뷰로(CB; Credit Bureau)를 만들어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실정 및 금융 환경에 부합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운용할 필요
 -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

- 넷째, 높은 가산금리 조정 등 제도 개선. 서민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책정 등을 시정하고, 서민금융기관 접촉한 서민금융 소비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
 - 서민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신용도에 비해 높은 가산금리가 부여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를 검토⁷⁵⁾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등급에다 소비자 측면에서의 논리적 설명력도 더하여 합리적인 CB 등급 산정 필요
 - 건전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기관 사용 시 자신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각 서민금융기관 협회 또는 중앙회 등에 금융소비자들에게 건전한 소비문화,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

전문연구위원 박덕배 (02-2072-6216)

75)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일정 기간의 가산금리 평균 이상이 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 등도 고려할 필요

4. 경제시스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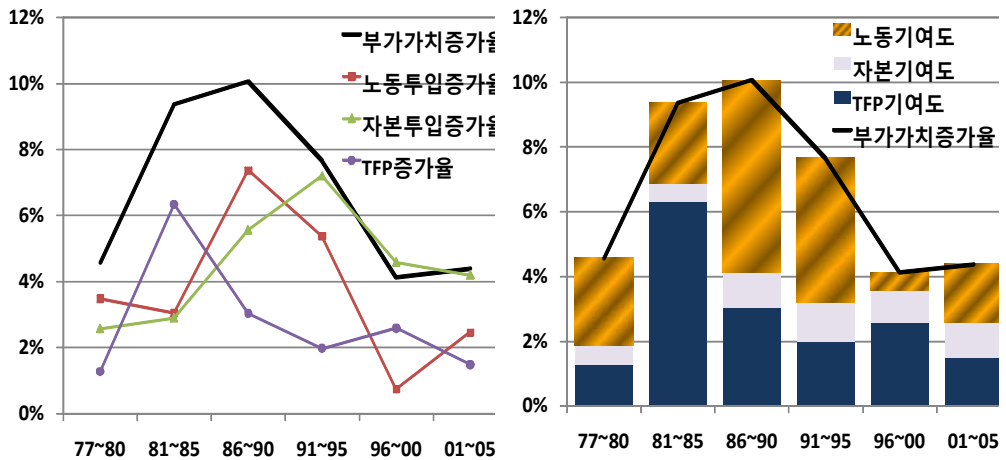
1) 총요소생산성 제고

(1) 성장잠재력과 총요소생산성⁷⁶⁾

-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후반(1986~1990년) 약 1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전반(2001~2005년) 4.4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경제 발전에 따르는 임금 상승, 자본 수익률 하락 등 불가피한 요인에 의한 측면도 크지만,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생산 요소 부문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노동투입 증가율은 80년대 후반 연평균 7.4%에서 2000년대 2.5%로 하락함
 - 자본투입 증가율은 90년대 전반 연평균 7.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4.2% 수준을 유지
 - 한국경제에 있어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80년대 전반기로 연평균 6.3%를 기록한 적도 있었으나 2000년대에는 1.5% 증가율 수준으로 노동, 자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특히, 한국과 같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을 경우 효율성 확보가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TFP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80년대 전반 6.3%p에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에는 1.5%p로 크게 축소됨

76) 자세한 요소별 성장 기여도 분해 방법은 「【별첨 1】 성장회계 방법을 통한 요소별 기여도 분해 방법」, 「【별첨 2】 이용 자료에 대한 설명」을 참조. 단, 본 보고서에서의 성장 기여도 분해는 부가가치(value-added) 분해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총산출(gross output) 분해법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에서 존재하는 중간재 기여도는 다루지 않고 있음.

< 한국 전산업의 시기별 생산요소 증가율 및 성장 기여도 >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기간중 연평균 환산치.

○ 한국과 선진국과의 생산투입요소들의 성장 기여도를 비교해 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분석 대상 국가는 한국과 독일, 일본, 미국의 4개국으로 독일과 일본은 한국 경제와 같이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를 가졌고, 미국은 높은 서비스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분석 대상 지표는 생산 투입 요소인 노동, 자본, TFP의 성장 기여도 또는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시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별 데이터 이용의 한계상 70년대와 2000년대는 국가별 포함 연도에 차이가 존재 함
- 분석 대상 경제 단위는 전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요 하위 산업을 대상으로 함

<참고>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의 의미와 결정 요인⁷⁷⁾

- TFP란 노동, 자본스톡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성장분을 의미함
 - 서로 다른 국가의 동일한 산업에 비슷한 노동량과 자본량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여더라도 생산량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이와 같이 생산성중 노동과 자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또는 다요소생산성 (Multi Factor Productivity) 이라 함

- 이러한 TFP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그중 첫째, R&D 투자 규모 차이에 따른 기술 수준 격차를 들 수 있음
 -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킬 경우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 이는 생산함수 자체를 상향 이동시켜 그렇지 않은 국가와 생산량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둘째, 노동투입에 대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질적 수준의 차이를 들 수 있음
 - 인적 자본에 대한 교육 투자, 성실성이나 근면성과 같은 국가적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아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성실하고 근면하여 제품 불량률이 떨어지고 작업 속도가 높아지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셋째, 정치·사회적 안정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도 TFP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77) 그러나 일부에서는 TFP라는 것은 성장회계식에서 나오는 잔차항(오차)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2) 전산업의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 비교

□ 전산업 비교의 주요 특징

- ① 2000년대 한국 전체 경제의 노동 투입에 대한 의존도는 80년대 수준으로 여전히 노동력에 대한 경제 성장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형 성장 구조를 지속중
- ② 반면, 최근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본 투입의 기여 정도는 현재 선진국 수준뿐만 아니라 8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현재의 한국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유사했던 80년대의 경우 경제 성장에 대한 자본투입의 기여율이 45.2%로 현재 한국의 24.2%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였음
 -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시점은 독일 1987년, 일본 1988년, 미국 1988년임
- ③ 경제 성장에 대한 TFP의 기여율은 한국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 특히, 2000년대 경제 성장에 대한 TFP 기여율은 일본이 74.5%, 독일이 50.4%인 반면 한국은 33.9%에 그치고 있음

□ 전산업의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 추이

○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율)

- (한국) 전체 경제에서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노동 투입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4.4%p에서 2000년대 1.8%p로 하락함
 - 전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43.4%에서 2000년대 41.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독일) 노동 투입에 대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중
이나 노동 투입이 여전히 성장에 정(正,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8%p에서 2000년대 0.0%p로 하락함
 - 전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30.9%에서 2000년대 1.5%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임

- (일본) 노동 투입에 대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중
이며 90년대 이후 노동 투입이 성장에 부(負, -)⁷⁸⁾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0%p에서 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0.6%p 및 -0.4%p로 하락함
 - 전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9.9%에서 90년대 -54.8%, 2000년대 -26.9%를 기록함

- (미국) 노동 투입에 대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중
이나 노동 투입이 여전히 성장에 정(正,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와 90년대 모두 24%p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0.9%p로 하락함
 - 전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75.5%에서 2000년대 34.0%로 하락하는 추세임
 - 미국 경제 전체의 노동 투입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것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됨

78) 노동, 자본, TFP의 기여도가 음(陰, -)인 경우는 기여도 계산식(前기 비중 × 후기 증감률) 증감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임.

○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율)

- (한국) 전산업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80년대 7.8%에서 2000년대 현재 약 24% 수준까지 상승
 - 전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8%p, 90년대와 2000년 대에도 1.1%p로 미약한 수준을 기록함
 - 전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 율)은 80년대 7.8%에서 2000년대 24.2%로 증가함

- (독일) 전산업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 현재 약 절반을 차지 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7%p, 90년대 1.0%p, 2000년대에도 0.7%p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 율)은 80년대 26.6%에서 2000년대 48.1%로 증가함

- (일본) 장기 경기 불황기인 90년대에도 자본의 성장 기여율이 높았으며 2000년대에는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자본 투입이 기여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2.2%p, 90년대 1.4%p, 2000년대에도 0.9%p를 기록함
 - 전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 율)은 80년대 45.2%에서 90년대 138.1%, 2000년대 52.4%에 이르고 있음

- (미국) 80년대 이후 자본의 성장 기여율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0년대 현재 경제 성장의 약 47%를 자본 투입이 기여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0%p, 90년대와 2000년 대에도 1.2%p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전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 율)은 80년대 32.4%에서 2000년대 47.0%로 증가 추세를 지속중임

○ TFP(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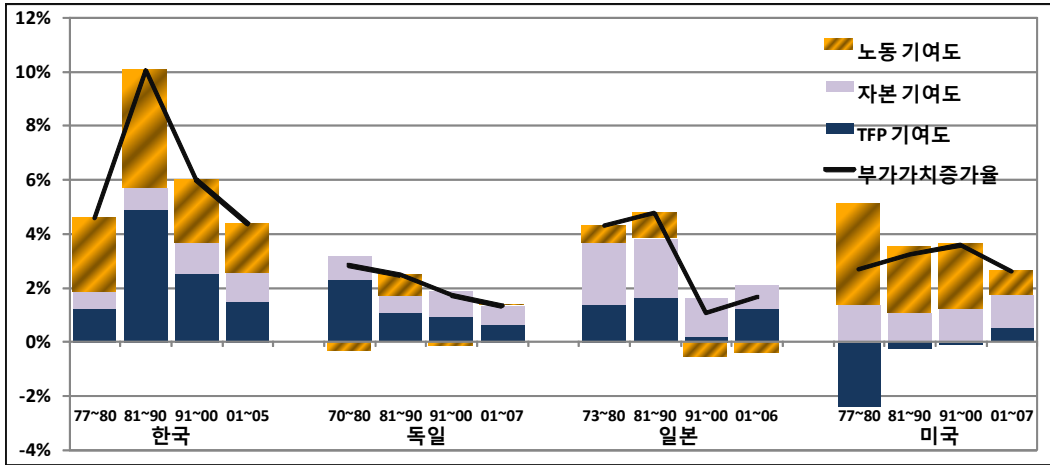
-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TFP의 성장 기여율은 80년대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중임
 - 전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4.9%p에서 2000년대 1.5%p로 하락함
 - 전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48.8%에서 2000년대 33.9%로 하락 추세를 지속함

- (독일) 전산업 TFP의 성장 기여율이 80년대 이후 상승하는 추세임
 - 전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1%p, 90년대 0.9%p, 2000년대 0.7%p로 하락하는 추세임
 - 전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42.5%에서 90년대 54.0%, 2000년대 50.4%를 기록함

- (일본) 전산업 TFP의 성장 기여율은 장기 불황기인 90년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 경제 성장의 4분의 3을 담당할 정도로 개선됨
 - 전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7%p에서 90년대 0.2%p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다시 1.2%p로 높아짐
 - 전산업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34.9%에서 90년대 16.7%로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74.5%를 기록함

- (미국) TFP는 90년대 이전까지 경제 성장에 부(負, -)의 영향을 미쳤으나 2000년대에는 19%의 성장 기여율을 기록하고 있음
 - 전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3%p에서 2000년대 0.5%p로 상승함
 - 전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8.0%에서 2000년대 19.0%로 상승함

< 한·독·일·미의 시기별 전산업 성장 기여도 분해 >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독일은 1990년 이전은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데이터임.

(3) 제조업의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 비교

□ 제조업 비교의 주요 특징

- ① 한국 제조업은 80년대까지 노동 투입이 산업 성장에 정(正, +)의 영향을 미쳤으나 90년대 이후 산업 성장에 부(負, -)의 관계로 전환됨
· 이는 공정 자동화, 노동집약적 산업인 경공업의 위축 등으로 제조업 전반의 노동 투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② 2000년대 한국 제조업 성장에 대한 자본 투입의 기여율은 80년대 일본 수준 정도이나 독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③ 한국 제조업 성장의 TFP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2000년대 현재 그 의존성은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또한, 독일, 미국 등이 2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시점인 80년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TFP에 대한 산업의 성장 의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8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 TFP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IT 산업과 기술의 확산으로 제조업의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전 제조업의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 추이

○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율)

- (한국) 제조업중 노동 집약적 산업인 경공업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전체 제조업에 대한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70년대와 80년대에 정(正, +)에서 90년대와 2000년대에 부(負, -)로 전환됨
 - 제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7.2%p에서 2000년대 -0.4%p로 하락함
 - 제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53.1%에서 2000년대 -6.0%를 기록함
- (독일) 전체 제조업 노동 투입은 7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제조업 성장에 부(負, -)의 영향을 지속하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5%p에서 2000년대 -1.9%p를 기록함
 - 제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27.8%에서 2000년대 -91.6%를 기록함
- (일본) 80년대를 제외하고 전체 제조업 노동 투입은 제조업 성장에 부(負, -)의 영향을 지속하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0%p에서 2000년대 -1.7%p로 하락함
 - 제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5.5%에서 2000년대 -45.5%로 크게 하락함
- (미국) 90년대에는 노동 투입의 제조업 성장 기여도가 소폭 정(正, +)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제조업 성장에 큰 폭으로 부(負,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8%p에서 2000년대 -4.0%p를 기록함

- 제조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27.6%, 90년대 9.5%, 2000년대 -137.4%를 기록하고 있음

○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율)

- (한국) 80년대 이후 자본 투입의 제조업 성장 기여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
 - 제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3.7%p, 90년대와 2000년대에 모두 2.6%p 수준을 유지함
 - 제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27.5%에서 2000년대 37.9%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독일) 80년대 이후 자본 투입의 제조업 성장 기여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5%p, 90년대와 2000년대에 0.2%p로 하락함
 - 제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26.6%에서 2000년대 7.4%를 기록함
- (일본) 80년대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대를 기준으로 제조업 성장의 절반 정도를 자본 투입에 의존하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2.2%p, 90년대 0.9%p, 2000년대에도 1.9%p를 기록함
 - 제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34.3%에서 2000년대 50.2%를 기록함
- (미국) 제조업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90년대이며, 이는 당시 IT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제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4%p, 90년대 1.0%p, 2000년대에도 0.2%p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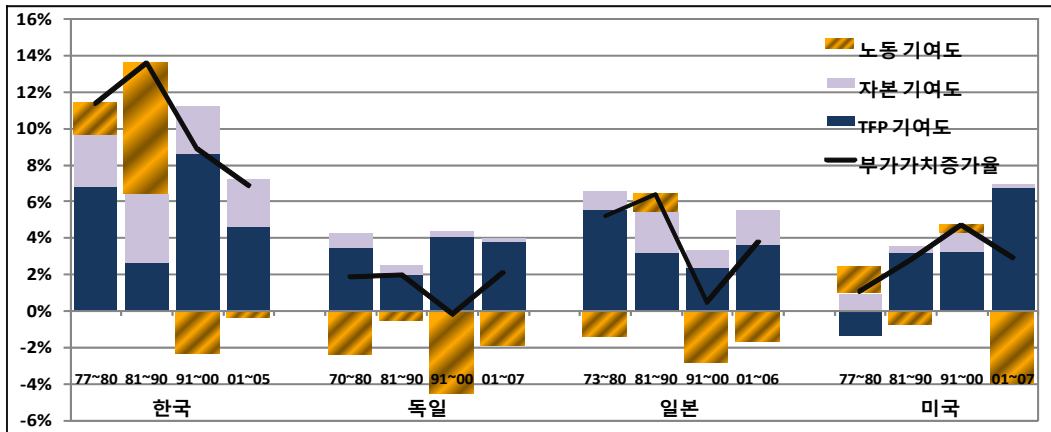
- 제조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3.9%, 90년대 21.4%, 2000년대 7.1%를 기록함

○ TFP(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율)

- (한국) 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2000년대 들어 제조업 TFP의 성장 기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2.6%p에서 2000년대 4.7%p로 상승함
 - 제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9.3%에서 2000년대 68.1%로 상승함
- (독일) 2000년대 TFP의 제조업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산업 성장률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2.0%p에서 2000년대 3.8%p를 기록하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90년대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8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각각 101.3% 및 184.1%로 TFP가 제조업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 (일본) 2000년대 제조업의 TFP 성장 기여율은 산업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3.2%p에서 90년대 2.4%p, 2000년대 3.6%p를 기록함
 - 제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50.2%에서 2000년대 95.3%를 기록함
- (미국) 80년대 이후 제조업 TFP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는 TFP의 기여율이 산업 성장률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 제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와 90년대 모두 3.2%p에서 2000년대 6.7%p로 상승함

- 제조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13.7%, 90년대 69.1%, 2000년대 230.3%를 기록함

< 한·독·일·미의 시기별 제조업 성장 기여도 분해 >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독일은 1990년 이전은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데이터임.

□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의 2000년대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 비교

○ 중화학공업의 TFP 성장 기여도 비교

- 200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의 성장성은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한국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은 연평균 8.8%로 독일의 2.8%, 일본의 5.6%, 미국의 4.2%보다 높음
- 그러나 이는 경제 성장 이론상 한국 경제가 아직 중진국 단계에 있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한국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 여전히 물량투입의존적 성장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중 약 절반인 약 4.5%p(노동 기여도 1.6%p + 자본 기여도 2.9%p)가 물량 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이 TFP의 성장 기여도로 분석됨

- 반면,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노동 기여도는 모두 부(負,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TFP의 성장 기여도가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을 상회할 정도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 중화학공업 가운데 대표적인 화학산업의 경우 노동투입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TFP의 성장 기여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한국 화학산업의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4.9%로 독일, 일본, 미국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노동, 자본, TFP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2.6%p, 1.8%p, 0.5%로 노동과 자본의 물적 생산 요소 투입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반면, 독일의 2000년대 TFP의 성장 기여도는 3.6%p로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1.8%를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의 TFP 성장 기여도도 3.8%p로 산업 성장률 1.8%를 상회함
 - 다만, 일본의 경우 TFP의 성장 기여도가 -2.8%p로 산업 성장에 부(負, -)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 화학 산업의 효율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반도체 등 IT 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광학 제품의 경우 한국의 산업 효율성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됨**
 - 2000년대 한국의 경우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p로 독일 9.8%p, 일본 14.9%p, 미국 18.7%p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국중 한국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 자본 등 물적 생산 요소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높기 때문임
- **자동차, 조선 등이 포함되어 있는 운송장비 산업의 경우 2000년대 한국의 효율성은 독일, 미국보다는 낮으나 일본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TFP의 성장 기여도는 3.8%p로 독일의 4.4%p, 미국의 8.9%p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황임

· 그러나 일본의 TFP의 성장 기여도는 1.8%p에 불과하여 한국보다 산업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 답지 않게 여전히 노동과 자본에 대한 성장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최근 일본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됨

< 2000년대 중화학공업 및 주요 하위 산업의 성장 기여도 분해 >

산 업		한국 (01~05)	독일 (01~07)	일본 (01~06)	미국 (01~07)
중화학공업	부가가치증가율	8.8%	2.8%	5.6%	4.2%
	노동 기여도	1.6%	-1.5%	-1.1%	-4.0%
	자본 기여도	2.9%	0.2%	2.2%	0.4%
	TFP 기여도	4.4%	4.1%	4.5%	7.8%
화학산업	부가가치증가율	4.9%	1.8%	0.2%	1.8%
	노동 기여도	2.6%	-1.8%	-0.4%	-2.9%
	자본 기여도	1.8%	0.1%	3.5%	0.9%
	TFP 기여도	0.5%	3.6%	-2.8%	3.8%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부가가치증가율	14.6%	7.5%	13.2%	10.8%
	노동 기여도	1.6%	-2.5%	-3.7%	-7.8%
	자본 기여도	5.0%	0.1%	2.0%	-0.1%
	TFP 기여도	8.0%	9.8%	14.9%	18.7%
운송장비 제조업	부가가치증가율	9.4%	3.8%	7.9%	5.5%
	노동 기여도	3.4%	-1.1%	3.3%	-3.6%
	자본 기여도	2.2%	0.5%	2.8%	0.2%
	TFP 기여도	3.8%	4.4%	1.8%	8.9%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중화학공업의 성장 기여도는 하위 산업의 명목 CT가중치(산출액 가중치)를 이용한 가중평균 값을 사용.
- 2) 중화학공업은 화학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을 포함.

(4) 서비스업의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 비교

□ 서비스업 비교의 주요 특징

① 독일, 일본, 미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 투입의 기여율은 80년대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업 성장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율은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한국이 151.9%, 독일이 66.6%, 일본 53.4%, 미국 58.5%임

② 80년대 이후 독일, 일본, 미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 투입의 기여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10%대에 불과함

③ 2000년대 4개국의 서비스업에서 TFP는 성장에 부(負,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TFP의 서비스업에 대한 성장 기여율은 한국이 -67.9%, 독일 -22.8%, 일본 -9.0%, 미국 -2.4%임

□ 전 서비스업의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 비교

○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율)의 비교

-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 투입 성장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서비스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0.8%p에서 2000년대 5.5%p로 하락함

· 서비스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12.9%에서 2000년대 151.9%를 기록함

- (독일) 노동 투입의 서비스업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80년대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2.1%p에서 2000년대 1.0%p로 하락 추세를 지속중

· 서비스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69.5%, 90년대 67.1%에서 2000년대 66.6%를 기록함

- (일본) 2000년대에 들어 서비스업 성장에 대한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이 50%를 상회함

- 서비스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2.1%p에서 2000년대 0.7%p로 하락 추세에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46.0%에서 90년대 42.8%, 2000년대 53.4%를 기록함

- (미국) 80년대 이후 서비스업 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서비스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3.4%p에서 2000년대 1.7%p로 하락 추세에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04.2%, 90년대 83.4%, 2000년대 58.5%로 하락 추세에 있음

○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율)의 비교

- (한국) 80년대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의 성장 기여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0%p, 90년대와 2000년대에 모두 0.6%p 수준을 유지함
- 서비스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0.4%, 90년대 10.3%에서 2000년대 16.0%로 증가함

- (독일) 80년대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의 성장 기여율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0년대 현재 산업 성장의 절반 이상을 자본 투입이 기여하고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69.5%p, 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67.1% 및 66.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27.0%에서 2000년대 56.2%로 상승 추세에 있음

- (일본) 8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성장에 대한 자본 투입의 기여율이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중임
 - 서비스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2.3%p, 90년대 1.5%p, 2000년대 0.8%p를 기록함
 - 서비스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52.2%, 90년대 83.5%, 2000년대 55.5%를 기록함

- (미국) 8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성장에 대한 자본 투입의 기여율이 40% 내외 수준을 지속중임
 - 서비스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3%p, 90년대 1.4%p, 2000년대에도 1.3%p를 기록하고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38.1%, 90년대 38.8%, 2000년대 43.9%를 기록함

○ TFP(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율)의 비교

- (한국)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대 현재 -67.9%에 달하고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2.2%p에서 90년대 -2.8%p, 2000년대 -2.5%를 기록함
 -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23.3%에서 90년대 -47.3%, 2000년대 -67.9%를 기록함

- (독일) 서비스업 내 TFP의 산업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80년대 이후 하락하여 2000년대 현재 -22.8% 기록중임
 -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1%p에서 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0.3%p를 기록하고 있음
 -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3.5%에서 90년대 -12.5%, 2000년대 -22.8%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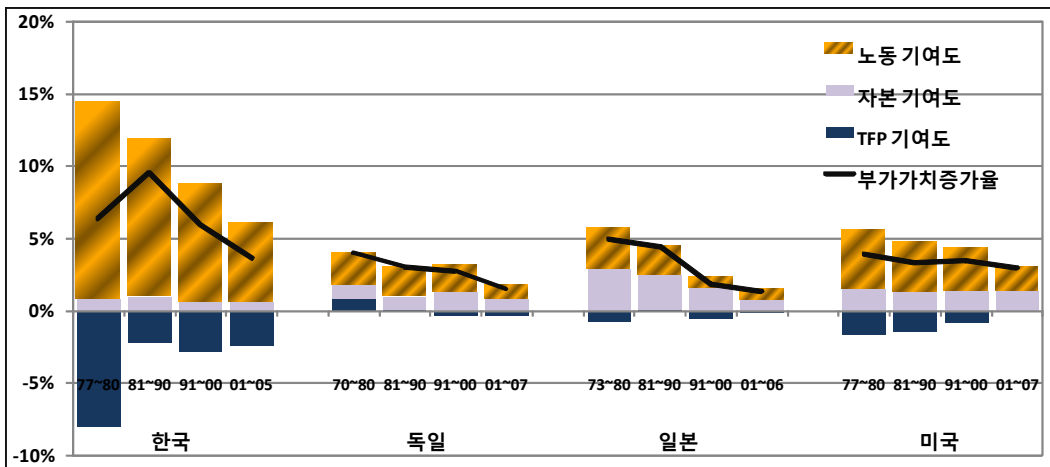
- (일본) 2000년대 서비스업 성장에 대한 TFP의 기여율은 90년대보다 크게 개선된 모습임

-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0.1%p에서 90년대 -0.5%p, 2000년대 -0.1%p를 기록함
-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1.8%에서 90년대 -26.3%, 2000년대 -9.0%를 기록함

- (미국) 80년대 이후 TFP가 서비스업 성장에 부(負,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영향력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80년대 -1.4%p, 90년대 -0.8%p, 2000년대 -0.1%p를 기록함
-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율(TFP 기여도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80년대 -42.4%, 90년대 -22.3%, 2000년대 -2.4%를 기록함

< 한·독·일·미의 시기별 서비스업 성장 기여도 분해 >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는 하위 산업의 명목 CT가중치(산출액 가중치)를 이용한 가중평균 값을 사용.
- 2) 독일은 1990년 이전은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데이터임.

□ 서비스업 주요 부문별 2000년대 생산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율) 비교

- (전통서비스업) 전통서비스업 중 음식·숙박업의 경우 한국의 산업 비효율성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한국의 음식·숙박업 성장에 대한 TFP 기여도는 -3.1%p로 독일 -1.1%p, 미국 -0.6%p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00년대 일본의 음식·숙박업에 대한 TFP의 성장 기여도는 다른 국가와 달리 0.9%p로 양(陽, +)을 나타내고 있어 일본의 음식·숙박업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본집약적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에서 자본 투입이 많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인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의 경우 기여도 자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한국의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성장에 대한 TFP 기여도는 2.8%p로 독일(2.2%p), 일본(0.8%p)보다 높고 미국(4.3%p)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단, 기여율(TFP 기여도÷실질부가가치 증가율) 기준으로는 2000년대 한국이 45.4%로 일본(66.1%), 독일(75.0%), 미국(98.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사회 서비스업) 한국의 공공 부문 서비스업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한국의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성장에 대한 TFP 기여도는 -7.2%p로 독일(-0.5%p), 일본(-1.3%p), 미국(-1.0%p)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2000년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부문은 따로 보면 한국의 TFP의 성장 기여도는 -3.8%p로 독일(1.8%p), 일본(2.1%p), 미국(-0.6%p)에 비해 낮아 국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서비스업 및 주요 하위 산업의 성장 기여도 분해 >

산 업		한국 (01~05)	독일 (01~07)	일본 (01~06)	미국 (01~07)
서비스업	부가가치증가율	3.6%	1.5%	1.4%	3.0%
	노동 기여도	5.5%	1.0%	0.7%	1.7%
	자본 기여도	0.6%	0.8%	0.8%	1.3%
	TFP 기여도	-2.5%	-0.3%	-0.1%	-0.1%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증가율	1.1%	1.1%	-0.5%	2.8%
	노동 기여도	4.4%	2.2%	-1.5%	2.8%
	자본 기여도	-0.2%	0.0%	0.0%	0.6%
	TFP 기여도	-3.1%	-1.1%	0.9%	-0.6%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부가가치증가율	6.2%	3.3%	1.1%	4.3%
	노동 기여도	1.9%	0.0%	-0.1%	-0.7%
	자본 기여도	1.4%	1.1%	0.4%	0.8%
	TFP 기여도	2.8%	2.2%	0.8%	4.3%
공공·사회 및 개 인서비스업	부가가치증가율	3.3%	1.0%	1.9%	2.3%
	노동 기여도	11.3%	1.2%	2.6%	2.6%
	자본 기여도	-0.9%	0.3%	0.6%	0.8%
	TFP 기여도	-7.2%	-0.5%	-1.3%	-1.0%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는 하위 산업의 명목 CT가중치(산출액 가중치)를 이용한 가중평균 값을 사용.

(5) 시사점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지속,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의 마련 및 추진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한국 경제가 대규모의 자본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 성장 동력에 대한 조속한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노동 투입 의존형'에서 하여 '자본 집약형 - 중요 소생산성 주도형'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내 투자 주도 업종인 해운, 항공, 통신, 금융·보험 등에 대하여 투자 관련 금융·세제 지원의 범위 확대 등의 투자 유인책이 필요함
 - 또한 전통서비스업종과 같이 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정도가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업종 고유의 저가 IT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정책 강화 등이 요구됨

둘째, 효율성 증대의 핵심인 기술 수준의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투자 리스크가 높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원천 기술 연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이는 R&D 투자가 응용·상업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 치우쳐 있어 부가가치의 해외유출 과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지속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임
- 특히, 원천·핵심 기술 연구는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할 것임

셋째, 부문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조-서비스업간 연계상품 개발,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효율성 이동의 통로 (conduit)를 만들어야 한다.

-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간 연계 강화와 상품-서비스 융·복합 제품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높은 효율성이 서비스업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 의료기기 및 제약업의 연계, 필수 소비재 생산업 - 제품 렌탈업의 결합, 자동차 - ITS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결합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 특히, 아이폰 등과 같이 새로운 개념의 이중 용·복합 상품 개발과 상업화를 적극 유도하는 산업 전략이 요구됨
- 또한 역으로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인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대형화, 비즈니스 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시행 확대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함

넷째,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산 등을 통해 공공 부문 서비스업의 낮은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대한 성과주의 확산,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인사 평가 시스템 정착 등이 필요함
- 또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의 확산 및 내실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효율성이 공공 부문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별첨 1】 성장회계 방법을 통한 요소별 기여도 분해 방법

○ TFP 증가율의 도출

- 노동(L), 자본(K) 총요소생산성(TFP, A)의 세가지 요소를 포함한 (1)식과 같은 형태의 Cobb-Douglas 함수를 가정

$$Y_{i,j,t} = F(L_{i,j,t}, K_{i,j,t}, A_{i,j,t}) = A_{i,j,t} L_{i,j,t}^{\alpha_{i,j,t}^*} K_{i,j,t}^{1-\alpha_{i,j,t}^*} \dots\dots\dots (1)$$

- i는 국가, j는 산업, t는 시간을 의미
- $\alpha_{i,j,t}^*$ 는 기간중 평균 노동소득분배율

- 위의 식을 로그 선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음

$$\ln Y_{i,j,t} = \alpha_{i,j,t}^* \cdot \ln L_{i,j,t} + (1 - \alpha_{i,j,t}^*) \cdot \ln K_{i,j,t} + \ln A_{i,j,t} \dots\dots\dots (2)$$

- (2)식을 t기와 t-1기에 대한 차분 형태로 고쳐 쓰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Delta \ln A_t$)에 대한 관계로 표현하면 (3)식과 같은 관계로 다시 쓸 수 있음

$$\Delta \ln A_{i,j,t} = \Delta \ln Y_{i,j,t} - \alpha_{i,j,t}^* \cdot \Delta \ln L_{i,j,t} - (1 - \alpha_{i,j,t}^*) \cdot \Delta \ln K_{i,j,t} \dots\dots\dots (3)$$

○ 요소별 성장 기여도 분해

- (3)식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Delta \ln Y_t$)에 대해 다시 쓰면 (4)식과 같이 되며,

$$\Delta \ln Y_{i,j,t} = \alpha_{i,j,t}^* \cdot \Delta \ln L_{i,j,t} + (1 - \alpha_{i,j,t}^*) \cdot \Delta \ln K_{i,j,t} + \Delta \ln A_{i,j,t} \dots (4)$$

- 이 때 $\alpha_{i,j,t}^* \cdot \Delta \ln L_{i,j,t}$ 는 i국가-j산업-t시간에 대한 노동투입의 성장 기여도임
- $(1 - \alpha_{i,j,t}^*) \cdot \Delta \ln K_{i,j,t}$ 는 i국가-j산업-t시간에 대한 자본투입 성장 기여도임
- $\Delta \ln A_{i,j,t}$ 는 i국가-j산업-t시간에 대한 TFP의 성장 기여도임

【별첨 2】 이용 자료에 대한 설명

○ 이용 원자료

- 분석에 이용되는 원자료는 EU-KLEMS에서 구축한 성장 회계 계정(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 EU-KLEMS 성장 회계 계정은 유럽 연합에서 주도하고 있는 EU KLEMS Project의 일환으로 구축된 패널 자료임
 - 이 데이터 셋은 29개국 (EU-25 + 한국, 일본, 미국, 호주), 71개 산업, 63개 변수, 1970~2005년 기간 등에 대한 연간 패널 자료임
 - 최근 일부 국가의 경우 2006~2007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었으나 한국은 자본 통계가 업데이트 되지 못하고 있음

○ 대상 변수

- 실질부가가치: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의 Gross value added, volume indices(1995 = 100)
- 노동투입: 인시 (취업자수 × 근로시간)
 - 취업자수: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의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
 - 근로시간: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의 Total hours worked by persons engaged
- 자본스톡: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의 Real fixed capital stock(1995=100)상의 All asset
- 노동소득분배율(α)은 EU-KLEMS 성장회계 계정의 자본보수와 노동보수를 이용

【별첨 3】 본 보고서상 산업 명칭

보고서상 산업 명칭	EU-KLEMS 상 산업 명칭
전산업	TOTAL INDUSTRIES
농림수산업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 FISHING
광업	MINING AND QUARRYING
제조업	TOTAL MANUFACTURING
음식료 및 담배	FOOD , BEVERAGES AND TOBACCO
섬유·의류·신발	TEXTILES, TEXTILE , LEATHER & FOOTWEAR
목재 및 코르크	WOOD AND OF WOOD AND CORK
펄프·제지·인쇄·출판	PULP, PAPER, PAPER , PRINTING & PUBLISHING
화학산업	CHEMICAL, RUBBER, PLASTICS AND FUEL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화학제품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고무·플라스틱	Rubber and plastics
비금속광물제품	OTHER NON-METALLIC MINERAL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기계장비	MACHINERY, NEC
전기·광학 제품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운송장비	TRANSPORT EQUIPMENT
기타 제조업	MANUFACTURING NEC; RECYCLING
전기·수도·가스 공급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건설	CONSTRUCTION
도·소매	WHOLESALE AND RETAIL TRADE
음식·숙박	HOTELS AND RESTAURANTS
운수·보관·통신	TRANSPORT AND STORAGE AND COMMUNICATION
운수·보관	TRANSPORT AND STORAGE
우편·통신	POST AND TELECOMMUNICATIONS
금융·보험·부동산·사업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 BUSINESS SERVICES
금융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부동산·임대·사업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부동산	Real estate activities
임대·사업	Renting of m&eq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공공·사회 및 개인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UBLIC ADMIN &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교육	EDUCATION
보건업 및 사회복지	HEALTH AND SOCIAL WORK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OTHER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별첨 4】 한·미·독·일의 주요 성장회계 변수 증가율

< 한국의 시기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연평균 환산) >

	77~80	81~90	91~00	01~05
전산업	4.6%	10.0%	6.0%	4.4%
농림수산업	-8.2%	1.8%	1.9%	0.1%
광업	0.0%	0.6%	-0.9%	0.2%
제조업	11.4%	13.6%	8.9%	6.9%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10.9%	7.5%	2.7%	-0.8%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7.3%	5.0%	-1.2%	-5.7%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3.9%	6.2%	-1.3%	1.0%
펄프·제지·인쇄·출판업	10.0%	13.7%	4.8%	-1.6%
화학산업	12.4%	14.0%	9.2%	4.9%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12.8%	8.8%	11.9%	6.0%
화학제품 제조업	12.9%	14.9%	9.2%	4.0%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9.5%	17.8%	6.4%	6.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9%	14.4%	2.6%	3.1%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17.5%	14.6%	6.5%	4.0%
기계장비 제조업	7.2%	19.6%	7.3%	12.2%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19.3%	20.8%	20.6%	14.6%
운송장비 제조업	9.6%	21.5%	10.5%	9.4%
기타 제조업	2.8%	14.9%	-0.5%	1.8%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15.5%	17.6%	9.6%	6.6%
건설업	9.2%	12.4%	1.2%	3.2%
도·소매업	1.4%	10.0%	4.9%	1.1%
음식·숙박업	-0.1%	8.8%	5.6%	1.1%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12.4%	10.1%	10.5%	6.2%
운수·보관업	9.8%	8.0%	6.1%	3.5%
우편·통신 서비스업	26.9%	15.5%	21.2%	10.6%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13.3%	12.9%	6.8%	4.3%
금융중개업	21.0%	16.8%	7.8%	6.2%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7.6%	10.4%	6.1%	3.1%
부동산업	5.3%	6.4%	5.4%	2.0%
임대·사업 서비스업	12.7%	17.9%	7.1%	4.8%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0%	6.1%	3.6%	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3.8%	3.1%	3.1%	2.5%
교육 서비스업	4.6%	4.8%	2.4%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5%	15.4%	3.6%	5.2%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8.9%	9.4%	6.4%	3.8%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한국의 시기별 실질자본스톡 증가율(연평균 환산) >

	77~80	81~90	91~00	01~05
전산업	2.6%	4.2%	6.1%	4.2%
농림수산업	6.3%	6.9%	5.3%	1.8%
광업	7.5%	6.0%	-0.1%	0.0%
제조업	7.3%	9.5%	6.8%	6.1%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6.2%	8.9%	4.1%	4.4%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1.5%	6.2%	4.1%	0.0%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2.8%	7.2%	3.4%	-1.3%
펄프·제지·인쇄·출판업	5.9%	8.9%	9.4%	5.6%
화학산업	8.7%	10.2%	5.2%	3.4%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8.0%	10.4%	4.4%	-0.4%
화학제품 제조업	8.6%	10.0%	5.9%	4.2%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9.5%	10.6%	3.9%	4.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5%	9.3%	4.0%	3.4%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7.8%	9.9%	5.0%	4.1%
기계장비 제조업	5.6%	8.5%	5.1%	5.9%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13.1%	11.4%	12.7%	10.3%
운송장비 제조업	9.4%	10.3%	6.8%	8.1%
기타 제조업	4.5%	7.6%	9.2%	4.6%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15.9%	8.1%	8.7%	4.3%
건설업	0.2%	1.6%	2.2%	-0.4%
도·소매업	9.0%	10.6%	5.8%	2.7%
음식·숙박업	2.7%	10.8%	9.6%	5.4%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9.1%	9.3%	9.2%	5.1%
운수·보관업	6.8%	9.1%	9.3%	5.1%
우편·통신 서비스업	23.5%	10.3%	8.7%	4.8%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0.5%	1.4%	4.4%	3.0%
금융중개업	11.3%	8.7%	11.2%	2.6%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0.4%	1.3%	4.2%	3.0%
부동산업	0.3%	1.2%	4.4%	3.8%
임대·사업 서비스업	0.7%	1.6%	3.8%	1.5%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2%	9.7%	9.7%	6.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5.5%	10.6%	9.5%	6.2%
교육 서비스업	3.5%	5.8%	9.6%	1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3%	9.3%	9.7%	5.2%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6.7%	8.2%	10.7%	4.2%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한국의 시기별 노동투입 증가율(연평균 환산) >

	77~80	81~90	91~00	01~05
전산업	3.5%	5.4%	2.9%	2.5%
농림수산업	-9.0%	-8.9%	-4.0%	-10.0%
광업	11.8%	-10.4%	-23.7%	-4.8%
제조업	2.9%	11.9%	-3.8%	-0.7%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0.9%	8.5%	-2.8%	1.3%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0.3%	5.0%	-13.1%	-17.8%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20.1%	-0.8%	-4.5%	2.2%
펄프·제지·인쇄·출판업	10.8%	13.6%	1.3%	-2.5%
화학산업	3.5%	13.9%	-1.8%	5.7%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2.7%	6.8%	-6.2%	8.5%
화학제품 제조업	3.4%	17.0%	-0.9%	-3.9%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3.9%	10.8%	-1.4%	13.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2%	10.5%	-4.6%	-1.7%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11.5%	13.5%	-2.1%	0.5%
기계장비 제조업	6.4%	20.5%	3.2%	1.8%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10.2%	21.6%	-4.3%	3.1%
운송장비 제조업	7.1%	24.6%	5.9%	4.6%
기타 제조업	-12.7%	5.0%	-5.7%	-6.9%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16.3%	19.8%	-0.5%	8.1%
건설업	22.2%	9.6%	-0.3%	6.5%
도·소매업	19.4%	10.7%	3.5%	-2.5%
음식·숙박업	9.9%	-1.4%	18.5%	4.2%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16.3%	8.9%	5.3%	2.7%
운수·보관업	15.4%	9.2%	4.1%	0.6%
우편·통신 서비스업	23.6%	6.4%	14.4%	13.9%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17.0%	23.1%	17.3%	9.3%
금융중개업	9.6%	15.0%	12.0%	-2.7%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28.2%	32.0%	20.8%	14.4%
부동산업	24.7%	31.5%	25.0%	15.0%
임대·사업 서비스업	29.3%	32.1%	19.3%	14.2%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7.3%	11.9%	6.7%	10.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8.1%	12.8%	7.4%	6.2%
교육 서비스업	23.9%	14.6%	3.5%	1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5%	14.5%	9.1%	15.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3.8%	11.7%	9.4%	12.0%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한국의 시기별 TFP 증가율(연평균 환산) >

	77~80	81~90	91~00	01~05
전산업	1.3%	4.9%	2.5%	1.5%
농림수산업	-1.3%	13.6%	10.1%	14.1%
광업	-10.9%	6.2%	7.1%	1.7%
제조업	6.8%	2.6%	8.6%	4.7%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7.7%	-1.1%	2.6%	-3.6%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7.0%	-0.3%	7.8%	7.8%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13.7%	5.7%	1.3%	-0.2%
펄프·제지·인쇄·출판업	0.6%	1.4%	1.3%	-0.8%
화학산업	6.3%	2.1%	7.4%	0.5%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6.5%	-0.8%	10.5%	3.7%
화학제품 제조업	7.0%	1.6%	6.7%	3.6%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3.7%	7.1%	6.1%	-3.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1%	4.4%	3.9%	2.7%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7.7%	3.0%	5.3%	1.7%
기계장비 제조업	1.2%	3.1%	3.6%	9.3%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8.1%	2.7%	18.2%	8.0%
운송장비 제조업	1.9%	1.3%	4.4%	3.8%
기타 제조업	10.7%	9.1%	2.5%	5.9%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0.6%	6.0%	3.8%	1.2%
건설업	-15.0%	2.7%	1.5%	-3.2%
도·소매업	-11.6%	-0.6%	0.5%	1.9%
음식·숙박업	-8.1%	10.3%	-12.8%	-3.1%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2.8%	1.0%	4.3%	2.8%
운수·보관업	-4.6%	-1.2%	1.0%	2.2%
우편·통신 서비스업	3.3%	7.8%	8.5%	0.9%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4.0%	-3.0%	-5.6%	-1.8%
금융중개업	11.0%	1.3%	-4.1%	6.3%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2.8%	-4.0%	-5.4%	-5.2%
부동산업	1.6%	0.2%	-1.6%	-3.4%
임대·사업 서비스업	-11.7%	-10.6%	-10.8%	-8.3%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4.7%	-6.6%	-2.5%	-7.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5.4%	-10.6%	-3.9%	-3.8%
교육 서비스업	-31.8%	-14.7%	1.2%	-9.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2%	0.3%	-5.4%	-11.1%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4.3%	-2.1%	-3.0%	-8.2%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미국의 시기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연평균 환산) >

	77~80	81~90	91~00	01~07
전산업	2.7%	3.2%	3.6%	2.6%
농림수산업	1.4%	2.7%	3.3%	4.9%
광업	-2.2%	3.3%	0.5%	-0.4%
제조업	1.1%	2.8%	4.7%	2.9%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8.2%	0.8%	2.1%	1.5%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2.1%	1.0%	0.0%	-3.5%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3.5%	5.6%	-0.1%	0.5%
펄프·제지·인쇄·출판업	1.4%	1.6%	0.1%	-0.4%
화학산업	-1.6%	3.1%	3.5%	1.8%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6.4%	-0.4%	4.9%	-1.6%
화학제품 제조업	-2.2%	3.4%	2.4%	4.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2.3%	5.1%	5.6%	-0.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	2.3%	4.8%	-0.3%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2.1%	-0.9%	3.7%	1.0%
기계장비 제조업	0.1%	-0.2%	2.1%	3.6%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13.5%	10.3%	18.1%	10.8%
운송장비 제조업	-8.7%	4.0%	1.9%	5.5%
기타 제조업	-5.7%	2.5%	3.9%	2.9%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4.9%	5.6%	1.7%	2.2%
건설업	0.3%	2.7%	2.6%	-3.3%
도·소매업	2.0%	4.6%	6.1%	2.5%
음식·숙박업	2.0%	3.2%	3.3%	2.8%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6.5%	2.3%	4.9%	4.3%
운수·보관업	3.4%	3.1%	4.7%	4.0%
우편·통신 서비스업	9.6%	1.7%	5.1%	4.6%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6.0%	3.8%	4.0%	3.4%
금융중개업	6.3%	2.8%	4.4%	3.2%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5.9%	4.2%	3.9%	3.5%
부동산업	4.7%	2.5%	2.7%	2.4%
임대·사업 서비스업	8.3%	6.7%	5.3%	4.7%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5%	2.3%	1.1%	2.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6%	1.8%	-0.2%	1.3%
교육 서비스업	2.0%	1.4%	1.9%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8%	2.5%	1.1%	3.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3.1%	5.2%	3.6%	3.8%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미국의 시기별 실질자본스톡 증가율(연평균 환산) >

	77~80	81~90	91~00	01~07
전산업	4.0%	3.0%	3.5%	3.4%
농림수산업	2.9%	-1.7%	0.5%	1.3%
광업	6.5%	1.9%	0.7%	3.4%
제조업	3.7%	1.4%	3.0%	0.6%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3.7%	1.9%	1.2%	0.5%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0.2%	0.2%	0.8%	-3.1%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3.3%	-1.0%	1.3%	0.5%
펄프·제지·인쇄·출판업	4.0%	3.1%	1.1%	0.3%
화학산업	3.5%	1.2%	2.8%	1.6%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3.2%	-0.2%	0.2%	4.2%
화학제품 제조업	4.1%	1.6%	3.5%	1.0%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2.3%	2.4%	3.8%	0.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8%	-0.6%	1.1%	1.2%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2.0%	-0.8%	0.8%	-0.5%
기계장비 제조업	6.9%	1.8%	6.3%	2.0%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6.2%	3.8%	6.2%	-0.6%
운송장비 제조업	4.7%	1.4%	4.7%	1.0%
기타 제조업	4.3%	1.5%	2.3%	1.8%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2.7%	2.1%	0.9%	1.7%
건설업	2.2%	-1.4%	7.3%	4.3%
도·소매업	4.5%	3.8%	4.1%	4.1%
음식·숙박업	2.9%	3.2%	2.4%	2.2%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4.6%	1.9%	5.1%	2.0%
운수·보관업	3.1%	0.0%	3.2%	1.7%
우편·통신 서비스업	7.0%	4.5%	6.7%	2.1%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3.8%	3.5%	3.5%	3.7%
금융중개업	9.8%	9.8%	7.1%	5.9%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3.7%	3.2%	3.3%	3.5%
부동산업	3.7%	3.2%	2.8%	3.0%
임대·사업 서비스업	4.0%	5.6%	14.7%	9.1%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6%	4.7%	4.5%	4.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5.2%	4.9%	4.3%	4.5%
교육 서비스업	5.1%	4.9%	5.9%	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	4.6%	3.9%	5.6%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8%	3.0%	3.5%	2.0%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미국의 시기별 노동투입 증가율(연평균 환산) >

	77~80	81~90	91~00	01~07
전산업	5.7%	3.7%	3.7%	1.4%
농림수산업	3.7%	-1.0%	0.0%	-3.6%
광업	15.0%	-8.6%	-5.1%	2.8%
제조업	2.0%	-1.1%	0.7%	-6.3%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0.1%	-0.9%	2.0%	-4.6%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3.8%	-5.1%	-7.4%	-15.8%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3.9%	1.6%	4.9%	-4.3%
펄프·제지·인쇄·출판업	3.4%	2.6%	0.3%	-6.9%
화학산업	1.3%	0.3%	0.7%	-6.5%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1.5%	-4.6%	-5.4%	-5.7%
화학제품 제조업	2.2%	-0.5%	-0.9%	-7.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0.7%	2.7%	3.8%	-5.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9%	0.9%	3.1%	-3.6%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1.0%	-4.4%	2.1%	-3.7%
기계장비 제조업	7.6%	-4.8%	2.0%	-4.8%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11.7%	-0.5%	0.2%	-9.7%
운송장비 제조업	-0.6%	1.5%	0.5%	-4.7%
기타 제조업	-1.5%	1.4%	3.2%	-5.5%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7.2%	0.9%	-4.1%	-2.7%
건설업	9.6%	4.7%	6.6%	3.7%
도·소매업	4.9%	3.8%	3.0%	0.0%
음식·숙박업	8.1%	5.7%	5.0%	3.9%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4.2%	0.6%	4.8%	-1.1%
운수·보관업	2.9%	0.7%	5.0%	1.1%
우편·통신 서비스업	6.2%	0.6%	4.5%	-4.8%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12.9%	9.8%	7.1%	4.3%
금융중개업	9.4%	5.0%	3.4%	1.8%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14.9%	12.1%	8.5%	5.1%
부동산업	13.5%	5.6%	3.1%	4.3%
임대·사업 서비스업	15.2%	13.1%	9.1%	5.2%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1%	4.8%	3.4%	3.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6.1%	2.3%	0.3%	1.3%
교육 서비스업	2.8%	3.8%	4.6%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8.9%	5.0%	4.9%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4.0%	6.3%	4.8%	2.1%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미국의 시기별 TFP 증가율(연평균 환산) >

	77~80	81~90	91~00	01~07
전산업	-2.4%	-0.3%	-0.1%	0.5%
농림수산업	-1.8%	4.1%	3.0%	6.2%
광업	-12.4%	5.8%	2.3%	-3.6%
제조업	-1.4%	3.2%	3.2%	6.7%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6.9%	0.6%	0.5%	3.6%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5.0%	4.9%	5.2%	9.2%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1.8%	4.8%	-3.9%	3.4%
펄프·제지·인쇄·출판업	-2.1%	-1.2%	-0.5%	3.8%
화학산업	-3.9%	2.4%	1.8%	3.8%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7.2%	1.8%	7.1%	-2.9%
화학제품 제조업	-5.2%	3.0%	0.9%	6.5%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1%	2.5%	1.8%	3.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8%	1.8%	2.5%	1.2%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0.8%	2.7%	2.0%	3.7%
기계장비 제조업	-7.3%	3.1%	-1.0%	6.3%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2.6%	10.0%	16.1%	18.7%
운송장비 제조업	-8.7%	2.6%	0.5%	8.9%
기타 제조업	-4.8%	1.1%	0.9%	6.7%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8.8%	3.7%	2.0%	1.6%
건설업	-8.6%	-1.5%	-4.0%	-7.1%
도·소매업	-2.8%	0.8%	2.9%	1.4%
음식·숙박업	-4.6%	-1.9%	-1.0%	-0.6%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2.2%	1.3%	0.0%	4.3%
운수·보관업	0.5%	2.6%	0.2%	2.8%
우편·통신 서비스업	3.1%	-0.4%	-0.4%	6.0%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1.0%	-2.1%	-1.0%	-0.6%
금융중개업	-3.3%	-4.3%	-0.6%	-0.4%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1.0%	-2.0%	-1.4%	-0.7%
부동산업	0.4%	-0.8%	-0.1%	-0.7%
임대·사업 서비스업	-3.7%	-4.6%	-5.0%	-1.1%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5%	-2.5%	-2.5%	-1.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4.3%	-1.0%	-1.2%	-0.6%
교육 서비스업	-1.0%	-2.5%	-2.8%	-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5.8%	-3.8%	-1.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0.7%	-0.6%	-0.9%	1.7%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독일의 시기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연평균 환산) >

	70~80	81~90	91~00	01~07
전산업	2.8%	2.5%	1.7%	1.4%
농림수산업	1.2%	2.0%	0.3%	-0.9%
광업	-3.7%	-2.8%	-5.2%	-2.4%
제조업	1.9%	2.0%	-0.2%	2.1%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2.4%	-0.4%	-0.7%	-1.3%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1.5%	-0.7%	-4.9%	-1.5%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0.8%	-0.7%	2.6%	-1.5%
펄프·제지·인쇄·출판업	0.5%	2.0%	0.1%	0.0%
화학산업	3.7%	3.2%	0.6%	1.8%
코르크·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1.0%	-2.6%	-22.3%	-18.2%
화학제품 제조업	4.2%	3.1%	2.1%	3.6%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3.6%	5.0%	1.6%	3.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6%	0.6%	1.1%	0.4%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0.7%	1.5%	0.8%	0.5%
기계장비 제조업	0.4%	1.8%	-1.3%	1.7%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4.6%	4.1%	0.5%	7.5%
운송장비 제조업	2.8%	2.5%	-0.5%	3.8%
기타 제조업	0.7%	-0.4%	-2.4%	-3.0%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3.9%	3.1%	2.4%	0.6%
건설업	0.7%	0.1%	-0.9%	-2.9%
도·소매업	2.8%	2.8%	1.6%	0.5%
음식·숙박업	0.9%	0.6%	0.8%	1.1%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3.1%	3.0%	3.5%	3.3%
운수·보관업	3.1%	3.0%	3.3%	3.4%
우편·통신 서비스업	3.1%	3.0%	3.9%	3.1%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5.1%	4.6%	3.7%	1.8%
금융중개업	4.8%	2.9%	2.1%	-0.2%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5.3%	5.1%	4.1%	2.2%
부동산업	4.8%	4.2%	4.7%	2.4%
임대·사업 서비스업	5.8%	6.0%	3.4%	2.1%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3%	1.9%	2.1%	1.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4.8%	1.9%	0.7%	0.0%
교육 서비스업	3.9%	0.5%	1.7%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	1.4%	4.9%	3.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3.5%	3.6%	1.0%	0.0%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990년 이전은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데이터임.

< 독일의 시기별 실질자본스톡 증가율(연평균 환산) >

	70~80	81~90	91~00	01~07
전산업	3.1%	2.2%	3.0%	1.9%
농림수산업	0.1%	-0.2%	-0.9%	-0.2%
광업	5.9%	1.6%	-2.2%	-1.3%
제조업	3.1%	2.1%	1.7%	0.6%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2.2%	0.8%	1.0%	-0.3%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1.2%	0.8%	-1.1%	-2.4%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0.9%	0.0%	2.7%	-0.4%
펄프·제지·인쇄·출판업	5.9%	3.9%	3.5%	1.9%
화학산업	2.0%	1.8%	1.7%	0.3%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0.6%	-2.0%	-0.2%	-0.3%
화학제품 제조업	2.6%	1.8%	1.7%	0.2%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3.7%	3.8%	2.5%	0.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5%	0.9%	2.0%	-1.9%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1.9%	0.1%	1.5%	-0.1%
기계장비 제조업	3.9%	2.8%	1.0%	0.8%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6.7%	4.4%	1.4%	0.6%
운송장비 제조업	4.8%	4.1%	2.4%	2.6%
기타 제조업	3.1%	1.0%	1.1%	-1.0%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6.1%	3.1%	3.4%	1.0%
건설업	0.0%	-0.9%	1.9%	-2.9%
도·소매업	1.4%	3.7%	4.7%	2.7%
음식·숙박업	3.5%	1.6%	2.5%	0.4%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2.9%	4.0%	3.2%	2.7%
운수·보관업	3.0%	4.0%	3.5%	3.5%
우편·통신 서비스업	2.6%	4.1%	2.6%	0.9%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2.9%	2.2%	3.5%	2.3%
금융중개업	2.7%	1.2%	2.8%	0.7%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2.9%	2.3%	3.5%	2.3%
부동산업	3.0%	2.0%	3.2%	1.9%
임대·사업 서비스업	1.3%	8.7%	9.6%	7.1%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0%	1.6%	2.4%	1.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4.6%	1.8%	2.3%	1.2%
교육 서비스업	4.5%	0.1%	1.9%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	2.0%	3.3%	2.8%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5%	2.0%	2.1%	0.4%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990년 이전은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데이터임.

< 독일의 시기별 노동투입 증가율(연평균 환산) >

	70~80	81~90	91~00	01~07
전산업	-0.5%	1.1%	-0.3%	0.0%
농림수산업	-8.3%	-5.0%	-9.7%	-3.8%
광업	-6.0%	-6.2%	-17.6%	-6.8%
제조업	-3.2%	-0.7%	-5.8%	-2.6%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1.8%	-2.7%	-2.0%	-1.9%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9.3%	-7.9%	-16.9%	-11.8%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3.6%	-2.2%	-3.2%	-7.6%
펄프·제지·인쇄·출판업	-2.7%	0.4%	-5.4%	-3.9%
화학산업	-1.4%	1.2%	-5.5%	-3.0%
코르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4.4%	-10.6%	-14.8%	-5.8%
화학제품 제조업	-2.0%	0.2%	-8.0%	-3.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0.7%	5.3%	-1.0%	-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6%	-4.1%	-5.2%	-6.2%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4.2%	-1.0%	-4.6%	-0.9%
기계장비 제조업	-3.2%	0.7%	-7.8%	-0.5%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1.7%	1.2%	-7.8%	-3.1%
운송장비 제조업	0.8%	1.9%	-1.7%	-1.4%
기타 제조업	-2.6%	-1.6%	-6.5%	-3.1%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1.1%	0.7%	-7.6%	-2.1%
건설업	-1.7%	-1.6%	-0.5%	-4.9%
도·소매업	0.2%	1.5%	0.9%	-1.2%
음식·숙박업	1.7%	5.2%	5.1%	2.2%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1.0%	1.4%	-3.5%	0.1%
운수·보관업	1.1%	1.4%	-2.1%	0.6%
우편·통신 서비스업	1.0%	1.3%	-8.2%	-2.0%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4.7%	6.5%	9.2%	4.1%
금융중개업	3.5%	2.8%	1.1%	-3.0%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5.6%	8.6%	12.4%	6.0%
부동산업	5.6%	8.7%	11.9%	1.2%
임대·사업 서비스업	5.6%	8.6%	12.4%	6.5%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2%	3.2%	2.1%	1.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3.2%	0.3%	-2.8%	-2.4%
교육 서비스업	6.5%	1.5%	3.1%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9%	6.3%	5.0%	3.2%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5.2%	5.3%	3.8%	2.1%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990년 이전은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데이터임.

< 독일의 시기별 TFP 증가율(연평균 환산) >

	70~80	81~90	91~00	01~07
전산업	2.3%	1.1%	0.9%	0.7%
농림수산업	13.0%	8.6%	11.2%	2.9%
광업	-1.4%	1.7%	13.5%	5.2%
제조업	3.5%	2.0%	4.0%	3.8%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2.9%	1.1%	0.3%	0.2%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5.9%	5.7%	9.2%	8.0%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4.2%	1.6%	5.2%	4.6%
펄프·제지·인쇄·출판업	0.7%	0.5%	2.9%	1.6%
화학산업	3.8%	1.7%	4.0%	3.6%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3.0%	3.0%	-13.9%	-16.0%
화학제품 제조업	4.6%	2.4%	7.3%	5.7%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9%	0.2%	1.6%	4.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2%	3.4%	4.2%	5.4%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3.8%	2.3%	4.6%	1.1%
기계장비 제조업	2.3%	0.7%	5.1%	1.9%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4.1%	2.1%	6.7%	9.8%
운송장비 제조업	0.7%	0.0%	0.4%	4.4%
기타 제조업	2.6%	1.0%	3.5%	-0.3%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0.3%	1.0%	3.9%	0.8%
건설업	2.0%	1.6%	-0.9%	1.7%
도·소매업	2.3%	1.0%	0.2%	1.1%
음식·숙박업	-0.6%	-5.1%	-4.7%	-1.1%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1.6%	0.9%	5.1%	2.2%
운수·보관업	1.9%	1.3%	4.5%	1.9%
우편·통신 서비스업	1.4%	0.4%	6.7%	3.4%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1.6%	1.0%	-1.7%	-1.2%
금융중개업	1.5%	0.6%	0.5%	1.8%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1.7%	1.3%	-1.8%	-1.3%
부동산업	1.7%	1.8%	1.0%	0.6%
임대·사업 서비스업	2.3%	-2.6%	-7.5%	-4.7%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0.7%	-1.0%	0.0%	-0.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5%	1.4%	2.6%	1.8%
교육 서비스업	-2.4%	-0.8%	-1.4%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	-4.1%	0.2%	-0.1%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0.8%	-0.4%	-2.1%	-1.5%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990년 이전은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데이터임.

< 일본의 시기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연평균 환산) >

	73~80	81~90	91~00	01~06
전산업	4.3%	4.8%	1.0%	1.6%
농림수산업	-1.7%	1.4%	-0.8%	-1.5%
광업	2.6%	-2.5%	-3.6%	-1.7%
제조업	5.2%	6.4%	0.5%	3.8%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2.0%	0.4%	0.7%	-1.0%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3.6%	1.6%	-7.9%	-5.1%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1.3%	-0.4%	-3.5%	-4.7%
펄프·제지·인쇄·출판업	1.2%	4.9%	-1.6%	-0.9%
화학산업	-0.4%	8.9%	0.3%	0.2%
코르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13.1%	3.9%	-1.4%	-5.0%
화학제품 제조업	0.9%	12.9%	2.0%	1.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2.7%	5.6%	-1.2%	6.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8%	4.4%	-1.2%	0.8%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2.2%	2.8%	0.0%	0.0%
기계장비 제조업	12.1%	7.8%	-0.7%	9.5%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13.2%	17.4%	5.7%	13.2%
운송장비 제조업	15.1%	4.6%	0.2%	7.9%
기타 제조업	5.0%	4.5%	-2.1%	-0.4%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8.5%	5.5%	1.8%	2.6%
건설업	0.5%	3.3%	-2.7%	-1.6%
도·소매업	6.7%	4.7%	2.0%	-0.2%
음식·숙박업	0.5%	1.1%	0.2%	-0.5%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2.7%	4.8%	1.8%	1.1%
운수·보관업	2.5%	4.1%	-0.7%	1.1%
우편·통신 서비스업	3.3%	7.0%	7.9%	1.1%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5.2%	6.3%	2.7%	2.1%
금융중개업	5.2%	9.9%	1.8%	1.5%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5.2%	4.8%	3.0%	2.3%
부동산업	4.7%	3.6%	1.8%	1.0%
임대·사업 서비스업	6.4%	7.3%	4.8%	4.3%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2%	2.8%	0.9%	1.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6.0%	2.1%	1.2%	0.7%
교육 서비스업	4.1%	2.4%	-0.1%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8%	3.9%	4.3%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1%	4.6%	-1.1%	1.8%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일본의 시기별 실질자본스톡 증가율(연평균 환산) >

	73~80	81~90	91~00	01~06
전산업	7.4%	5.6%	3.5%	2.0%
농림수산업	3.8%	3.7%	2.3%	0.1%
광업	-0.6%	0.4%	0.7%	-0.4%
제조업	2.6%	5.1%	2.2%	4.3%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3.7%	5.2%	3.9%	4.1%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0.4%	2.5%	-0.1%	-2.3%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0.5%	2.3%	0.2%	-2.2%
펄프·제지·인쇄·출판업	2.3%	6.5%	3.2%	2.4%
화학산업	2.1%	3.6%	2.7%	5.4%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0.8%	-0.3%	4.4%	6.4%
화학제품 제조업	1.8%	3.4%	2.5%	5.6%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4.4%	6.7%	1.9%	4.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8%	2.7%	1.4%	4.4%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1.9%	2.6%	0.6%	2.0%
기계장비 제조업	3.5%	7.9%	2.9%	5.3%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4.4%	9.9%	3.2%	5.5%
운송장비 제조업	5.8%	6.0%	1.8%	6.0%
기타 제조업	1.2%	6.0%	2.1%	2.6%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10.8%	3.5%	3.3%	0.5%
건설업	1.0%	3.5%	2.1%	-2.8%
도·소매업	8.1%	3.9%	1.4%	0.0%
음식·숙박업	9.8%	7.2%	1.2%	0.1%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5.4%	4.7%	3.8%	0.9%
운수·보관업	5.4%	5.2%	3.0%	0.5%
우편·통신 서비스업	5.5%	3.2%	5.9%	1.8%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11.1%	6.6%	3.9%	2.3%
금융중개업	3.2%	3.8%	2.3%	0.3%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11.6%	6.8%	4.0%	2.3%
부동산업	11.7%	6.2%	3.8%	2.0%
임대·사업 서비스업	7.9%	16.1%	5.9%	5.1%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7%	7.1%	5.5%	2.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0.2%	6.7%	7.5%	1.9%
교육 서비스업	7.0%	4.4%	2.9%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	12.2%	4.8%	3.9%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8.0%	7.5%	4.3%	2.0%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일본의 시기별 노동투입 증가율(연평균 환산) >

	73~80	81~90	91~00	01~06
전산업	0.9%	1.5%	-1.0%	-0.8%
농림수산업	-5.6%	-6.1%	-7.8%	-5.4%
광업	-6.6%	-8.2%	-7.5%	-10.9%
제조업	-2.3%	1.7%	-5.0%	-3.1%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0.1%	2.3%	-1.0%	-1.2%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4.9%	-1.9%	-12.4%	-13.9%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7.2%	-6.3%	-8.7%	-8.3%
펄프·제지·인쇄·출판업	0.2%	3.2%	-3.6%	-3.7%
화학산업	-2.7%	2.5%	-2.6%	-1.3%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1.5%	-5.6%	-5.5%	-4.6%
화학제품 제조업	-5.1%	0.2%	-2.3%	-2.4%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1%	4.5%	-2.6%	-0.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5%	-1.9%	-6.1%	-7.9%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3.6%	1.5%	-5.3%	-2.7%
기계장비 제조업	-2.5%	2.7%	-4.8%	-0.3%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0.3%	6.2%	-5.1%	-5.9%
운송장비 제조업	-0.5%	1.7%	-2.3%	6.1%
기타 제조업	-1.2%	-0.7%	-6.3%	-6.6%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0.2%	-0.8%	-0.9%	-5.9%
건설업	3.0%	1.0%	-0.6%	-4.0%
도·소매업	2.7%	0.1%	-0.6%	-3.4%
음식·숙박업	7.0%	3.2%	1.2%	-2.2%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0.5%	2.0%	0.4%	-0.2%
운수·보관업	0.9%	2.5%	0.3%	0.0%
우편·통신 서비스업	-1.0%	-0.4%	1.3%	-0.9%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8.7%	8.8%	2.5%	3.6%
금융중개업	6.0%	3.0%	-2.7%	-1.0%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10.5%	11.8%	4.2%	4.8%
부동산업	9.5%	8.1%	0.6%	-3.1%
임대·사업 서비스업	10.8%	12.7%	5.0%	6.0%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7%	3.4%	2.4%	3.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2.7%	-0.5%	-1.1%	-2.9%
교육 서비스업	3.8%	1.2%	-0.6%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	6.1%	7.5%	10.9%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1%	5.0%	1.6%	0.4%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일본의 시기별 TFP 증가율(연평균 환산) >

	73~80	81~90	91~00	01~06
전산업	1.4%	1.7%	0.2%	1.2%
농림수산업	1.9%	4.0%	1.7%	1.0%
광업	6.4%	1.5%	0.1%	4.4%
제조업	5.6%	3.2%	2.4%	3.6%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0.0%	-3.6%	-1.0%	-2.8%
섬유·의류·신발 제조업	8.2%	3.0%	3.6%	10.9%
목재 및 코르크 제조업	6.9%	4.8%	3.0%	1.9%
펄프·제지·인쇄·출판업	0.5%	0.7%	-0.4%	0.3%
화학산업	-0.4%	5.7%	-0.5%	-2.8%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	-14.0%	4.6%	-5.2%	-10.9%
화학제품 제조업	1.9%	10.6%	1.2%	-1.6%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2.0%	0.3%	0.0%	5.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2%	4.5%	2.0%	3.5%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3.3%	0.7%	2.8%	0.7%
기계장비 제조업	13.6%	3.3%	1.6%	8.1%
전기·광학 제품 제조업	12.2%	9.8%	7.6%	14.9%
운송장비 제조업	12.7%	1.0%	0.9%	1.8%
기타 제조업	5.8%	3.6%	2.3%	4.3%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1.4%	2.9%	-0.7%	3.4%
건설업	-2.2%	1.6%	-2.7%	2.2%
도·소매업	3.3%	3.9%	2.0%	1.9%
음식·숙박업	-6.5%	-3.0%	-1.1%	0.9%
운수·보관·통신 서비스업	1.4%	2.1%	0.2%	0.8%
운수·보관업	1.6%	1.1%	-1.5%	1.0%
우편·통신 서비스업	1.2%	5.3%	3.4%	-0.2%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5.0%	-1.1%	-0.7%	-0.7%
금융중개업	0.4%	6.6%	2.0%	1.7%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6.1%	-3.4%	-1.1%	-0.9%
부동산업	-6.9%	-2.7%	-1.7%	-0.7%
임대·사업 서비스업	-3.7%	-6.3%	-0.4%	-1.6%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0.4%	-1.7%	-2.3%	-1.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9%	0.7%	-0.6%	2.1%
교육 서비스업	0.0%	0.8%	-0.1%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9%	-6.2%	-2.9%	-4.3%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1%	-1.4%	-3.6%	0.9%

자료: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2) 사회적 자본의 확충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1) 저조한 사회적 자본과 'ISO 26000(SR)'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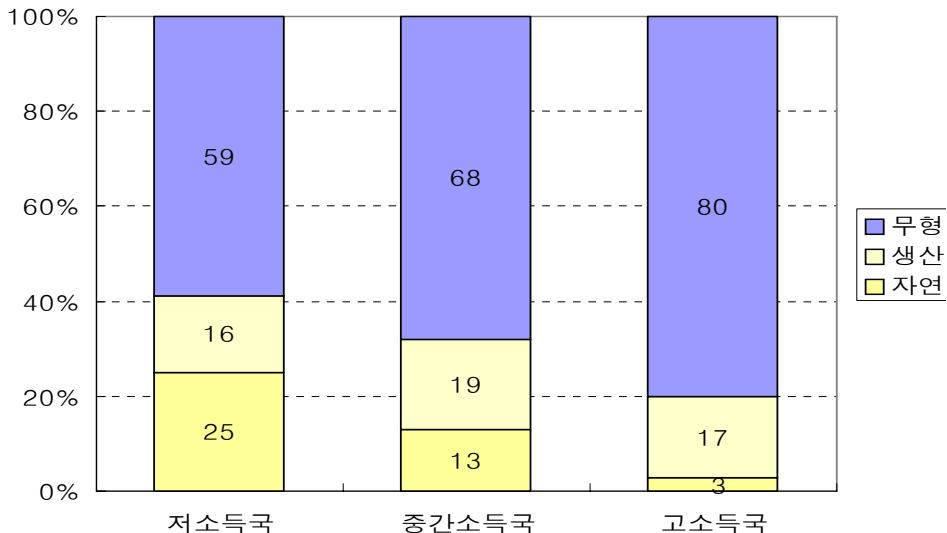
□ 저조한 사회적 자본과 낮은 사회통합

○ 우리의 사회적 자본⁷⁹⁾ 순위는 세계 118개국 중 26위,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OECD국가 평균의 1/3에 불과

- 세계은행(2007)의 자료⁸⁰⁾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자본 순위에서 한국은 118개국 중 26위에 머물렀으며,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OECD회원국 평균 1인당 35만3339달러에 비해 우리는 10만7864달러로 1/3에 불과함

- 소득의 수준별로 국부의 원천을 분석해 본 결과,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옮겨갈수록 교육, 법치, 신뢰 등 무형자본(intangible capital)의 비중이 커졌으며, 토지와 광물 등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비중이 미약해짐.

< 소득수준에 따른 국부의 원천 비교 (2000년 기준) >



자료 :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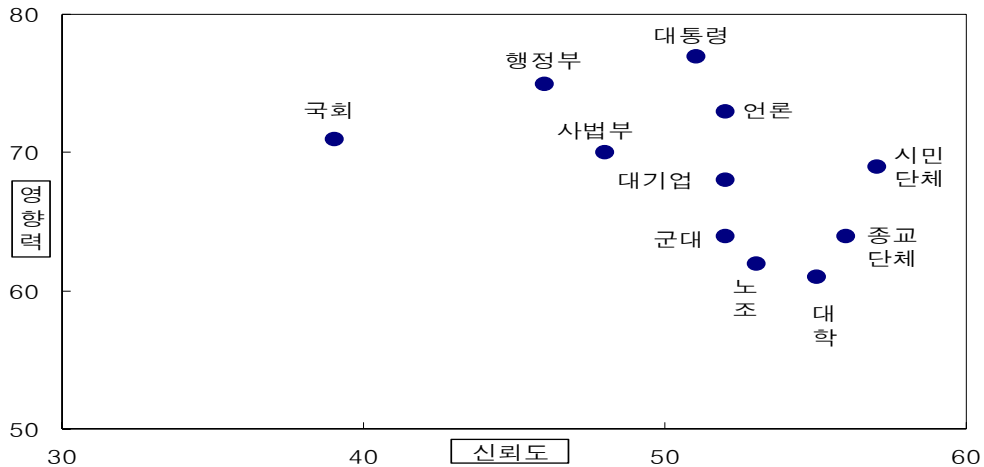
주 : 고소득국=OECD회원국, 생산자본(produced capital)=기계, 장비 등.

79) 사회적 자본은 “일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 자산”으로서, “신뢰, 규범, 제도,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제반 사회관계적 자산”이라고 정의됨. 국가경쟁력과 國富(wealth of nation)를 높이는 무형의 가치로 평가되며, 국격(國格)이나 국가매력도와도 직결됨.

80)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 2005년 연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행정부, 사법부, 대통령 등 영향력이 큰 기관일수록 신뢰도가 낮게 나타남. 신뢰, 법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부족하고, 연고주의, 부패, 사회 갈등이 심각함을 보여줌

< 주요 기관의 신뢰도와 영향력⁸¹⁾ >



자료 : 한국일보 2005년1월28일자 기사, '광복 60주년 여론조사(한국사회 신뢰도)'.
 주 : 척도는 100(최고)에서 0(최저).

- 우리의 사회통합지수⁸²⁾는 OECD 회원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이며,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90년 10위에서 '07년 19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
- 사회통합지수는 2007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26위로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밑에서 3번째이며, '90년 24위, '00년 25위, '05년 27위로 하위권에서 정체
 - 사회통합지수 중 사회적 자본의 순위는 '90년 10위에서 '07년 19위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경쟁력도 '90년 27위에서 '07년 22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며, 복지/분배가 30위로 가장 열악한 상황
 - 성장동력지수가 '90년 22위에서 '07년 14위로 꾸준히 개선되는 것과 반대
- '90년대 이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선진국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표준화 노력, 선진국과 우리의 준비 현황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함

81) 기관(영향력; 신뢰도) = 대통령(77;51), 행정부(75;46), 언론(73;52), 국회(71;39), 사법부(70;48), 시민단체(69;57), 종교단체(64;56), 군대(64;52), 노조(62;53), 대학(61;55).

82) 박명호(2009),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표자료 (2009.11.18).

□ 세계화로 인한 갈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자본

- 세계 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이슈를 야기하면서, 19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제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됨
-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 노동력의 이동성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확대 등으로 정부가 다국적 기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어려워짐
-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대와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증가된 영향력에 부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⁸³⁾의 만족을 요구하게 됨

< 세계화, 위기, 사회적 책임 >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와 표준화의 배경에는 환경, 인권, 빈부격차, 노동, 지배구조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해결 과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활동은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됨
- 'ISO 26000(SR)'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 등 각종 조직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⁸⁴⁾에 관한 원칙, 주제, 이슈에 관하여 2010년 말에 도입 예정인 표준화된 지침(guidance)
- ILO, OECD, UN, EU 등 40여개 국제기구와 80여개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환경, 노동, 지역사회 등 7가지 핵심 주제에 관하여 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작업해 옴

83)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주주(shareholder)뿐만 아니라 고객, 종업원, 노조, 언론, 금융기관, 협력업체, 정부, NGO/시민단체, 지자체 등을 포괄함.

84) Carroll(1991)에 따르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을 포함하여 법률 준수(법적 책임), 윤리적 기준 준수(윤리적 책임), 지역사회 공헌(재량적 책임) 등 4가지 사회적 책임을 지님.

- 2001년4월 ISO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04년9월 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05년3월부터 '09년5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SR 작업반 총회가 개최되었음
- 2010년4월 스톡홀름에서 제8차 마지막 SR 작업반 총회가 개최된 후 회람과 투표를 거쳐, 2010년 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임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SR)' 추진 경과 >

시기	내용
2001.4	ISO이사회에서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에 CSR에 대한 표준개발 검토 요청
2002.9	ISO이사회에서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전략자문그룹 구성
2004.6	ISO기술관리부(TMB)가 SR 가이드라인 표준개발을 처음 결정
2004.9	ISO기술관리부(TMB) 산하 작업반 구성(브라질, 스웨덴 의장국)
2005.1	ISO26000 개발이 공식 시작(회원국 中 29개 찬성, 4개 반대)
'05.3 ~ '07.11	ISO의 SR 작업반 총회 개최 ('05년3월 1차 살바도르, '05년9월 2차 방콕, '06년5월 3차 리스본, '07년1월 4차 시드니, '07년11월 5차 비엔나) '08년9월 6차 산티아고, '09년5월 7차 퀘벡
'09.10 ~ '10.3	국제표준안(DIS) 회람 및 투표
2010.4	제8차 ISO SR 작업반 총회 개최 (스톡홀름, 최종)
'10.6 ~ '10.8	최종 국제표준안(FDIS) 회람 및 투표 → 2010년 말 최종 'ISO 26000(SR)' 발간 예정

- 2010년말 'ISO 26000(SR)'의 도입은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는 선제적 대처를 통해 이를 극복함은 물론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2010년에 도입 예정인 'ISO 26000(SR)'의 서문에 따르면, 자발적 준수 사항으로서 '의무 조항'이나 '인증'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 ISO-9001(품질경영원칙)이나 ISO-14001(환경경영원칙)의 사례에 비추어, 'ISO 26000(SR)' 역시 선진국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전환될 것임
 - 2009년 무역의존도가 82.4%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ISO 26000(SR)'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SR) 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기업, 정부, 시민단체, 노조 등 모든 조직의 신뢰와 상호 협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확충의 계기를 삼는 것이 필요함

(2) 'ISO 26000(SR)'의 배경과 특징, 주요 내용

□ 'ISO 26000(SR)'의 3가지 추진 동력(driving forces)

- 기업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아우르는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동규범의 통합적 표준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정보공개 요구 등 3가지 방향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이후 ①UN,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표준 통합, ②연기금과 자산운용회사 등의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 ③투자회사와 NGO/NPO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공개 요구의 강화 등 3가지 방향에서 'ISO 26000(SR)'이라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음

< 'ISO 26000(SR)'의 3가지 추진 동력(driving forces) >

유형 (영향)	주체	형식 (사례)
① 표준 통합 (경영 전반)	UN Global Compact, ILO, EU, OECD, ISO 등	국제표준과 가이드라인의 통합 노력 (ISO 26000(SR), UN Global Compact 등)
② 사회책임투자 (주가, 자금조달)	연기금,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직접 투자 및 간접 투자 (DJSI, UN PRI, Equator Principle 등)
③ 정보 공개 (기업 이미지)	투자회사, 소비자단체, 국제기구 등	각종 보고서 작성 (GRI 보고서 가이드라인(G3), 환경보고서 등)

주 : 유형에 표시된 ()는 3가지 추진 동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를 예시한 것임.

① 국제기구의 표준 통합 움직임

-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의 통합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00년을 전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 EU,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고 규범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시작되던 때에는 대상을 기업에 한정했으나, 2004년 이후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할 의무를 지는 조직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함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책임 표준화 노력 >

이니셔티브	분야	운영 주체	성격
유엔 책임투자원칙 (UN PRI)	사회책임투자 (SRI)	UN	자발적 원칙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UN	자발적 원칙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환경	UN	지원 프로젝트
환경배려 경제연합(세리즈) 원칙 (CERES Principles)	환경	NGO/NPO	자발적 원칙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CGP)	기업 거버넌스	OECD	자발적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MNEs Guideline)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OECD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 보고서 (정보공개 및 평가)	NGO/NPO	가이드라인
적도 원칙 (Equator Principles)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국적 투자은행(IB)	가이드라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환경	금융기관	자발적 원칙
설리번 원칙 (Sullivan Principles)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NGO/NPO	자발적 원칙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ISO 26000(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ISO (국제표준화기구)	가이드라인

자료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2008), p.82.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SR)으로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아울러 관련된 표준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비자, 협력업체, 노조, 환경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만족과 신뢰 형성을 위해 필요한 모범적 행동 규범, 즉 CSR이라는 틀을 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SR)으로 확대
- ISO는 2005년 국제노동기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06년에는 UN Global Compact와 2007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MOU를 체결하여, 'ISO 26000(SR)'이 범세계적 사회운동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이처럼 ILO, UN, OECD, GRI, UN GC, UN PRI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을 'ISO 26000(SR)'에 통합하여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② 사회책임투자(SRI)⁸⁵의 활성화

○ 1990년대 들어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 책임의 성과를 함께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투자 대상을 선별(screening)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회책임투자(SRI)가 활성화되고 있음

- 각국의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사회책임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재무적 성과는 물론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까지 평가하여 장기 투자하는 것이 다른 투자에 비해 수익률도 높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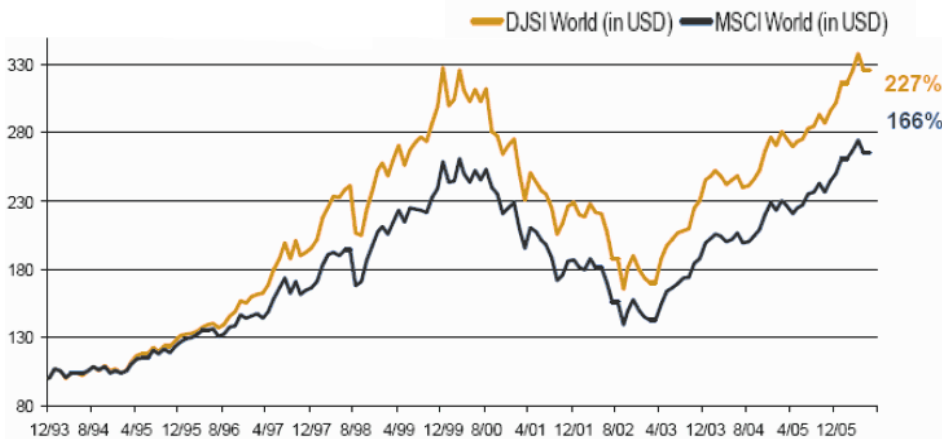
< 세계 각국의 사회책임투자(SRI) 규모 >

(단위 : 10억 유로, 2007년 말)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일본	합계
2,665.4	1,917.3	333.6	41.4	5.5	4,963.2

자료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거래소의 '09년9월9일자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 다우존스 SRI펀드(DJSI)와 일반 펀드(MSCI)의 수익률 비교 >



자료 : www. sustainability-index.com..

85) 세계 최초의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는 1928년 미국의 금주운동 그룹이 주도하여 만든 'Pioneer Fund'였으며 주류 및 담배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으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못했음. 현대적 의미에서의 SRI펀드는 1971년 미국에서 베트남전쟁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한 'Pax World Fund' 였음.

- 국내에서는 2005년 SRI펀드가 처음 설립되었고, 2007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으며, 규모도 1조원에 못 미침
- 2009년 9월14일 한국거래소(KRX)가 삼성전자 포스코 등 SRI평가 우수기업 70개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SRI 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기도 했음.

< 국내의 연도별 SRI펀드 설립 추이 >

(단위 : 개, 억 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펀드 설립	1	7	21	1	2	32
설정액	642	2,206	4,529	7	96	7,480

자료 : 한국거래소(www.krx.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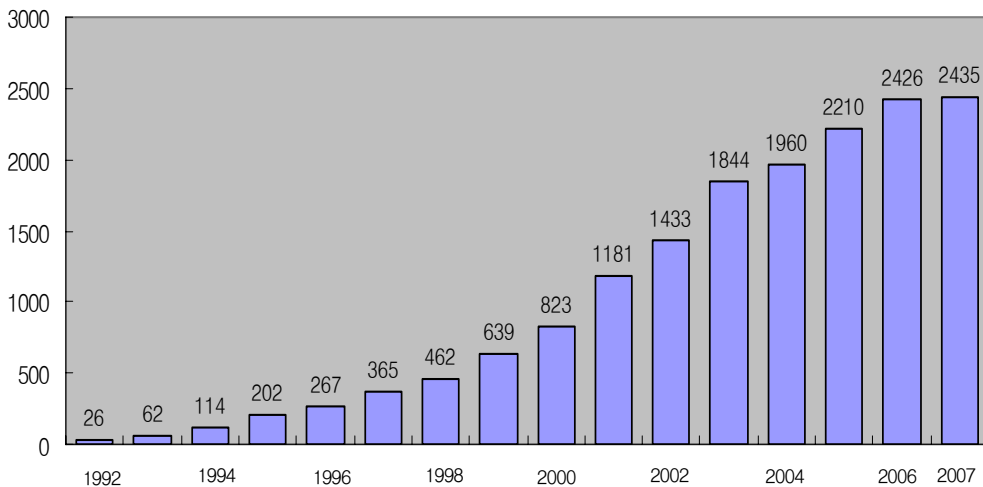
- UN PRI(책임투자원칙)는 UNEP, UN Global Compact가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들의 투자와 자산운영에 있어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이슈를 고려토록 권장하는 사회책임투자(SRI)의 6가지 원칙 (33개 실천프로그램 포함)
 - 코피아난 UN 사무총장과 UNEP(유엔환경계획), UN Global Compact가 중심이 되어 2006년 4월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80여 개의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UN PRI에 서명함.
 - 제1원칙 :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時 적극 반영한다
 - 제2원칙 : 투자 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 투자자가 된다
 - 제3원칙 :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이슈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 제4원칙 :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원칙 : 우리는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키도록 상호 협력한다
 - 제6원칙 : 우리는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 2007년말 현재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포함 300여 기관이 서명했으며,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영국대학교원연금,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노르웨이정부연금 등 세계적 연기금들이 참여하고 있음

③ 사회책임 활동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

○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회책임(CSR) 보고서 등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홍보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연기금과 SRI지수 운용 기관, SRI펀드를 운용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정보 공개 및 보고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1992년 이후 2008년 2월 현재까지 전세계 105개국의 4,185개 기업들이 총 16,127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92년 26개에서 '07년말 2,435개로 크게 증가했음
- 국가별로는 영국이 '08년2월말 기준으로 총 2,500여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가장 활발했으며,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의 순

< 세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추이 >



자료 : www.corporateregister.com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2008), p.75에서 재인용).

- 국내에서도 CSR보고서, 환경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03년 4개에서 '08년 49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10월말 현재 보고서를 1회 이상 발간한 기업은 모두 74개임

○ GRI⁸⁶⁾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평가는 경제적 성과는 물론 환경, 고객, 노동, 인권, 반부패, 공정경쟁 등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로 구성됨

- '97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의 하나인 GRI는 2000년, 2002년, 2006년 총 3회에 걸쳐 정보 공개와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아래 표는 2006년 10월 발표된 제3차 가이드라인(G3)의 성과 지표 및 체크리스트
- GRI에서 제시한 제3차 가이드라인(G3)은 현재 세계 주요기업 및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표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 GRI 보고서는 총 141개의 사회적 책임(CSR) 이슈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금융, 물류, 관광, 통신, 자동차산업 등은 별도로 해당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G3) >

구분	지표	체크리스트 (例示)	
경제적 성과	▷ 경제적 성과	수익, 영업비용, 이익잉여금, 연금 지원액, 보조금,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현지구매 정책, 현지인 채용, 현지인 고위직 비율	
	▷ 시장지위		
	▷ 간접 경제효과		
환경적 성과	▷ 원료 에너지 용수	재생원료비율, 에너지원별 직간접 소비량, 공급원별 취수량, 재사용/재활용 용수의 규모 및 비율, 사업지역의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험도,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온실가스감축 사업 및 성과,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건수 및 유출량, 포장재의 재생비율	
	▷ 생물다양성		
	▷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 제품/서비스, 운송		
사회적 성과	고객	▷ 고객안전, 라벨링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제 위반 건수, 제품정보 및 라벨링 관련 규제 및 규칙 위반건수, 고객만족도 평가, 고객데이터 분실 건수, 고객불만건수
		▷ 홍보, 고객정보보호	
		▷ 법규준수	
	노동	▷ 고용, 노사관계	정규-비정규 현황, 이직 건수, 단체교섭 대상 직원비
		▷ 산업재해	
		▷ 교육훈련	
		▷ 다양성과 기회	
	인권	▷ 차별금지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아동노동이 발생가능한 사업, 강제노동 근절 위한 조치, 인권정책 및 교육 이수 직원 비율, 현지인 권리침해 건수 및 조치
		▷ 결사 및 단체교섭	
		▷ 아동노동, 강제노동	
		▷ 보안	
	사회	▷ 지역사회	지역사회 프로그램, 반부패 교육 받은 직원의 비율,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 총액, 부당 경쟁행위, 관련 법적 조치 건수와 결과
▷ 부패방지			
▷ 공정경쟁			
▷ 법규준수			

자료 : 최정철(2008).

86) '97년 CERES(환경을 배려하는 경제연합)와 UNEP(유엔환경계획)가 중심이 되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설립했으며, '02년 4월 UNEP의 협동연구센터로서 상설 기관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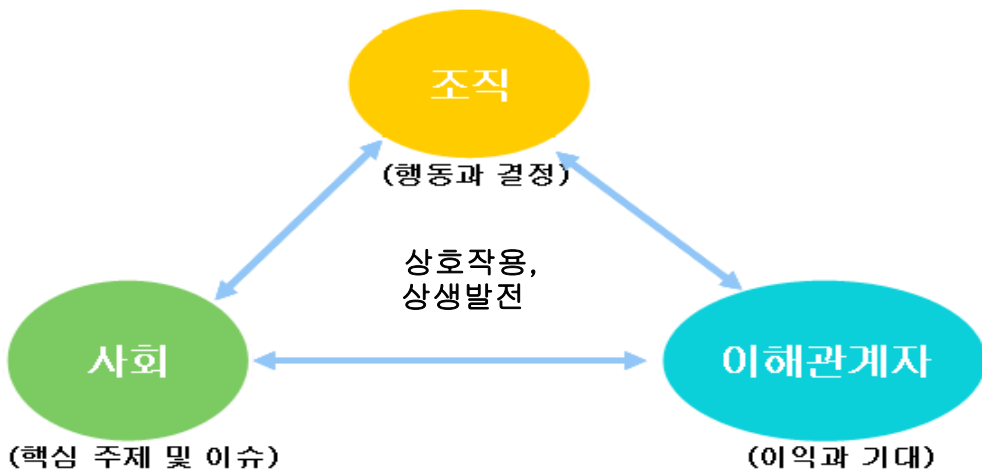
□ 'ISO 26000(SR)'의 특징 및 구성 요소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시

○ 'ISO 26000(SR)'⁸⁷⁾의 첫번째 특징은 (1)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고, (2)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및 공존을 강조하는 다양성에 있음

- 조직은 행동과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둘러싸여 있음을 잘 파악해야 하며, 사회는 조직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세계 시민으로서 모범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이해관계자들은 조직 및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기대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함
- 조직 : 기업, 공공기관, 비정부기구(NGO), 비영리조직(NPO), 시민단체 등
- 사회 : 조직과 이해관계자가 활동하는 지역사회, 국가, 세계 등 다양한 범주의 공동체
- 이해관계자 : 주주, 임직원, 고객, 노조, 협력업체, 경쟁업체, 언론, 금융기관, 시민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를 지닌 관계자와 기관

< 조직, 사회,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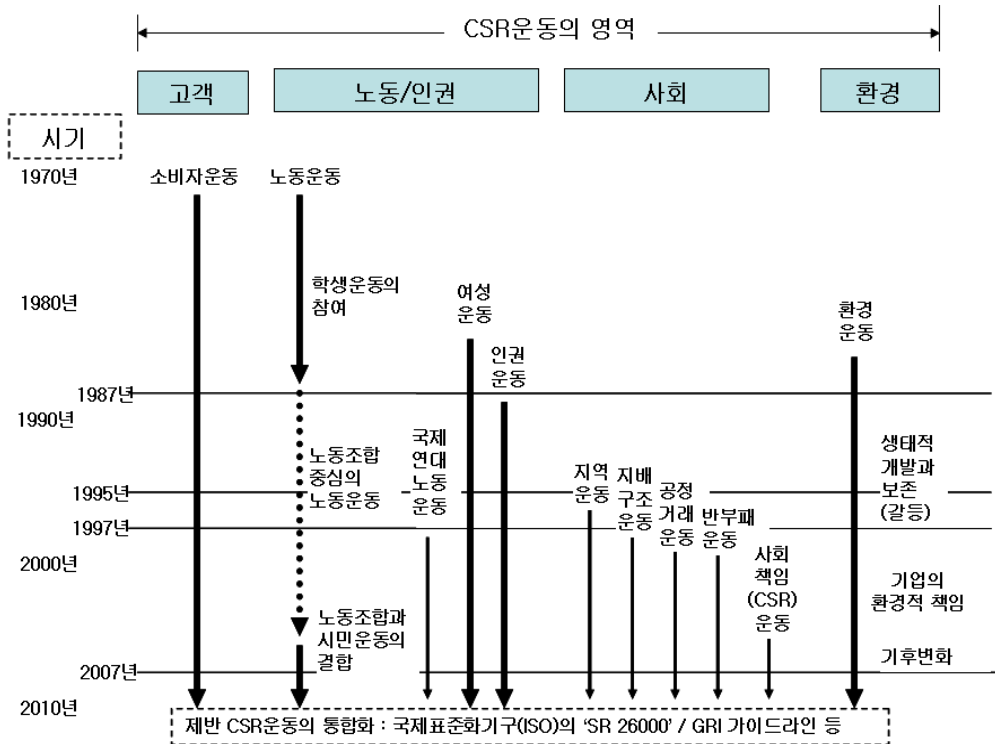


87) 'ISO 26000(SR)'이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7가지 핵심주제(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에 관하여 모든 조직의 활동 원칙과 관련 이슈를 담은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지칭.

② 사회적 이슈의 통합적 해결

- 'ISO 26000(SR)'의 두번째 특징은 인권, 노동, 여성, 소비자, 지배구조, 공정거래 등 다양하게 제기되어 시민운동화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에 있음
- 제1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ISO 26000(SR)'의 도입 배경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권, 노동, 환경, 여성, 소비자, 빈부격차, 지배구조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해결 과정이 자리하고 있음
- 'ISO 26000(SR)'의 7가지 핵심 주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한 통합적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음
- 'ISO 26000(SR)'은 사회복지-환경보호-경제성장이 공존하는 '공동체 자본주의' 등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유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책임(SR) 운동의 통합화 추세 >



자료 : 최정철(2008)을 토대로 재작성.

③ 'ISO 26000(SR)'의 주제, 원칙, 관련 이슈

- 'ISO 26000(SR)'의 7가지 핵심 주제: ①지배구조, ②인권 ③노동관행, ④환경, ⑤공정운영, ⑥소비자, ⑦지역사회 기여

- ISO 26000(SR)의 7가지 핵심 주제는 UN 글로벌 콤팩트의 4가지 지표, GRI 가이드라인(G3)의 6가지 범주, UN PRI의 사회책임투자(SRI)에 관한 3가지 이슈,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책임 원칙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도출한 것임

< 'ISO 26000(SR)'의 7가지 핵심주제와 관련 가이드라인의 통합 >

ISO 26000(SR) 7가지 주제	GRI 가이드라인 6가지 범주	UN 글로벌콤팩트 4가지 지표	UN PRI 3가지 이슈
① 지배구조	① 경제		③ 거버넌스(G)
② 인권	⑤ 인권	① 인권	② 사회(S)
③ 노동관행	④ 노동	② 노동	
④ 환경	② 환경	③ 환경	① 환경(E)
⑤ 소비자	③ 고객		
⑥ 공정운영		④ 반부패	
⑦ 지역사회	⑥ 사회		

- 'ISO 26000(SR)'의 7대 원칙: ①설명 책임, ②투명성, ③윤리적 행동, ④이해관계자 존중, ⑤법규 존중, ⑥국제행동규범 존중, ⑦인권 존중

- ①**설명책임** : 조직은 적절한 수준의 감시를 받아들이야 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음
- ②**투명성** :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활동은 투명해야
- ③**윤리적 행동** : 조직은 항상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인간, 동물, 환경에 대해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 ④**이해관계자 존중** : 조직의 이익이 제한되더라도 이해관계자 이익을 존중
- ⑤**법규 존중** :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 문서로 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으며, 제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는 법률을 존중
- ⑥**국제행동규범 존중** : 국내법이 최소한의 환경적 또는 사회적 보호수단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국제행동규범을 따라야 함

- ⑦인권 존중 :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누리서는 안 됨

○ 'ISO 26000(SR)'과 관련된 원칙, 핵심 주제, 관련 이슈

- 7가지 원칙과 핵심 주제, 관련 이슈⁸⁸⁾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ISO 26000(SR)'의 7가지 원칙과 핵심 주제, 관련 이슈 >

7대 원칙	7대 주제	관련 이슈
- 설명 책임	지배구조	- 사회적 책임을 감안한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 -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 소수 집단 배려 - 양방향 의사소통 구조의 마련
	소비자	- 공정한 마케팅, 공정한 계약 관행,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분쟁 해결, 동물 복지 - 고객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전기 등 필수 서비스의 접근 보장
- 투명성	환 경	- 폐수 및 폐기물의 재활용, 공해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 - 기후변화 대응, 배출가스 삭감, 친환경기술의 개발 - 자연환경의 보호와 복구, 생물다양성
- 윤리적 행동	인 권	- 차별금지와 취약집단 배려 - 인류에 대한 범죄 및 고문 금지 - 인권 위험상황의 관리, 범죄의 공모를 회피, 불만 해소 -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근무관련 기본권리 등
- 이해관계자 존중	노동관행	- 채용시의 차별금지, 고용조건, 고용관련 기본권리 - 고용시의 보건안전, 단결권, 단체교섭권, -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 비정규직의 기준, 개도국 협력업체의 아동노동 금지
- 국제행동 규범 존중	공정운영	-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 - 부패방지, 책임 있는(투명한) 정치 참여, 공정 경쟁 - 개도국에서의 약탈적 임금 및 약탈적 구매가격 금지 -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예: 조달청의 녹색구매)
- 인권 존중	지역사회	- 지역공동체에의 참여,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과 지역문화 기여 -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창출과 능력개발, 기술개발 - 재산과 소득의 창출, 지역주민들의 보건, 지역에의 재투자

□ 'ISO 26000(SR)' 관련 사업의 유형과 규모

○ 2010년 'ISO 26000(SR)'의 국제표준화 흐름에 따라 관련 사업도 커질 전망

- 'ISO 26000(SR)'의 도입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임직원 교육, 컨설팅, 인증, 보고서 작성 및 검증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업이 형성될 것임

88) 각 주제와 이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한 <참고 4>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표준(ISO9001)과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ISO 14001)의 사례에 비추어, 'ISO 26000(SR)'의 인증기업은 2020년까지 국내에서 약 3만개, 해외에서 약1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대기업 1,500개(5%), 중기업 3,000개(10%), 소기업 25,500개(85%)]
- 'ISO 26000(SR)' 관련 사업의 규모는 2020년까지 약 7천억 원 정도로 예상
 - 매년 발행하는 인증 및 보고서 분야에서 2020년까지 3,110억 원⁸⁹⁾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20년 이후에는 매년 1,000억 원의 시장이 될 것임
 - 1회성 사업인 SR관련 컨설팅 시장은 '20년까지 약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됨
 - 아래 표에 따르면, 기존의 'ISO 14001'과 'ISO 9001'에 비해 훨씬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ISO 26000(SR)'의 인증기업 및 관련 사업규모 추정 >

(단위 : 개, 억 원)

	인증기업 수		인증 및 보고서 발행사업	컨설팅 사업			
	국내	세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계
사회책임경영 (ISO 26000(SR))	3만	100만	3,110	1,500	1,200	1,275	3,975
품질경영 (ISO 9001)	5만	100만	1,000	500	1,125	900	2,525
환경경영 (ISO 14001)	1.5만	20만	300	150	337	270	757

자료 : ISO 서베이 자료(www.iso.org)에 기초하여 재작성.

1. 품질경영과 환경경영 인증은 대-중-소기업 비율이 각각 1%, 9%, 90%이지만, 사회책임경영은 대기업과 중기업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각각 5%, 10%, 85%로 추정
2. 컨설팅 금액은 개략적으로 대기업 1억원, 중기업 4,000만원, 소기업 500만원을 가정. 단, ISO 9001과 14001의 경우에는 각각 1억원, 2,500만원, 200만원을 가정.
3. 인증/보고서 발행은 기업당 평균 300만원 (단, ISO 9001과 14001은 200만원) 가정.

- 참고로,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ISO-9001의 경우에도 인증과 보고서 검정 분야에서 매년 1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컨설팅 분야에서도 2천5백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 바 있음

89) 인증기업이 2010년 50개, '13년 1천개, '15년 3천개, '18년 2만개, '20년 3만개로 늘어나고, 1기업당 인증 및 보고서의 신규 발급, 검정, 갱신을 위해 해마다 평균 3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고 도출한 금액임.

-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정부 보고서 발간 (2001)
-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의 BitC (Business in the Community) 민간조직 후원

□ EU : 이해관계자 중시의 유럽식 기업문화와 사회적 책임(SR) 확산

○ EU는 주주, 노동자, 정부, 고객, 언론,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는 유럽식 기업문화 속에서 SR의 확산과 제도화에 앞서가고 있음

- 유럽연합(EU) 차원에서 CSR 그린페이퍼 발간('01.7), CSR 다자간포럼 설립 ('02.10) 등을 통해 표준화된 SR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연례 보고서 작성지침('04.10), SR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발표
-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연금펀드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 사회·환경적 성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EU 주요 국가별 사회적 책임(SR) 확산 현황 (영국 제외) >

국가	준비 현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년 노동조건 보고서 제출 의무화 - '01년 회사법 개정: 재무-환경-사회보고서 제출 의무화 - '01년 신경제규제법 제정: 재무보고서에 사회-환경 영향 의무화 - '02년 CSR장관 임명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 환경보고서 법제화 - '02년 CSR지식센터(관련 정보제공 및 협력 사업) 설립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유럽연합 최초로 환경보고서 법제화 - '02년 경제부 장관이 '기업윤리보고서' 발표 - '94년부터 복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시작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년 연기금 운용회사에 윤리, 환경, 사회보고서 제출 의무화 - UN 글로벌콤팩트 러닝포럼 후원 - '03년 교육부장관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지식 향상 캠페인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 환경보고서 법제화 - 연기금 SRI 법제화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I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 'CSR 오스트리아 이니셔티브' 설립 ('02년) - CSR 가이드라인 제정 및 CSR상 수상

□ 미국 : 국내 법규 및 판결지침 정비를 통한 사회적 책임(SR) 강화

○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사적 전통에 따라 윤리경영, 투명회계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주요 법규 및 판결지침 정비 사례

- 해외 부패방지법 (1977)
- 기업윤리 행동원칙 (1986)
- 부정청구법 (1986 개정)
-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법 (1989)
- 조직의 범죄에 대한 연방판결 가이드라인 (2004 개정)
- 증시상장시 윤리경영 의무화 (2001)
- 기업회계.투자보호법 (Sarbanes-Oxley Act): 2001년 엔론.월드콤 회계부정 사건 이후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강화 및 CEO/CFO 처벌 강화(최장 20년형)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사회적책임투자(SRI) 활성화 추진: SRI펀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펀드 규모는 '84년 약400억 달러에서 '03년 약 2조 1,640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 펀드시장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SRI지수 :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와 Domini 400 Social Index

□ 일본 :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전통과 사회적 책임 관련 제도 정비

○ 일본은 지역사회에의 참여, 종신고용, 환경문제의 해결과 같은 오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종업원,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에 주력하고 있음

- '97년, 유력기업 7개사의 주도로 경영윤리실천 연구센터를 설립
- '02년말, 경제산업성과 경단련이 중심이 되어 CSR 표준위원회 구성
- '04년4월, 경제산업성 기업행동과를 사무국으로 하는 'CSR 간담회' 출범

□ 중국 :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적극적 수용으로 전환

○ 중국은 처음에는 '선진국의 무역장벽'이라며 비판하다가,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 자세로 전환.

- 중국기업의 CSR 가이드라인 제정 ('06)
- '회사법'을 개정하여 CSR 관련 조항을 명시 ('06)
 - 회사법 제5조에 "회사는 경영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공도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 (중략)...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 '신노동법'을 개정, 시행 ('08)
 - 노동자 보호조항(종신고용, 파견근로 종료 시의 경제적 보상 등)을 삽입
-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

□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 비관세장벽, 그리고 사회적 자본 형성

○ 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수습되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인 'ISO 26000(SR)'은 비관세장벽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것임

- ISO 26000(SR) 서문에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을 형성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이 될 것임
 -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강화된 사회적 책임(SR)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자기들의 제품이, 그렇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또한, 1차 상품을 파는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공정운영'의 Fair Sharing 이슈(약탈가격에 의한 구매 금지)로 인해 현재의 약탈적 판매가를 올려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ISO 26000(SR)'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책임(SR) 활동이 활발한 유럽과의 교역 및 사업에 필수적인 이행지침이 될 것으로 보이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입찰이나 국제 주식 시장 상장에서 SR 표준의 준수와 관련 인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면, 품질경영에 관한 ISO 9001 인증의 경우에도 의무적이진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100만 이상의 조직이 가입하여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음

○ 선진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다국적기업들은 선도적으로 'ISO 26000(SR)'을 비롯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약속⁹⁰⁾하고 있는 바, 이들과 경쟁하려는 우리 기업들도 'ISO 26000(SR)'의 도입이 불가피

- 선진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등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ISO 26000(SR)'을 지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공표

- 'Fortune Global 500'에 속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사회책임투자(SRI) 그룹과 UN Global Compact, OECD와 ILO, 각종 NGO 등의 요구를 받아, 'ISO 26000(SR)'을 지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헌하겠다고 약속함

- Fortune Global 500기업의 협력업체는 물론 선진국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들도 'ISO 26000(SR)'을 지키라는 압력 하에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은 도태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에서 'ISO 26000(SR)'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와 선제적 대응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 형성과 협력 증진을 통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⁹¹⁾을 확충하고 國格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ISO 26000(SR)'에서 강조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등 7가지 원칙과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등 7가지 핵심 주제들은 신뢰, 협력, 법규 준수, 제도화 등 무형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규범, 제도,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ISO 26000(SR)'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적 행동규범이 강조되어야 함

- 최근 출범이 확정된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음

90) 송준일(2009)의 내용을 참고.

91) 사회적 자본은 "일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 자산"으로서,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을 포괄하는 제반 사회관계적 자산"(우천식 외(2007), pp.2-3).

(4) 국내의 'ISO 26000(SR)' 준비 현황과 과제

□ 국내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 '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는 등 'ISO 26000(SR)'의 준비에 앞서 있는 유럽에 비해 우리는 10년 정도 뒤져 있음

- 우리 정부는 '05년 사회적 책임 표준에의 대응을 위한 SR표준화 포럼을 구성했으며, '06년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했고, '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음

< 우리 정부의 사회적 책임(SR) 관련 정책 >

구분*	내용	소관 부처
시상 및 격려 (Endorsing)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포상 ('07.1 ~)	지식경제부
협력체계 구축 (Partnering)	- ISO26000 사회적 책임 표준 대응을 위한 SR표준화포럼 구성 ('05)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 CSR포럼 구성 ('07)	중소기업청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Facilitating)	- 윤리경영실태조사('03 ~) 및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지식경제부
	-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 ('07)	중소기업청
	- 사회공헌정보센터 설립 ('07)	보건복지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제공 ('06)	지식경제부
법제화 (Mandating)	- 산업발전법 개정: 지속가능경영활동 종합 시책의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07)	지식경제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0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07)	노동부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07)	환경부
	- 여성, 장애인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법	보건복지부

자료 : 지식경제부(2009).

주 : 세계은행(2002)의 정책분류에 따라 4가지로 유형화.

-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아울러, '07년에 '산업발전법'을 개정⁹²⁾하여, 지속가능경영활동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큰 파급효과는 없음

92) 산업발전법 제9조에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자본 확충과 國格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 'ISO 26000(SR)'은 향후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國格 향상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식경제부와 새로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추진 전략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 기업⁹³⁾,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노력에 동참한다면, 신뢰와 협력, 사회 통합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國格 향상, 선진국 도약에 기여할 것임

① 새로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사회적 책임'을 설정

- 사회갈등의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사회통합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책임(SR)' 전담반을 만들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관련 법령의 재정비와 대안 제시를 담당하도록 함

② 지식경제부 산하에 가칭 '사회책임지식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의 중심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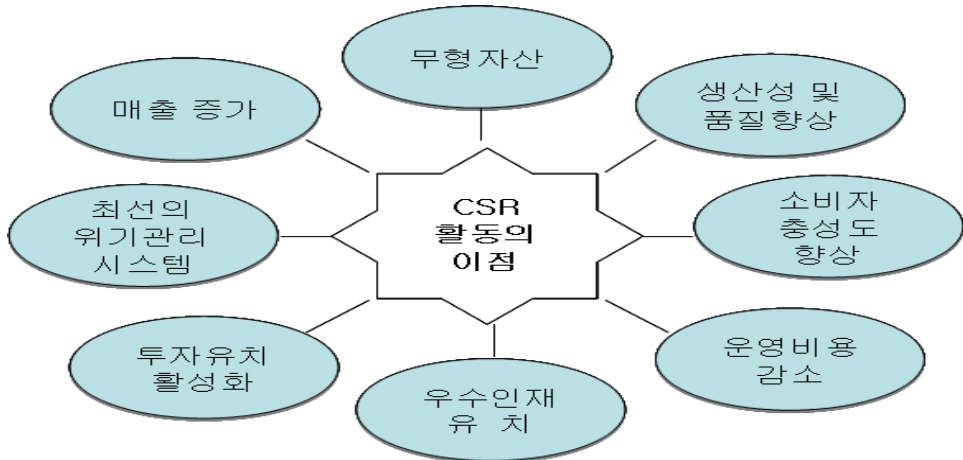
-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정책을 준비해 왔던 지식경제부 내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SR) 관련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림
·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 내에 가칭 '사회책임 지식센터'를 만들어, 관련 기업, NGO, 공공기관, 노조, 지자체 등과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브(Hub)로서 기능하도록 함

③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國格 향상에 기여함

93) 사회적 책임 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소비자의 충성도 향상, 우수 인력의 채용,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경영성과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SR) 활동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ISO 26000(SR)' 등 국제표준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 출범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지식경제부, 경제단체, 언론 등이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SR)' 관련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함

< 사회적 책임(SR) 활동의 긍정적 효과 >



자료 : 산업자원부(2007).

연구위원 김동열 (02-2072-6213)

<참고 1> 해외 주요 SRI지수 현황

국가	지수명	산출/평가기관	평가내용	활 용
미 국	Domini400 Social Index	KLD Research & Analytics(1999)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기준으로 평가 (미국기업 400종목)	ETF상장 (iShare KLD 400 Social/AMEX상장)
	DJSI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DowJones & SAM (1999)	경제·환경·사회 기준으로 기업의 장기 가치 평가 (전세계기업 317종목*)	선물기초자산**
영국	FTSE4GOOD	FTSE & EIRiS(2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 평가	-
독 일	DAX global sarasin - sustainability	Deutsche Börse & Sarasin(2007)	경제·환경·사회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독일지수 : 34종목)	-
남아공	JSE SRI Index	요하네스버그 거래소 & FTSE(2004)	요하네스버그거래소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 평가 (남아공기업 61종목)	-
인 도	S&P ESG India	S&P, CRISIL, KLD (2008)	NSE거래소 상장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인도기업 50종목)	-

자료: 한국거래소('09.9.9)

<참고 >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2009년10월말 현재)

연도	구분	회사명
'03년 (4개)	신규 (4)	기아자동차, 한국다우코닝, 한화석유화학, 현대자동차
'04년 (7개)	신규 (4)	삼성SDI, 포스코, 디아지오코리아, BAT코리아
	기존 (3)	기아자동차, 한국다우코닝, 현대자동차
'05년 (15개)	신규 (9)	대한항공, 롯데백화점, 신한은행, 웅진코웨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현대해상, SK(주)
	기존 (6)	기아자동차, 삼성SDI, 포스코, 한국다우코닝, 한화석유화학, 현대해상
'06년 (25개)	신규 (13)	대우증권, 삼성전기, 삼성전자, 아시아나항공, 유한킴벌리, 한국남동발전, 한국MS, 한국바스프, 한국중부발전, GS칼텍스, KT, LG전자, SK텔레콤
	기존 (12)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롯데백화점, 삼성SDI, 신한은행, 웅진코웨이, 포스코, 한국다우코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BAT코리아
'07년 (43개)	신규 (23)	금호타이어,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대한주택공사, 동부화재, 웅진그룹, 웅진씽크빅, 웅진해피윌, 인천국제공항공사, 풀무원,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한진해운, 현대오일뱅크, 홈플러스, LG화학, STX엔진, 테크노세미켄
	기존 (20)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롯데백화점, 삼성전기, 삼성SDI, 아시아나항공, 웅진코웨이, 유한킴벌리, 포스코, 한국다우코닝, 도로공사, 한국MS, 수자원공사, 한전, 토지공사, 한화석유화학, 현대자동차, GS칼텍스, KT SK에너지
'08년 (49개)	신규 (12)	나노엔텍, 아주그룹, 하이닉스반도체, 한국남부발전, 한전KDN, KT&G, 파워로직스, 현대제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S-Oil, 서울메트로
	기존 (37)	기아자동차, 기업은행, 삼성전기, 삼성SDI, 신한은행, 웅진코웨이, 포스코, 한국다우코닝, 한국MS, 한국바스프, 토지공사,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해상, KT, SK에너지, SK텔레콤, STX엔진, 대한항공, 대구은행, LG화학, GS칼텍스, 유한킴벌리, 가스공사, 풀무원, LG전자,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남동발전, 중부발전, 홈플러스, 삼성전자, BAT코리아, 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09년 (27개)	신규 (9)	삼성물산, 한국관광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아이들과미래, 한미파스스,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교직원공제회
	기존 (18)	기아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수자원공사, LG화학, 신한은행, 삼성SDI, 아시아나항공, SK텔레콤, SK에너지, 현대제철, 포스코, 하나은행, 삼성전기, 대한항공, LG전자, 유한킴벌리,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자료: 전경련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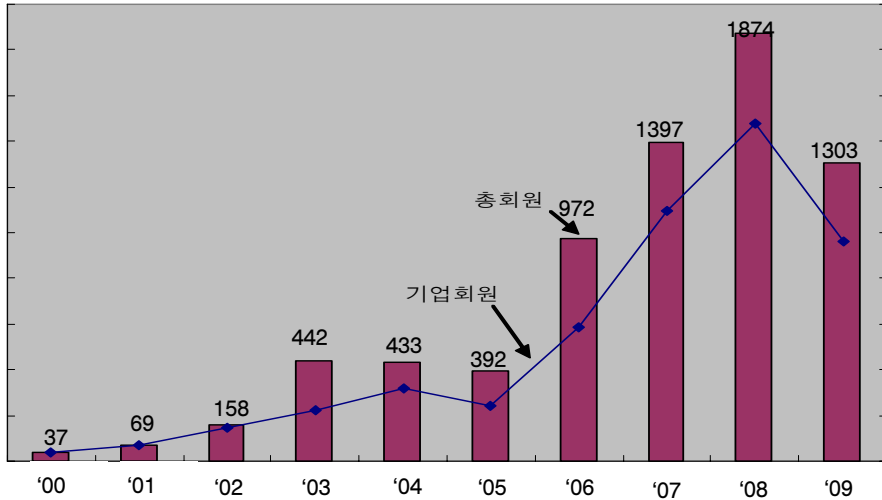
- 주: 1. 지속가능성보고서, 환경사회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 기업시민보고서, GRI등록보고서를 포함
 2. '03년에서 '09년10월말까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1회 이상 (신규) 발간한 기업들의 합은 74

※ '03년부터 '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모두 75건 발간되었으며, 연도별로는 '03년 8건, '04년 13건, '05년 16건, '06년 18건, '07년 20건 (출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2008), p.75)

<참고 3> UN 글로벌 컴팩트⁹⁴⁾의 회원 가입 추이와 10대 원칙

< UN Global Compact 연도별 회원가입 추이 (2009년10월말 현재) >

(단위: 개)



자료: www.unglobalcompact.org

< UN Global Compact 의 10대 원칙 >

인권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 (Lab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하여야 한다
환경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원칙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10: 기업은 부당가격 청구 및 뇌물 등 부패에 대응하여야 한다

94) 'UN Global Compact'란 UN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99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사회의 윤리와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한 이니셔티브.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모범 세계시민들의 조직인 UN 글로벌 컴팩트의 기업회원과 총회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9년10월말 현재 총 회원수가 130여국 7,077개(기업회원 5,160 포함)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SK텔레콤, 하이닉스 등 약 156개의 기관 및 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SK그룹이 2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참여 중

<참고 4> ISO 26000(SR)의 7가지 핵심 주제와 관련 이슈⁹⁵⁾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정의하고 관련 쟁점 사항들을 식별하며 우선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핵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1) 조직의 지배구조

- 사회적 책임의 원칙과 실행이 적용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이사회 및 경영진에 소수 집단(여성, 소수민족, 소수인종, 장애인 등)의 참여를 배려하며,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2) 인권

-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조직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실사(Due Diligence)
- 인류에 대한 범죄 및 고문 금지
- 인권 위험상황의 관리, 범죄의 공모를 회피, 불만 해소
- 차별 금지와 취약집단 배려
- 시민권과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근무 관련 기본권리

3) 노동 관행

- 고용 및 고용 관계 : 완전하고 안전한 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일시적 고용이나 임시적으로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삶의 질과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적 대화 : 노동자 대표는 자유선거를 통해 노동조합원이나 관련된 노동자가 선출한다.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배치전환이나 외주화로 협박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자 조직을 구성하거나 참여하려는 노동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 피고용인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의 안녕을 촉진하고, 근로 환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 훼손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생리적, 심리적 능력에 맞는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인적 개발 및 직장 내 교육 :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는 개인의 역량 및 업무 능력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95) 송준일(2009), 한국품질보증원(2009)의 내용을 참고

4) 환경

- 오염 방지 : 대기, 수자원 등으로 오염 물질 방출, 고체 및 액체 폐기물 발생, 대지 및 토양 오염, 독성 위험 화학 물질 사용 및 폐기, 조직의 활동과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한 기타 오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오염을 예방하여 조직의 환경성과를 개선한다.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재생가능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사용한 부분이 다시 보충되는 속도보다 현재의 사용속도가 느리거나 같아야 한다.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 조직의 관리 및 영향권 내에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점차 줄이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 : 과도한 천연자원 수요로 다양한 생물과 서식지가 회복할 수 없는 규모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조직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여야 한다.

5) 공정운영

- 부패 방지 : 부패 및 뇌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조직은 부패의 위험을 파악하고 부패, 급행료, 뇌물, 금품 갈취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 사항을 실행하고 적용하며 개선한다.
- 책임 있는 정치 참여 : 조직은 사회전반에 이득이 되는 정치적 절차와 공공 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수가 있다. 로비, 정치적 공헌,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활동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 공정 경쟁 : 같은 가격에 같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담합, 개발도상국의 1차 산품을 약탈적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 공공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은 구매 및 조달 결정을 통해 가치사슬의 다양한 조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재산권 존중 : 원주민과 같은 특정 집단의 전통적 지식이나 고용인의 지적 재산권과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권리들도 이에 포함된다.

6) 소비자

- 공정 마케팅, 정보와 거래 관행 :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보장 : 소비자가 지시받은 대로 이용하거나 소비를 했을 때 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오용하였을 때도 안전하고 무해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개발의 진행에 맞춰 상품과 자원을 소비한다.
-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분쟁 해결: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소비자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 : 소비자가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그런 정보들을 확보하고 이용하며 저장하는 방법을 제한한다.
-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필수 서비스(예: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와 같은 기본 권리의 보호)
- 교육과 인식 : 교육 및 인식 능력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감을 잘 알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현명한 구매 결정과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지역사회 참여 : 조직이 지역사회에 펼치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조직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제고하여야 한다.
- 교육 및 문화 : 교육은 모든 사회 및 경제개발의 토대가 된다. 문화는 지역사회 및 현 사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고용 창출 및 기술 개발 :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모든 조직들은 규모가 크든 작든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 기술 개발 및 접근성 : 조직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인력 자원 개발과 기술 보급을 촉진하여 특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부와 소득 창출 : 부와 소득의 창출은 경제 활동의 이득이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달려있다. 시민들이 조세 의무에 참여하여 정부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 보건 : 공공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사회적 투자 : 조직이 위생이나 안전한 음용수, 보건, 주택 및 식품 안전 등과 같은 지역의 사회적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제반 시설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3) 남북 상생구조의 구축 - 접경지역개발 사례와 시사점

(1) 접경지역 개념

○ 일반적인 개념

- **접경지역** :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영토적 경계가 되는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지역을 지칭
 - 주권국가의 공간적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 간 영토나 공해를 가르는 경계선에 접한 지역을 의미
 - 접경지역의 경계선인 국경선은 일반적으로 산맥, 하천, 호수 등의 자연적 지형이나 지구의 경도, 위도 등의 인위적인 것을 이용하여 그어지나, 국가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설정되기도 함⁹⁶⁾

○ 한반도의 접경지역

- **DMZ(Demilitarized Zone : 비무장지대, 907km²)** : DMZ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측으로 각각 2km 이내 지역을 의미
 -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비무장지대로 지정되었음⁹⁷⁾
 -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한반도의 DMZ는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로 남아있음
 -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DMZ 내에는 출입이 불가하고, 건축물 건축, 자원 조사 등을 추진할 경우 남북간 협의 및 UN군 사령부의 승인이 필요⁹⁸⁾
 - DMZ의 전체면적은 처음에는 248km×4km=992km²이었으나, 현재는 약 907.3km²로 축소되어 한반도 전체의 0.41%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각각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하여 DMZ가 좁아진 결과이며, 현재 남측은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음
- **민간인통제보호구역(민통선, 1,760km²)**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6) 접경지역은 경계와 맞닿은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경계, 변경, 변방, border, boundary, frontier, periphery, march 등으로 표현됨.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자 함.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 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통일연구원, 2010. p. 9.

97) 성현찬, 『DMZ 일원 자연환경보전 생태관광 추진방향 설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pp. 9~10 참조.

98) 정전협정 제1조 제1항 : “한 개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국간에 한 개의 DMZ를 설치한다. 한 개의 DMZ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5조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내에 민간인 통제구역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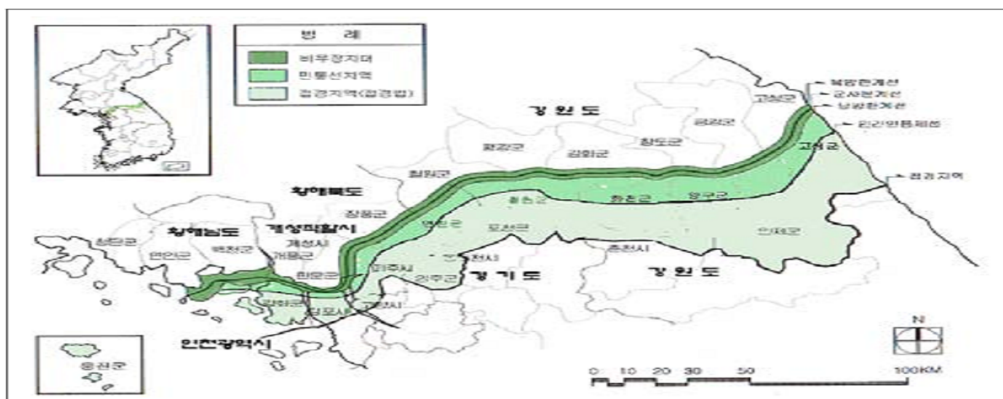
-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배치선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끝섬에서 고성군의 명호리를 잇는 육지 248km와 서해 백령도까지의 해상 약 200km에 설치된 선임
-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

- 접경지역(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총 6,216㎢로 규정)⁹⁹⁾

- 남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 이내의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접경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으로는 인천시 2개 군과 경기도의 7개 시·군, 강원도의 6개 시·군이 포함된 총 15개 시·군이 있음
- 북한 : 북한의 접경지역은 우리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 지역에 민간인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접경지역 개념도 >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2km	10km	접경지역	25km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	2km			
남방한계선	민통선 이북 지역				
민간인통제선	(통제보호구역)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 - DMZ 일원 관광활성화』 20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p. 3.

9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 - DMZ 일원 관광활성화』 20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p. 3.

(2)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의 의미¹⁰⁰): 남북 상생구조의 구축과 관련하여

○ (군사적 의미)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무장지대’의 원래 목적에 따른 안보 유지와 완충 지대의 의미를 가짐

- 상호 감시 체제하의 격리 공간을 뚫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기습 의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
-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치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외곽 지역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치하여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생태적 의미)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 생태계가 인간의 간섭 없이 자기 조절로 복구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지역

-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 67종의 멸종 위기종과 16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⁰¹)
- 접경지역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특히 세계적인 희귀종인 두루미와 저어새 등의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어 국제적 관심이 높음¹⁰²)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접경지역의 생태계 우수지역인 철원철새도래지, 대암산·두타연·해안분지, 향로봉산맥 일대에 생태계보전지역 설치를 제안¹⁰³)

100) 박은진, “DMZ 보전 패러다임의 전환”, 『경기논단』 2008년 봄호, 경기개발연구원, pp. 136~139 및 손기웅, 『DMZ 평화적 이용방안 -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추진방안 -』, 강원발전연구원, 2008. pp. 17~22 참조.

101) 환경부, 『비무장지대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국정브리핑 보도자료 2005. 8. 25일자 참조.

102) 미국 DMZ 포럼, 터너재단, 국제두루미재단 등의 국제 그룹과 학계가 DMZ 연합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은진, “DMZ 보전 패러다임의 전환”, 『경기논단』 2008년 봄호, 경기개발연구원, p. 134. 참조.

10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 1997, pp. 18~23. 참조.

< 접경지역의 생물 다양성 >

구분	서식 동식물 종수		DMZ 일대 비율(%)	비고
	남한 전체	DMZ 일대		
유관속 식물	3,161	1,170	37	고유종 41종, 희귀종 40종
어류	135	83	61	고유종 18종
양서류	15	10	66	
파충류	29	13	48	
조류	383	해안 34, 서쪽해안 101, 중앙 56, 해안 51		멸종위기종 :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두루미, 재두루미, 개리, 청다리도요사촌, 황새
포유류	76	51	67	

자료 : 박은진, “DMZ 보전 패러다임의 전환”, 『경기논단』 2008년 봄호, 경기개발연구원, p. 134. 참조.

○ (경제적 의미)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단절시키면서 남북간 물적, 인적 교류를 단절시켰으며, 반도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왔음

- DMZ는 한반도의 중심 허리를 단절시키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산업과 사회, 문화를 단절시키고 있음
- 한편,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동북아 경제권 배후 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높은 경쟁력 보유

○ (역사적 의미) 세계에 마지막 남은 동서 냉전의 산물이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야생의 낙원으로 변화해 온 세계사적 유물로 평가

- DMZ 내에는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파괴가 있었으나 그 자체가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음
- DMZ는 선사시대의 유적은 물론이고 삼국시대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격전지로, 후삼국시대에는 공예의 유적지로, 한국전쟁의 격전지였음
- 고려와 조선시대를 특징짓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융합된 지역이기도 함

○ 접경지역 개발 논의 현황

- 이명박 정부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중점과제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일반과제로 포함시킨 바 있음¹⁰⁴⁾
- 그러나 접경지역 개발 논의는 각 부처별·지역별로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음
 - 정부기관별 :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통일부 등
 - 광역단체별 : 인천권, 경기권, 강원권 등
- DMZ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부족하며, 부처별·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충돌 및 중복 문제 발생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통일부 등의 부처에서 관광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는 보호·규제에 초점
 - 부처별·지역별 유사 사업 진행
-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DMZ 일원을 세계적 관광 명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¹⁰⁵⁾

< 접경지역 개발 논의 >

부처별	환경부	- DMZ에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	- 평화·생태지대(Peace & Life Zone, PLZ) 관광 자원화 계획
	행정안전부	- 초광역개발권 구상으로, DMZ 인근 평화적 이용 계획 수립
	통일부	- 남북 평화 화해 협력기지 개발 종합 계획
지역별	인천권	- 북도관광테마파크 조성 -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남북 상생 발전을 위한 나들섬 조성
	경기권	-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 - 녹색성장 전시 및 컨벤션 사업 기반 구축
	강원권	- 평화산업단지 및 평화문화관광 조성 사업 추진 - DMZ 생태탐방타운 및 평화생명동산 사업 추진

104)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2008, p. 14. 대선 공약을 통해 DMZ 생태공원 조성의 의미를 “전쟁과 분단, 대립의 현장”을 “생태계의 생명력을 인류 사회의 평화로움으로 승화시키는 현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밝힘. DMZ 일대(한탄강, 임진강 포함)를 UNESCO 지정 세계생태환경자연유산으로 등록하도록 북한에 제안하며, 세계생태환경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식물 서식지를 자연 그대로의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할 것을 주장. www.hannara.co.kr

10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 - DMZ 일원 관광활성화』 2010. 3. 2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 분단국의 접경지역 개발 사례

① 중국-대만 사례 : 특구 개발

○ 접경지역의 특구 개발을 통한 점진적 교류·협력 확대

- **접경지역** : 중국의 푸젠성(福建)과 대만의 마주(馬祖), 진먼(金門)섬이 가깝게 위치하여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임
 - 중국의 푸젠성 샤먼과 대만의 진먼은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가 2km에 불과해 불법 왕래와 밀수가 빈번히 일어나던 지역으로, 군사지역으로 분류되어 대만 본섬 주민도 진먼섬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음
- **소삼통 정책** : 대만은 2001년 1월 1일부터 진먼섬, 마주섬, 평후제도 등 3개 섬과 중국 푸젠성 연해도시들과의 선박 및 항공기 직항 등에 대한 3통을 시험적으로 허용
 - 3통은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전면적인 직접교역인 통상(通商), 수송을 하는 통항(通航), 서신왕래를 하는 통우(通郵)를 의미하며, 2008년 12월 15일 본격적인 3통 시대 개막
- 푸젠성의 샤먼 경제특구와 대만기업투자구에 대한 대만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등, 간접적인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접경지역의 군사적·정치적 위협이 줄어들¹⁰⁶⁾

○ 중국의 푸젠성 특구 개발

- 푸젠성은 對대만 경제협력에 있어 제일 먼저 개방된 지역으로, 1981년 대만기업의 투자가 시작

106) 장윤정, 『홍콩·대만·중국의 상호접경지역 협력사례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8. pp. 93~122 참고.

- 중국은 1980년 8월 ‘광둥성 경제특구조례’를 비준하여,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와 푸젠성의 샤먼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
- 이에 따라 對 대만 경제 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푸젠 지역을 선정, 1989년 5월 푸조우, 하이창, 싱린 대만기업투자구 설립을 비준, 1992년 12월 지메이 대만기업투자구를 추가 설립하여 총 4곳의 대만기업투자구 설립
- 2004년 3월 샤먼시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싱린 투자구는 지메이와 통합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한층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됨

○ 대만의 리도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

- **리도건설조례** : 대만 정부는 2000년 4월 5일 ‘리도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군사 제한 지역으로 개발은 물론 대만인의 출입조차 어려웠던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기반을 마련
- 동 법의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먼과 마주섬의 개발이 가능함과 동시에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불법적인 왕래와 상거래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금지되어 있던 중국인의 진먼, 마주지역 방문과 상업행위를 허가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연과 혈연으로 맺어져 있던 양 지역의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음
- **주요 내용** : 진먼, 마주 지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제10조), 해당 지역의 적절한 개발을 위해 해마다 군사시설 존재 여부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군사시설을 이전하도록 규정(제11조)
-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離島개발건설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양 지역 주민은 타 법에 구애받지 않고 양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② 동서독 사례 :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개발

○ (접경위원회 구성) 동서독은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과 방문 및 주민들의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해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 추가의정서를 통해 접경위원회를 구성

- **접경위원회** : 동서독간 경계선 확정 뿐 아니라, 분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 논의
 - 자연재해방지, 수자원관리, 환경오염, 국토의 이용, 도로망 연결 문제 등을 토의하고, 이에 대한 협정을 체결
 - 국경지역 14개 지부에 국경정보교환소를 설치·운영하고,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대편 국가에 상주대표부 설치

- **국경지역에서의 공동 재난 방지에 관한 협정 체결(1973. 9)** : 국경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홍수,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폭발물 등의 사고 발생시 공동 대처
 - 상대편 지역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¹⁰⁷⁾
 - 1985년에는 국경 통과를 위한 10개의 도로, 8개의 철도, 2개의 내륙 운하, 3개의 항공로를 허용

○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호지구 샬제) 구 동서독 접경지 북쪽의 '샬 호수(Schaalsee)'를 중심으로 펼쳐진 샬제 생물권 보호지구는 독일의 북쪽에 위치

- **구 동서독간 국경지역의 그뤼네스 반트** : 구 동서독간의 국경선은 총 1,393km로 사람의 통행이 불허된 지역이었으며, 인적이 드물어 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 전환

107) 구동독 지역의 공장이나 도살장, 목장에서 폐수가 서독 지역으로 흘러들어 하천이나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경우, 동독 측이 비용 문제로 정화 시설을 마련하지 않자, 서독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정화시설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pp. 326~328.

-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내독간 국경선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생태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짐
-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1986년부터 1989년 사이 동서독 정상은 접경지역에 대한 자연보호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 9월 동독의 국립공원 프로그램에 의해 162km²의 면적에 달하는 샬제 지구를 자연공원으로 지정
 - 1998년 7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162km² 넓이의 샬제 지역을 생물권 보호지구로 지정
 - 1992년부터 유네스코의 생물권보호지구 지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2000년 1월 샬제 주변 경관보호지역을 포함한 302km²의 면적에 달하는 지역을 '샬제(Schaalsee) 생물권 보호지구'로 지정
- 샬제(Schaalsee) 생물권 보호지구 : 전체 302km² 면적의 53%인 163km²가 경작지, 55km²(18%)가 산림, 51km²(17%)가 초지, 27km²(9%)가 호수로 구성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 3개 지자체에 연계된 샬제 생물권 보호지구는 관리를 맡고 있는 안내센터인 팔루스(Pahlhuus)를 중심으로 연간 5~6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득 사업을 진행

※ 생물권 보전지역

- 생물권보전지역 : 지정주체는 UNESCO이며, 지정 목적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역사회의 발전, 문화가치의 유지에 있으며,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도 도모하는 것임
 -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성은 핵심지역(Core Area : 절대 보전, 연구 및 학술 활동), 완충지역(Buffer Zone : 핵심지역의 완충 역할, 생태관광), 전이지역(Transition Area :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 농업)으로 구분 관리됨
 -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는 국내법에 의하여 관리, 국제적인 의무사항은 없음
-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요건
 - ①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 ②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있는 지역,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④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지역임
-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현황 : 엘로우스톤(미국), 야쿠시마섬(일본) 등 107개국 553개 지역이 지정
 - 한반도에는 설악산(1982년), 백두산(1989년), 한라산(2002년), 구월산(2004년), 신안 다도해(2009년), 묘향산(2009년) 등 6개 지역 지정(2009년 10월 현재)¹⁰⁸⁾
-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 국경을 접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
 -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 신청한 후에 접경보전지역으로 통합할 수도 있는데, 통합하지 않고 개별 조전지역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 전세계 14개국 8곳에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 체코-폴란드(1992년), 폴란드-슬로바키아(1992년), 프랑스-독일(1998년), 폴란드-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1998년), 루마니아-우크라이나(1998년), 베냉-부르키나파소-니제르(2002년), 모리타니아-세네갈(2005년), 포르투갈-스페인(2009년) 등

③ 예멘 사례 : 접경지원 자원 공동 개발

○ (예멘 접경지역 개발 과정) 1918년 북예멘의 독립 이후 북쪽의 공화정과 남쪽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탕으로, 1972년 9월 국경에서 첫 충돌 발생

- 1차 국경 충돌 후 휴전협정을 체결해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석유가 개발되는 국경 지대에서 남북예멘 군대가 충돌
 -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예멘은 4차례의 각료회담을 개최하였으나, 1988년 3월 이 지역에 양측 군대가 다시 집결하면서 긴장 고조
-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마리브와 샤브와 접경지역에 남북예멘 군대의 중앙 검문소를 설치, 양 지역의 천연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는 원칙에 합의(타이즈 회담, 1988. 4)
- 1988년 5월 4일 '남북예멘 공동합의서'에 의해 마리브와 샤브와 접경 지역 공동 사업 추진을 합의
 - 접경지역 2,200km²에 대한 비무장지대화 및 석유의 공동 개발에 합의
- 1988년 11월 19일, 석유개발과 관련된 남북예멘 장관급회담 개최를 통해 석유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합의
 -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 석유 개발 국영공동회사는 미국·러시아·프랑스·쿠웨이트 등의 회사들과 다국적 조합을 구성해 접경지역의 석유 탐사에 착수
- **공동지리위원회** : 공동지리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공동 투자 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
 - 공동개발지역은 남북예멘의 군사지역에서 제외되며, 남북예멘 석유장관은 개발, 기술, 재정, 운영 절차와 그 밖의 경제적 투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
 - 단, 이 합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간 경계선의 설정이나 국경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에 합의
- 예멘의 석유 매장량은 북예멘 지역에 10억 배럴, 남예멘 지역에 35억 배럴, 남북예멘의 국경지대에 5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
 - 남북예멘은 상호 협력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석유 개발에 따라 예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됨¹⁰⁹⁾

108)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통일연구원, 2010. p. 181.

109)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89.

(4) 접경지역 개발의 시사점과 과제

① 각국의 접경지역 개발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중국·대만 사례** : 양안간 접경지역은 중국 공산정부 수립 후 장기간의 군사 대립을 거쳐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경제적 통일 전략과 대만의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에서 접경지역 특구 개발 진행
 - 경제적 상호 의존도 제고를 통해 경제 교류에서 인적·물적 교류 등 교류 협력 전반에 걸친 활발한 상호 교류로 발전
 - 양국의 상이한 정치 이념과 제도로 갈등을 겪었으나,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정적 교류·협력 추진(중국 : 광둥성 경제특구조례, 대만 : 리도건설조례)

- **동서독 사례** : 서독이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접경지역 지원을 시행하여 동서독간 긴장 완화 및 교류 협력을 촉진
 -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접경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서독간 경계선 획정 뿐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 환경 오염, 도로망 연결 문제 등을 논의
 - 접경위원회는 국경지역 14개 지부에 국경정보교환소를 설치·운영하고,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대편 국가에 상주대표부 설치
 - 특히, 접경위원회를 통해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 이후 생태환경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을 통해 통일 전후의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남북예멘 사례** : 남북예멘은 국경 지역의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접경지역 개발 및 통일 달성
 -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접경 지역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동 개발의 필요에 의해 공동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국의 회사들과 다국적 조합을 구성해 석유 개발 진행

< 분단국 접경지역 개발 사례 >

	중국-대만	동서독	남북예멘
개발 유형	경제 특구 개발	생물권 보전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접경 지역	중국의 푸젠성, 대만의 마주, 진먼섬	국경지역 그뤼네스 반트, 살제	남북예멘 국경 지대
근거 규정	중국 : 광둥성 경제특구조례 대만 : 리도건설조례	동서독 기본조약 및 추가의정서	남북예멘 공동합의서
협력	제도적 지원을 통한 양안간 교류 협력 활성화	접경위원회 설치	공동지리위원회 설치
교통망 연결	샤먼-진먼간 해저터널 또는 다리 건설 계획	국도 10개, 철도 2개, 내륙운하 2개, 항공로 3개	카타비-두라인간 연결 도로 건설
해당국	대만 다소 소극적	동독 소극적	상호 적극적

② 우리나라 접경지역 개발 과제

○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축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이해 관계 조절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 : 중앙정부는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총괄 계획을 주도하면서, 접경지역 개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간의 계획들을 총괄 조정해야 함
 - 동 조정위원회를 통해 남북간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 및 남북간 조정위원회 설립의 발판을 마련
-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 공감대 형성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공유와 이에 바탕한 남북간 접경지역 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 추진
 - 동서독의 접경위원회나 남북예멘의 공동지리위원회와 같은 합의체 구성
- 인천권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 경제 특구 개발 : 개성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특구 개발을 통해 중국·대만과 같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
 - 대만이 특구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 바와 같이, 접경지역 특구 개발은 남한의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추진 가능

- 강원권을 중심으로 한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 : 동서독 접경지역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같은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
 - 기존에 지정된 대부분의 생물권보전지역은 각국에서는 국립공원관련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¹¹⁰⁾, 각국의 관할지역은 각국의 국내법으로 먼저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 후에도 관리해야 함
 -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지구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 특구로 발전할 수 있음

- 경기권을 중심으로 한 태양열에너지 단지 개발 : 남북예멘이 자원 개발의 필요에 의해 접경지역을 개발한 바와 같이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태양열에너지 단지 개발 추진

< 접경지역 개발 방향 및 과제 >

기본 방향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남북 상생 구조 구축
선결 과제	1) 접경지역 개발 조정위원회 구성 : 각 부처 및 지자체 간 계획 총괄 조정 2)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 공감대 형성 : 남북 접경지역 관리위원회 등 합의체 구성
세부 추진 과제	1) 인권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경제 특구 개발 2) 강원권을 중심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 3) 경기권을 중심으로 태양열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단지 개발

선임연구원 이해정 (02-2072-6222)

1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현찬, 『DMZ 일원 자연환경보전 생태관광 추진방향 설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pp. 128~146. 참조.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유 병 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 2072-6305 Fax: (02)2072-622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랜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SMART Learning

SMART Learning 이란 유선환경을 넘어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시간, 장소, 디바이스에 구애 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입니다.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U-Times	HRI 보고서	학술논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신 경제 경영 보고서	백만건 이상의 논문 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